

새로운 사회생활



하 나 원

책 머리에

남과 북의 주민들은 오랜 세월 같은 문화를 공유해 왔으나, 남북 분단이 지속되면서 심화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새터민들은 일상적으로 크고 작은 낯선 문제들에 부닥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법·제도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교재는 새터민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남한 문화와 법·제도, 역사, 지리 등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권의 교재에 문화와 법·제도 등의 다양한 내용을 모두 수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에 새터민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초보적인 내용만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기초로 새터민들 스스로 남한 사회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와 법·제도 등에 빨리 적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1월

하나원장 이충원

목차

1장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

1. 들어가며 / 15
2. 시민적 권리의 발달 / 15
3.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 / 18
4. 민주시민의 생활양식 / 21
5. 맺는 말(새터민의 권리와 의무) / 24

2장 선거제도의 이해

1. 참정권이란? / 27
2. 선거참여의 필요성과 효과 / 28
3. 선거관리위원회 / 28
4. 선거의 기본원칙 / 29
5.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 30

3장 시장경제의 이해

I. 시장경제

1. 시장경제 / 43
2. 상품과 생산 / 47
3. 화 폐 / 49
4. 기업의 목표 : 이윤 / 51
5. 국제무역 / 52

II. 생활경제

1. 가계경제 / 54
2. 소득관리 / 55
3. 합리적인 소비생활 / 57

III. 생활금융

1. 금융에 대한 이해 / 64
2.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 65

4장 한국사

1.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 / 75
2. 한반도의 역사전개(고조선~조선) / 77
3.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 88
4. 현대 한국의 발전 / 95

5장 통일노력과 통일한국의 미래

1. 통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 103
2. 분단 반세기 통일 노력은 어떤 것들인가? / 105
3.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 107
4. 달라진 오늘의 통일환경 여건은 어떠한가? / 110
5. 통일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 114
6. 통일을 위한 준비와 과제 / 115

6장 관련국가의 역사 이해

1. 동북아시아 주변국가의 이해 / 121
2. 사회주의의 전환 과정 / 129
3. 현대의 국제관계 / 136

7장 남한문화의 이해

1. 가치관과 정서에 대한 이해 / 143
2. 남한사람들의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 / 149
3. 연중행사와 관련한 문화의 이해 / 154

8장 이성, 결혼, 가족

1. 성, 사랑, 그리고 결혼 / 159
2. 가부장 가족제도와 변화하는 사회 / 163
3. 평등한 남녀관계와 민주적 가족을 위하여 / 166

9장 생활법률

I. 남북한 법제 비교

1. 남북한 법의 특성 / 173
2. 남북한 사법제도 / 174
3. 법의 필요성 / 175
4. 남북한의 국회 / 176
5. 인권과 법 / 177

II. 국가와 법

1. 국가와 법 / 178
2. 법의 종류 / 180
3. 범죄와 형벌 / 183
4. 사법부 / 184
5. 법과 관계되는 국가기관 / 186
6. 새터민과 국가기관 / 188
7. 서류 작성해 보기 / 188

III. 개인생활과 법

1. 사법(私法)의 발달 / 189
2. 법이 규율하는 개인생활 / 190
3. 분쟁의 해결방법 / 191
4.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 / 192
5. 소유권의 취득시기 / 193
6.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 194
7.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 195
8. 상속 / 196
9. 가족과 친족 / 197
10. 혼인과 이혼 / 198

IV. 새터민과 법

1. 새터민이 겪는 법률문제의 유형 / 200
2. 해외여행 중 주의사항 / 202
3. 다단계 / 203
4. 신용카드와 할부거래 / 204
5. 보증제도 / 205
6. 교통사고 / 206
7. 새터민과 범죄 / 206
8. 알아두면 편리한 기관 /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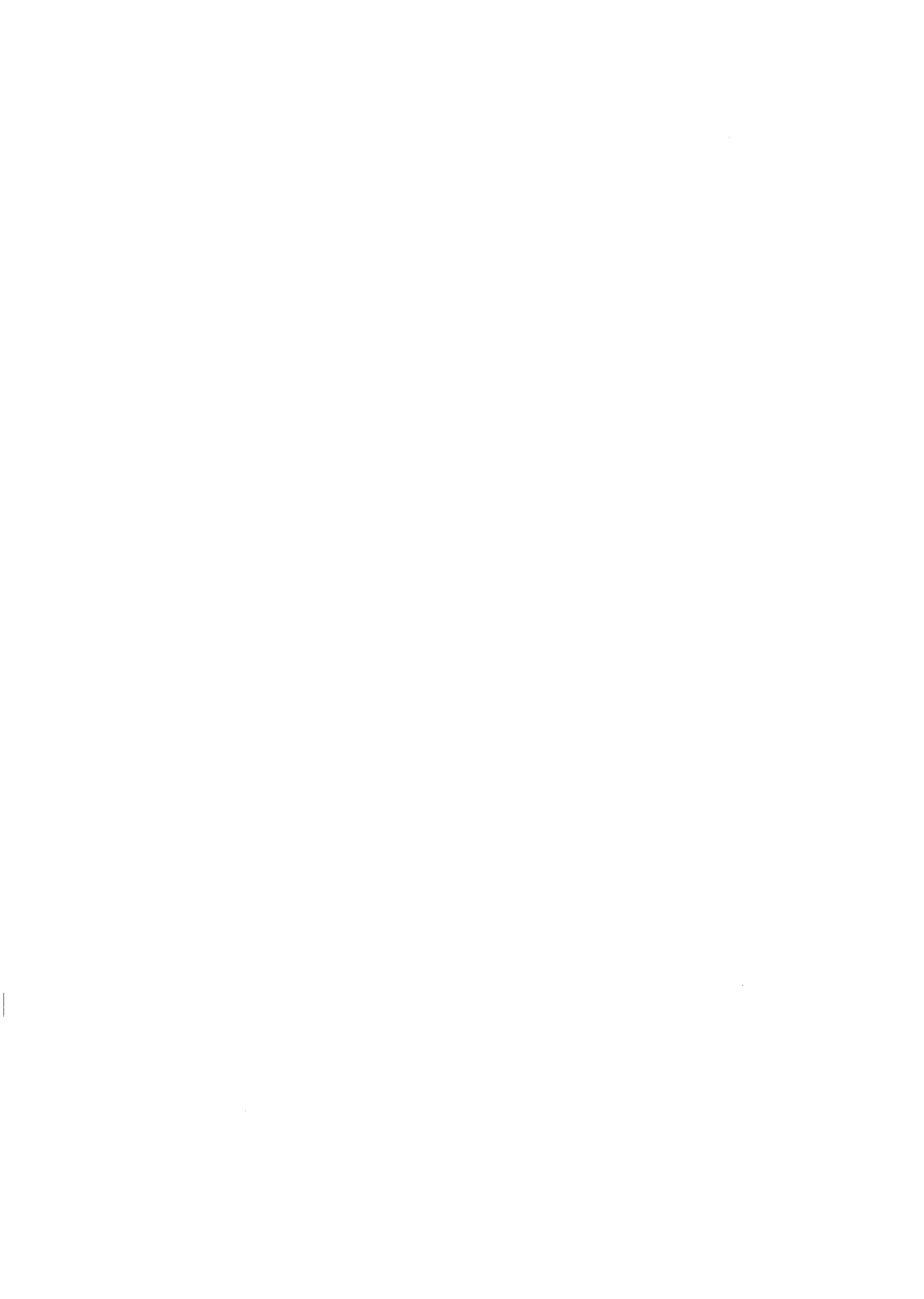
10장 지리 및 지역사회 이해

1. 대한민국 일반현황 / 213
2. 시도별 개요 / 215

제1장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

1. 들어가며
2. 시민적 권리의 발달
3.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
4. 민주시민의 생활양식
5. 맺는 말(새터민의 권리와 의무)



1. 들어가며

남북간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남한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체제라는 점이다. 물론 북한도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북한에서는 자유주의를 ‘날나리풍’이라고 하면서 자유방임 혹은 무질서 등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남한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다른 한편 북한에서는 절대권력에 의해 통제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익숙하지 못한 새터민들은 자율적 주체로서 권리를 찾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어색해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터민들이 민주주의를 곡해하여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의무는 소홀히 할 수도 있다.

이제 새로운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새터민들은 한국사회의 기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또한 의무를 다함으로써 자신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2. 시민적 권리의 발달

(1) 서구 시민적 권리의 발달

16세기까지만 해도 서구사회는 왕권신수설(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받았다는 주장)을 신봉하였고, 이에 따라 절대왕정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17세기에 이르면 전통적 사상에 대해 점차 반기를 들게 되었으며, 계몽사상가들과 자연법 사상가들이 출현하게 된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국가의 의미를 사회계약설(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계약에 따라 행사한다는 사상)로 설명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근대시민계급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작동했다.

영국은 시민권이 가장 일찍 발달한 나라이다. 이미 13세기에 왕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 왕이 국민에게 함부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7세기에는 의회의 동의 없이 국민에게 과세하지 못하게 하였고,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감옥에 가두지 못하도록 규정되었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독립선언서를 발표(1776)하였는데, 이 선언서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천부인권). 우리는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정부의 권력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주권재민). 정부가 이런 목적을 파괴하면 언제든지 그 정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혁명권)”라고 명시하였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해방을 선포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를 주창함으로써 시민권 보장의 기반을 닦았다.

프랑스는 18세기 중반까지 귀족들에게 특권을 인정하는 신분제에 기초한 정치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국민은 혁명을 일으키고 인권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 선언서에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2) 우리나라 시민적 권리의 발달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최고의 권리를 갖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시민권을 완전히 갖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

이승만 정부(1948~1960)는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민적 권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 및 시민적 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낮았을 뿐 아니라, 장기집권과 독재 과정에서 시민적 권리가 제약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남북이 분단된 혼란 속에서 신생국가 건설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4·19혁명으로 축출되었다.

4·19 혁명의 결과 출발한 제2공화국에서는 시민적 자유가 향상되었다. 그러나 군사쿠데타에 의해 제2공화국은 끝나게 되고, 박정희 대통령(1961~1979)을 수반으로 하는 제3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3공화국에서는 제도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되었고 광범위한 시민적 권리가 인정되었지만, 10월유신(제4공화국)이 단행되면서 시민의 권리가 크게 위축되었다.

전두환 정부(1980~1987)도 쿠데타를 통해 들어섰으며, 이때를 제5공화국 시기라고 한다. 제5공화국도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시민

적 권리를 보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에는 많은 제약이 가해졌다.

시민적 권리는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1988~1992) → 김영삼 정부(1993~1997) → 김대중 정부(1998~2000) → 노무현 정부(2003~현재)>을 거치면서 크게 향상되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민적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을 통해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권리 행사에 앞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

(1) 민주시민의 권리

민주시민의 권리란 시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이 권리는 국가로부터 침해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이런 권리를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 새터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 권리를 가지는데, 헌법에 나타난 민주시민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 행복추구권 : 국가의 간섭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권리로서 생명권, 인격권, 알 권리, 들을 권리, 읽을 권리 등이다. 자신이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옷을 입어 몸을 단장하는 등의 자유를 말한다. 쾌적하고 인간다운 주거공간에서 살 권리도 여기에 포함된다.

- ② 평등권 :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나 취급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에 대해 평등한 대우와 취급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 자유권 :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로서, 구체적인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인신에 관한 자유권 : 생명권과 신체권 등
 - 사생활 자유권 : 사생활의 비밀보장,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 정신적 활동 자유권 :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 경제생활 자유권 :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
- ④ 생활권 :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생존권(노동3권), 교육을 받을 권리, 환경권(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주거권(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 ⑤ 청구권 : 자신의 이익에 배치되는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에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 범죄 피해 구조 청구권, 헌법

소원권 등

⑥ 정치권(참정권) : 투표를 하거나 공직을 맡는 등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국민투표권 등

(2) 민주시민의 의무

민주사회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로서 국민 개개인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자신의 권한만을 주장할 때 서로 갈등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의무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시민의 의무란 시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지켜야 할 책무로서, 다음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요 의무이다.

- ① 국방의 의무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대로 국방의 의무를 진다. 싫다고 하여 군대에 가지 않으면 누가 국가를 지킬 것인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 ② 납세의 의무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대로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며, 이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온다.
- ③ 교육의 의무 :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국민이 국민으

로서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근로의 의무 :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민은 노동을 통하여 돈을 벌며 또한 국가에 세금을 낸다. 그러나 노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하거나 강제로 노동을 시키지는 않는다.
- ⑤ 환경보전의 의무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재산권 행사의 의무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도로를 내거나 공공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한데 토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공적인 일을 할 수 없다. 비록 자신의 재산이라도 법에 따라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4. 민주시민의 생활양식

시민사회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가는 사회로서, 시민들 스스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민주시민의식은 참여를 통해 표출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는 무분별하거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수반한다.

① 자율성

민주주의 제도는 국민이 곧 주인인 제도이다. 민주시민은 주인답게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자신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국가가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관용 정신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한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타인의 생각과 행동도 존중해주어야 한다. 상호간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③ 법과 질서의 존중

법은 국민 모두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법에 규정된 질서를 지키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상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폭력이나 폭언 등 물리적 정신적으로 압박을 해서는 안 된다.

④ 공동체 의식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 나머지 타인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조직의 권위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다수의 견해를 존중해야 하며, 모든 것을 법에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경범죄 처벌법상의 범죄(일부)

- (오물방치) 담배꽂초·껌·휴지·쓰레기·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 (노상방뇨 등) 길·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침뺏기, 대소변 보기, 자신의 개 등 짐승이 본 대변을 치우지 않는 행위
- (자연훼손) 공원 명승지 유원지 등에서 함부로 풀·꽃·나무·돌을 꺾거나 캐는 행위,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는 행위
- (음주소란 등) 공공장소에서 거친 말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술주정 행위
- (인근소란 등) 악기나 확성기 등으로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
- (과다노출)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알몸을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는 행위
- (새치기) 버스에 타거나 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을 때 새치기하거나 그 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 (장난전화 등)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
-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맺는 말(새터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에 의하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러나 남북 분단으로 인해 우리의 행정권이 북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우리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남한에 입국한 북한주민(새터민)들은 하나원 교육을 마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다른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가지게 된다.

민주시민의 자세는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자신의 의무를 먼저 행하는 자세이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터민들도 개개인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자신의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일상생활에서도 이웃간에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마시오.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시오

미국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의 취임연설 중에서

제2장

선거제도의 이해

1. 참정권이란?
2. 선거참여의 필요성과 효과
3. 선거관리위원회
4. 선거의 기본원칙
5.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선거제도의 이해

1. 참정권이란?

(1) 참정권의 의미

국민이 직접·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치적 자유권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선거권·피선거권·국민투표권·공무원이 되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참정권은 타인에게 넘겨줄 수 없으며 침해당해서도 안 되는 권리이다.

(2) 참정권의 내용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에는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이 있다.

- 선거권 :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24조)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 포기하거나 남에게 넘겨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리행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공무담임권 :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25조)고 규정하고 있다.

- 국민투표권 : 헌법 개정안이나 국가의 중요한 일 등을 국민의 표결에 붙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선거참여의 필요성과 효과

선거란 국민이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것이며, 선거에서 뽑힌 대표들이 모여 나라의 일을 정한다. 그러므로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또한, 선거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표들을 계속 일하게 할 것인지 그만두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므로 대표자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국민은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야 한다. 국민이 선거와 선거 이후의 일에 무관심할 때 정치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하게 되고, 결국 민주정치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가 올바르게 치러져야 민주정치가 뿌리 내릴 수 있다. 정당이나 후보 그리고 국민 모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거를 치를 때 공정한 선거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하여, 중립적인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 시·도, 구·시·군, 읍·면·동별로 구성되며 6~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선거의 기본원칙

(1) 보통선거

일정한 연령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별·재산·학력·종교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2) 평등선거

한 사람에게 한 표씩 평등하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분이나 재산에 따라 투표권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3) 직접선거

선거권자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투표장소에 가서 투표하는 선거원칙을 의미한다.

(4) 비밀선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선거인이 다른 사람의 강제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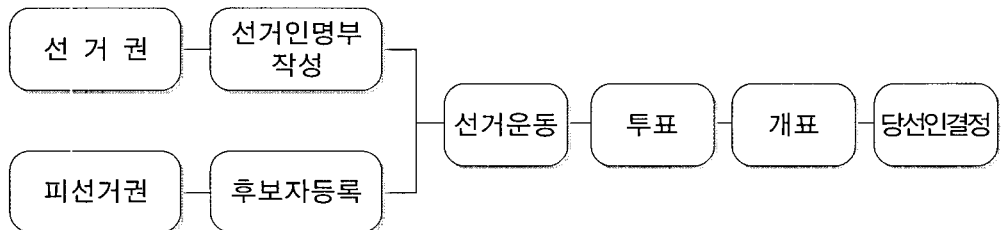
사에 따른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이다.

5.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1) 선거 종류

선거 종류	선출직명	임기	예 시	
대통령선거	대 통 령	5년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	4년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광역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4년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 장, 경기도지사
	기초	자치구청장, 시장, 군수	4년	도봉구청장, 안성시장, 무주군수
지방의회 의원선거	광역	특별시, 광역시, 도의원	4년	서울특별시회의의원, 광주광역 시의회의원, 경기도의회의원
	기초	자치구, 시, 군의회의원	4년	종로구의회의원, 안성시의 회의원, 함양군의회의원

(2) 선거절차



*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 가능

(3) 선거기간

- ▶ 대통령선거 : 23일
- ▶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 14일

(4) 선거구제

가. 지방의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시·도와 구·시·군의원으로 나누어진다. 시·도의회는 지역구(일정한 지역을 한 단위로 하는 선거구)별로 1인을 선출하나 구·시·군의원은 지역구별로 2~4인을 선출한다. 시·도와 구·시·군의원은 지역에서 선출한 지역구의원과 정당에서 추천하는 비례대표의원으로 나누어진다.

* 시·도원의 수 709인, 구·시·군의원의 수 2,922인

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지방자치단체장에는 시·도지사 및 구·시·군의 장이 있다. 시·도지사 및 구·시·군의 장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한다.

* 시·도지사의 수 16인, 구·시·군의 장의 수 234인

다.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은 하나의 지역구에서 1인을 선출하며 지방의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으로 나누어진다.

* 지역구의원의 수 : 299인, 비례대표의원의 수 : 56인

(5) 선거권 · 피선거권

-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
(지방선거의 경우 영주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19세 이상의 외국인도 선거권을 줌)

국가별 선거권 연령

연령	국 가	국가 수
16세	니카라과, 쿠바	2
17세	이란, 북한, 인도네시아	3
18세	인도,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캐나다 등	138
19세	요르단, 한국	2
20세	일본, 튀니지, 카메룬, 모로코, 리히텐슈타인 등	6
21세	파키스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피지, 쿠웨이트 등	16

- ▶ 피선거권 : 대통령선거는 40세,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25세이다.

(6) 입 후보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정당에서 추천(정당추천후보자)을 받거나, 일정 수의 선거인에게서 직접 추천(무소속후보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질이 없는 후보자의 입후보를 막기 위하여 일정금

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두도록 한 후 일정득표를 하였을 경우 다시 돌려준다(기탁금).

선거인 추천수

대 통 령	국회의원, 구·시·군의장	시·도지사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2,500~5,000명	300~500명	1,000~2,000명	100~200명	50~100명

(7) 선거운동

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공무원 등 일정신분의 자를 제외하고 선거권이 있는 자는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나. 선거운동의 개념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 일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다. 선거운동의 방법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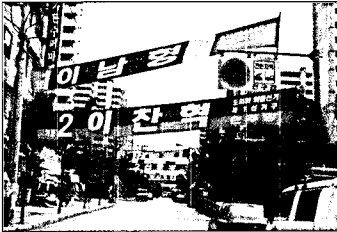
주요 선거운동방법



선전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어깨띠



후보자초청 대담 · 토론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

(8) 선거비용 보전

후보자에게 기회를 균등히 제공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자 선거결과 일정득표를 한 경우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하여 주고 있다(선거공영제).

(9) 투표 및 개표

가. 투표용기 기호 결정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순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고, 무소속후보자는 그 성명의 가, 나, 다순으로 부여한다.

나. 투표방식

① 부재자투표

- 신고대상 :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 신고절차 :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
- 투표방법 : 집으로 배달된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부재자투표 기간에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서 우편으로 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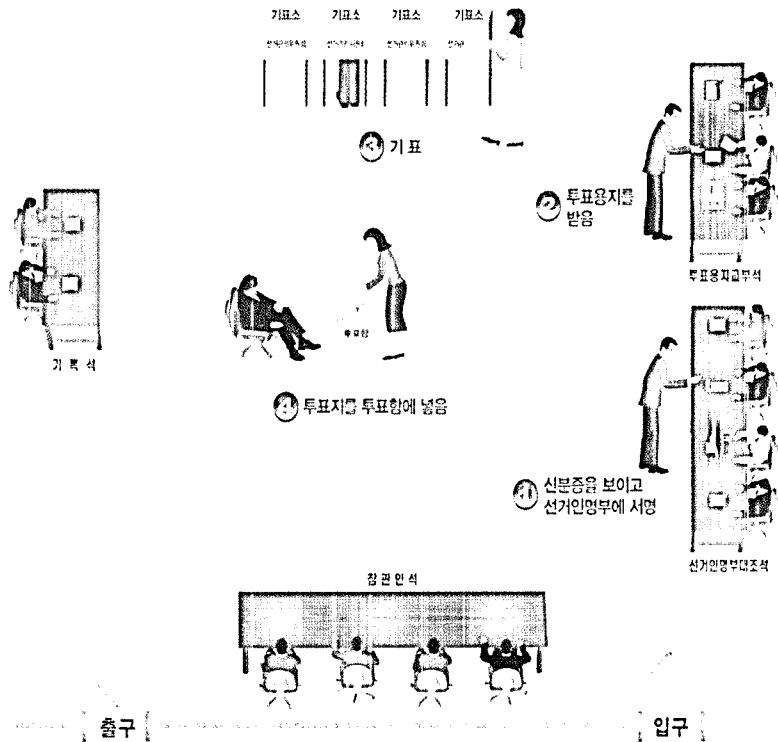
② 거소투표

- 신고대상 :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거동불능자 등
- 신고절차 : 부재자와 동일
- 투표방법 : 부재자투표소에 가지 않고 거소에서 우편으로 투표

③ 일반투표

- 투표방법 :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봉으로 기표
- 투표시간 : 오전 6시~오후 6시
- 투표절차 : 다음 그림 참조

투표! 아래와 같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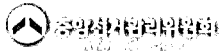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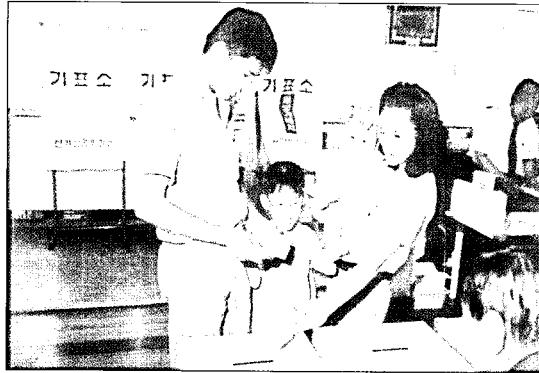
▶ 투표진행순서

- ① 신분증을 제시한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다음
- ② 투표용지를 받은 후
- ③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용구로 기표(④)를 하고, 투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서 기표소를 나와
- ④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가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하여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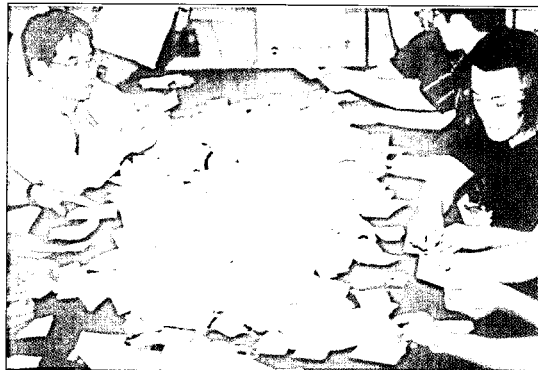




온 가족이 투표소에 나와 투표하는 장면

다. 개표

개표과정의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참관인의 참관을 허용하고 개표장을 일반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개표장에서 개표하는 장면

(10) 당선인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후보자들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

인으로 결정하며,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의원은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비례대표의원은 정당별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의석을 배분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11) 선거범죄

가. 과태료제도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금품을 받으면 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나. 포상금제도

선거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당선인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추가로 포상할 수 있다.

다.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며 받은 선거비용도 반환하여야 한다.

라.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선거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

하여는 피선거권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특정 공직에의 취임 또는 그 임용을 제한한다.

선거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3장

생활경제의 이해

I. 시장경제

II. 생활경제

III. 생활금융

I. 시장경제

1. 시장경제

(1) 시장이 만들어지는 과정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거래’라 하는데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시장이다. ‘시장’하면 재래시장이나 할인매장, 백화점처럼 물건을 쌓아 놓고 파는 곳이 떠오르겠지만 경제에서 말하는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요즘에는 물건뿐만 아니라 서비스(용역)를 사고파는 것도 거래라 하며 서비스를 사고파는 곳도 시장이라 한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건(재화)이 사고 팔리는 곳만을 시장이라 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가 사고 팔리는 곳도 시장이라 한다. 그래서 홈쇼핑, 인터넷 쇼핑, 노동시장, 외환시장, 부동산시장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시장이 생겨났다.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거래를 통해 물건을 만드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을 연결해준다. 시장이 있기에 자기 고장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을 필요한 때에 쉽게 구할 수 있고 자기 고장에서 생산한 물건을 쉽게 팔 수도 있다. 또 생산한 물건을 저장하거나 보관하는데 드는 돈을 절약할 수도 있게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모두 다 가질 수는 없다.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줄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원하는 것은 끝이 없는데 자원은 부족한 까닭에 경제적인 활

동이 필요한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석유가 평평 쏟아져 나와 부족함이 없다면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거나 비싼 돈을 들여 석유를 사 올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 자동차를 무조건 공짜로 준다면 자동차를 사기 위해 힘들게 돈을 벌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자원은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석유나 자동차 같은 물건 즉 재화뿐 아니라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는 행위(용역, 즉 서비스)에서도 선택을 해야 한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돈이 적게 드는 비디오테이프를 빌려서 집에서 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돈이 적게 드는지 생각하는 이유는 사고 싶은 물건, 하고 싶은 것들은 끝도 없이 많은데 그것을 사거나 할 수 있는 돈, 즉 소득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 것인가?’ 이처럼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가장 큰 효과를 얻거나 또는 일정한 효과를 얻기 위해 가장 적은 비용을 치르는 것을 경제원칙이라 한다. 시장에서 물건을 고를 때나 집이나 자동차를 살 때 등 우리는 생활속에서 경제원칙에 따라 선택하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사고 싶은 물건)은 끝이 없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원(돈)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희소성의 원칙이라 한다. 영화를 보는 대신 비디오테이프를 빌려서 본다면 영화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포기해야 하는 것의 값어치’를 기회비용이라 한다.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발생하는데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언제나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기회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면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기회비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불하는 대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지불대가를 가격이라 한다. 우리는 시장이나 유통과정을 통해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그 가격, 즉 기회비용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누가 시장에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일일이 정하는 것일까? 가격은 정부나 컴퓨터와 같은 기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2) 수요와 공급

수요란 소비자들이 배추같은 상품을 사는 것처럼 재화나 서비스를 사려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공급은 생산자들이 배추 등을 파는 것처럼 재화나 서비스를 팔려는 행위를 이야기한다. 소비자들은 재화나 서비스를 되도록 싼 가격에 살려 하고 반대로 생산자들은 재화나 서비스를 될수록 비싼 가격에 팔고 싶어 한다. 이렇게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와 물건을 팔려는 생산자 사이에서 서로의 힘이 작용해 가격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와 물건을 팔려는 생산자 사이에는 힘이 작용하는데 물건을 싸게 사려는 소비자의 힘 즉 수요와 물건을 비싸게 팔려는 생산자의 힘 즉 공급이 서로 겨루기를 하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생산자가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비싸게 올리거나 소비자가 가격을 싸게 결정할 수는 없다. 생산자가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비싸게 정하면 소비자가 물건을 사지 않으려 할 것이고 소비자가 생산

자의 힘을 무시하고 혼자서 가격을 싸게 결정할 수도 없다. 생산자가 물건을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격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힘겨루기를 통해 적정한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가격도 변하게 된다.



팔려는 물건은 부족한데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물건값이 오르고 팔려는 물건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적으면 물건값이 내려가게 된다. 즉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고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내려가게 된다. 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리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오르게 된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장마철에 상추값이 비싼 이유는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장마 때문에 수확량이 줄어 생산자들이 시장에 내놓지 못해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2. 상품과 생산

(1) 상품 : 재화와 서비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 가운데 집이나 옷, 자동차, 컴퓨터처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을 재화라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꼭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버스나 기차가 저절로 우리를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는 없다. 버스나 기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나 기관사가 있어야 한다. 아플 때도 마찬가지이다. 병원건물이 아무리 크고 멋져도 건물이 직접 우리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의사가 치료를 해주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처럼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전하는 것, 의사가 진료하는 행위처럼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을 용역(서비스)이라 한다.

(2) 생산행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자연에서 직접 구하거나 자원을 가공하여 얻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얻거나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활동을 생산이라 한다. 옛날에는 사람이 자연속에서 직접 힘을 들여 물자를 구하는 활동만을 생산활동이라 생각했는데 오늘날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을 충족시켜주는 모든 활동을 생산활동이라 한다.

생산에는 보통 세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토지, 노동, 자본을 이야기한다. 토지는 생산을 하는 데 필요한 땅을 뜻한다. 농작물을 가꾸기 위해서는 농토가 필요하고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공장터가 있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노동은 생산을 위해 들이는 사람의 노력을 뜻하는데 육체노동, 기술노동, 정신노동으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원료나 기계, 시설 등을 마련하는 데 드는 돈이나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을 자본이라 한다.

(3) 생산과 소비와 분배

여러 방법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거나 만들어 내는 것을 생산이라 한다면 필요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는 것을 소비라 한다. 옷들이 낡아 새 옷을 사거나 미용실에 가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동 등이 바로 소비에 해당한다.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생산을 통해 얻은 생산물을 나누는 것을 분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산에 참여하고 그 대가를 소득의 형태로 받는 것을 이야기한다. 생산, 소비, 분배의 모든 활동과 나아가 이런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바로 '경제'이다.



(4) 소득과 지출

사고 싶은 물건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당연히 돈을 주고 살 수 있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받은 돈을 소득이라고 한다. 경제적 의미로는 노동이나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 가운데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들어간 비용을 제하고 남은 돈을 말한다. 순수하게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란 뜻이기도 하다.

소득을 얻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농작물을 재배해서 그것을 팔아 소득을 얻는 집, 농작물이나 물건을 운반해주고 소득을 얻는 집, 가게를 차려서 물건을 팔아 소득을 얻는 집, 회사에서 일을 하여 월급을 받아 소득을 얻는 집 등 각양각색이다. 이렇게 일을 하고 번 돈을 소득이라고 한다.

소득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라면 반대로 번 돈을 쓰는 행위를 지출이라고 한다. 쌀이나 보리 등 식생활을 위해 여러 가지 식료품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식료품비, 옷을 사는데 쓰이는 의복비, 교육을 위한 교육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출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정살림을 꾸려나가는 활동을 가게라 하는데, 가족이 벌어들이는 일정한 소득으로 가족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저축도 해서 가게를 운영한다.

3. 화폐

(1) 화폐

상품의 교환이나 유통을 원활히 하는 데 쓰이는 교환수단이 되는 물건을 화폐라 한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사용하는 돈이 바로 화폐이다. 한자로 재물이나 재산을 뜻하는 재화 ‘화(貨)’ 자에 비단 ‘폐(幣)’ 자를 합한 말로 옛날에는 지금의 돈 대신 옷감이 되는 비단을 물물교환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화폐라는 말이 생겨났다.

원시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직접 구하거나 만들어 사용했다. 그럴 수가 없으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자기 것을 주고 그것을 얻어와야 했다. 생선잡는 일을 주로 하는 어부는 맛있는 과일을 먹기 위해 생선을 주고 과일과 바꾸어야 했다. 시장이 생겨나면서 물건을 교환하는 일이 그나마 편리해졌지만 여전히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자기 물건을 직접 시장에 들고 가는 일은 번거롭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사람들은 물건을 바꾸는 기준을 만들게 된다.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은 가치를 지닌 물건이 바로 화폐, 즉 돈이다.

오늘날에는 무엇을 화폐로 사용하고 있을까? 문구점에 가서 필요한 학용품을 사거나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때 어떤 돈을 낼까? 이때 사용하는 종이돈과 동전을 일컬어 현금이라고 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 또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는 의미이다.

오늘날에는 현금을 화폐로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지폐나 동전 같은 것이 없었고 화폐를 처음 사용할 때는 조개껍질이나 가축, 옷감이나 곡식, 소금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으로 대신하기도 했다.

화폐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은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운반이 편리해야 한다. 운반이 너무 힘들면 쉽게 사용하기 어렵

다. 다음으로 오랫동안 품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세월이 흘러도 품질이 변하지 않아야 가치가 안정되어 화폐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적은 금액의 거래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적은 규모의 거래에 사용할 수 없다면 거스름돈을 받기 어려워 불편하기 때문이다.

(2) 금융

금융은 ‘금전(돈)을 유통하는 일’을 줄인 말이다. 유통이란 필요한 물건이나 돈을 돌려서 쓰는 것을 말한다. 즉 돈이 오고 가는 것을 금융이라 하는데 돈의 유통은 크게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그리고 이들을 중개하는 기관으로 나뉘어진다.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기관이 금융기관이다. 금융기관으로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 있다.

금융시장이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눈에 보이는 시장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도 포함한다. 가장 대표적인 금융시장이 외환, 즉 외국돈을 사고파는 외환시장이다. 외환시장에서는 대개 거래를 실제로 만나지 않고 컴퓨터로 한다. 눈에 보이는 시장은 없지만 컴퓨터를 통해 돈(외환)이 왔다갔다 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금융시장에는 외환 시장 이외에 주식을 사고 파는 주식시장도 있다.

4. 기업의 목표 : 이윤

기업은 가계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생산활동을 하는

단위이다. 생산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업’이다.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는 목적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윤이란 생산한 상품의 가격에서 생산이나 판매활동을 하는 동안에 들어간 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이 이윤으로 기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것이다. 만약 상품을 판매해서 이윤이 생기지 않는다면 기업이 공장을 짓고 상품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는 것이다.

기업은 사람과 물자, 돈 등 생산에 필요한 여러 요소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생산활동한다. 기업의 생산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은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고, 기업의 생산활동으로 생기는 경제적인 가치가 국민경제의 밑바탕이 되므로 경제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사회나 국가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이윤의 증대는 기업의 생산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5. 국제무역

경제활동은 국가간에도 이루어지는데, 국제경제란 이렇게 두 개 이상의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말한다. 두 나라 사이에 물건을 사고파는 수출과 수입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국제 경제활동이다.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에서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수출이라 하고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 상품을 사들여 오는 것을 수입이라 한다. 이렇듯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듯이 나라간에 물건이나 상품을 사고 파는 것을 무역이라 한다.

그렇다면 무역은 왜 하는 것일까? 옛날에는 인구가 많지 않아 물

건의 양이 지금처럼 부족하지도 않고 다양한 종류의 물건이 필요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필요한 물건을 국내에서 대부분 얻을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필요한 물건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국내에서 모두 충족하기가 힘들어졌다. 이런 거래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고 나라와 나라사이에 거래를 하는 무역이 생기게 되었다.

만약에 나라간에 무역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석유를 얻을 수 없다. 또 선박을 만드는 조선기술이 뛰어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배를 팔 수 없다면 배를 만드는 공장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처럼 어떤 물건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오는 편이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 것이고 무역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건을 비싸게 사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자기나라의 이익을 위해 서로 활발하게 무역을 한다.

II. 생활경제

1. 가계경제

(1) 국민경제의 3주체

일반적으로 가계, 기업, 정부는 국민경제의 3주체를 이룬다.

가계는 경제주체로서의 가정을 의미한다. 가계는 기업에 생산요소(자본, 노동,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이 소득을 기초로 하여 소비를 하거나 저축을 한다. 경제 내에서 가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가계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초적인 생산을 담당하며, 소비의 주체이며, 기업에게 생산요소를 공급하며, 정부에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역할 등을 수행한다.

기업은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기업은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경제주체인데, 이는 자신이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 생산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은 생산 활동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만들어 시장에서 판매함으로써 생긴 수입을 기초로 임금, 이자, 지대를 지급하고 이윤을 창출한다. 기업은 부가 가치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조세를 재원으로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국방, 치안, 교육, 경제·사회개발 등의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보다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2) 가계수입과 지출

경제생활의 출발은 수입과 지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입은 주로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을 때 생기며, 토지나 주택 그리고 여유 돈이 있는 사람은 이를 빌려준 대가로 수입을 얻기도 한다. 반면에 지출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거나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받고 대가를 치를 때 이루어진다.

▶ 가계수입

- ① 근로소득 : 일의 보수를 말한다.
- ② 사업소득 : 사업이익을 말한다.
- ③ 재산소득 : 토지세, 집세, 이자, 주식, 투자배당 등을 말한다.

▶ 가계지출

- ① 식품비 : 주식과 부식, 외식, 기호식품 등에 쓰이는 비용
- ② 피복비 : 의류, 침구 등에 쓰이는 비용
- ③ 주거비 : 집세(월세, 전세), 집 마련을 위해 빌린 돈의 이자 등 주거에 드는 비용
- ④ 교육비 : 학교 교육, 학원 수강 등에 드는 비용
- ⑤ 기 타 : 교통비, 의료비, 문화비, 전기·수도·가스 사용료, 주거관리비 등의 비용

2. 소득관리

(1) 소비와 저축

소득은 소비와 저축으로 나뉜다. 즉, 저축은 소득 중 소비하지 않은 부분을 말한다. 따라서 소득이 일정할 때, 소비지출이 많아지면 저축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만일 소비가 소득을 초과할 경우 음(-)의 저축, 즉 부채가 발생하게 된다.

저축은 미래의 소비를 위하여 현재의 소비를 유보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경기가 침체하여 자신의 경제적 미래가 불안해질 경우,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 그 첫 번째 방법이 될 것이다.

(2) 소득과 소비

소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증가된 소비 능력을 화폐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한 것이므로 당연히 소비가 늘어난다. 물론 재화에 따라서는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늘어나는 것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는 증가한다.

소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소득은 아무래도 현재의 소득이겠지만, 반드시 현재의 소득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은 소득이 없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 소득이 생길 것이 예상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현재의 소비를 늘릴 수도 있다. 즉 미래의 예상되는 소득도 현재의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과거의 소득 수준도 현재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과거에 소득이 높아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은 그 때의 소비수준을 잊지 못해 소득이 낮아진 현재에도 비슷한 소득을 가진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를 더 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 번 높아진 소비수준을 낮추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거의 소득, 현재의 소득, 미래의 소득이 모두 현재의 소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의 풍요롭던 생활을 못 잊어 자신의 소득에 어울리지 않는 과소비를 일삼는다든지, 불확실한 미래의 소득만 믿고 미리 소비를 하고 보는 것은 그다지 현명하지 않은 소비태도이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자신의 분수를 지켜,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소비를 해 나가야 한다.

3. 합리적인 소비생활

(1) 합리적 소비의 조건

우리가 재화를 소비하는 목적은 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또한 돈을 들여 재화를 구입하는 것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재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편하고 행복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고 그에 필요한 재화를 다 가지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소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합리적인 소비가 강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해야 한다.

가. 분수에 맞는 계획적 소비

합리적인 소비의 첫째 조건은 구매에 관한 결정을 즉석에서 충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처음에는 살 생각이 없었다가도 판매자의 선전에 현혹되어 충동구매를 한 후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당장 현금이 지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외상이나 신용 카드로 일단 구입하고 보는 식의 구매 습관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당초 계획하지 않았던 재화를 구입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즉석에서 구입 결정을 내리지 말고 다음의 것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다.

- ① 그 재화가 꼭 필요한 것인가.
- ② 가격은 적정한가.
- ③ 자신의 정상적인 수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가.

나. 구입할 재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

우리가 재화를 구입하는 이유는 그 재화를 사용함으로써 만족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제외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재화를 사용해 보기 전까지는 만족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소비를 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로부터 예상되는 편익(편리함과 유익함)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판매자의 일방적인 설명에만 의존하여 구매하는 것은 자칫 충동적인 구매가 될 수 있다.

자신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사람들

은 때때로 그 상품의 상표(brand)나 제조회사를 믿고 구매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품의 품질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유명상표만을 찾는 소비는 합리적 소비가 아니다. 이런 소비는 상품보다는 상표를 구입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려는 동기가 크기 때문이다.

재화를 구입하기에 앞서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다.

- ① 반품과 환불은 가능한가.(언제까지)
- ② 애프터서비스는 잘 지원되고 있는가.
- ③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하며 유지비는 얼마나 드는가.

다. 소비의 기회비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좋은 것은 거저 오는 법이 없으며 거기에는 항상 응분의 대가가 따른다는 말이다. 소비에 있어 구입할 재화의 편익에 대한 정확한 정보 못지않게 그 재화의 구입에 소요되는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재화의 가격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그 재화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기회비용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여유 돈으로 사는 사람과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는 사람 간에는 기회비용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소비란, 최고의 제품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기회비용의 핵심인 가격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소비의 기회비용에 미치는 요인으로 가격 외에 대금 지불 방법이나 지불시기

도 빼놓을 수 없다.

(2) 소비와 신용

신용이란, 장래의 어느 시점에서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현재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신용은 이처럼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당겨서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좋은 신용은 개인의 경제활동에 있어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신용은 개인의 경제생활에서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신용이 낮은 상대와 거래를 할 경우 많은 거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금 외의 다른 결제수단이 통용되지 않으므로 거래에 여러 가지 불편과 위험이 따르게 되고, 이는 결국 거래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침체시키게 된다.

신용이 좋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돈을 빌릴 때에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개인이나 기업, 국가 할 것 없이 신용이 낮으면 위험성이 높은 거래 대상으로 분류되어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3) 비합리적 소비

우리는 일상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신이 원치 않는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 모방이나 충동에 의해 자신의 소비가 영향을 받기도 한다.

남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다가 자신의 분수를 망각하는 소비 행위는 후회를 불러오기는 쉬운 만큼, 평소의 계획이나 필요와 관계 없는 구매는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일상의 소비 가운데는 구입하는 재화로부터 효용을 얻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위나 경제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상층계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누가 월급을 많이 받는지, 저축한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 힘들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싼 옷을 입고 있거나, 큰 집에 살고 있거나,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부자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사회적 지위를 감추기 위하여 비싼 옷을 입거나 좋은 차를 타기도 한다.

재화의 품질이나 용도보다는 특정 상표에 집착하는 소비행위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이루어지는 소비로 자칫 재화의 기능보다는 비싼 가격이나 외양만을 추구하는, 주객이 전도된 소비가 될 가능성이 많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항상 가격 및 품질을 잘 비교하여 필요한 것만을 구입하는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과소비는 문자 그대로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는 것이다.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소비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소비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환경도 문제이다.

(4) 반성과 예측을 주는 가계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부자란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다음의 가계부는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대체로 동네 슈퍼마켓의

물품을 구입하는 독신여성의 1개월 가계부를 작성한 것이다.

가계부는 불필요한 돈을 쓰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지출에 대한 예측을 하게 함으로써 삶을 설계하는 데 유익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가계부(1개월)

날 짜	구입 물품의 가격	합 계
1	쌀(10kg)-25,000 옥수수기름(1.5kg)-4,350	29,350
2	참기름(300g)-3,300 된장(1kg)-2,600	8,500
3	라면(1박스)-12,000 간장(1kg)-2,600	12,000
4	계란(1판)-4,500 식초(0.5kg)-800	5,300
5	청바지-19,000 셔츠-25,000	44,000
6		
7	감자(2kg)-2,400 당근(1kg)-1,600	4,000
8		
9	생선(1마리)-1,600 선크림-6,000	7,600
10	화장지(24개)-10,000 복숭아(7개)-5,000	15,000
11		
12	태양초고추장(1kg)-5,700 양파(6개)-1,600	7,300
13	배추(2포기)-3,500 무(1개)-1,500	6,000
14		
15	샴푸-4,000 가루비누-2,000	6,000
16		
17	두부(1모)-1,000 파(1단)-700	1,700
18		
19	돼지고기(1근)-12,000 상추(300g)-2,200	14,200
20	파(1단)-1,000 고구마(1kg)-3,000	4,000
21		
22	샌들-15,000	15,000

날 짜	구입 물품의 가격	합 계
23		
24	직원결혼식-50,000	50,000
25		
26	명애언니와 식사-18,000	18,000
27		
28	방울토마토(1kg)-2,500	2,500
29		
30	사과(5개)-3,500	3,500
합 계		253,950

정기 지출

월 세	관리비	전기	물	가스	난 방	TV수료	전화	핸드폰	교통비	합 계
175,000	35,700	8,500	5,700	8,200	52,000	16,500	35,000	48,000	60,000	444,600

이달의 소득과 지출

소 득	지 출			잔 액
	정기 지출	비정기 지출	지출 총액	
1,300,000	444,600	253,950	698,550	601,450

II. 금융금융

1. 금융에 대한 이해

(1) 금융의 의미

금융은 돈의 유통, 즉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현상을 말한다. 즉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용함에 따라 일어나는 돈의 흐름을 말한다. 금융은 경제의 혈액이다. 사람이 혈액이 없이 살 수 없듯 금융 없는 경제는 있을 수 없다. 자금의 흐름은 개인 사이, 기업 사이에도 발생하지만 그것의 큰 흐름은 개인과 기업부문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기업은 항상 저축보다는 투자를 많이 하고자 하며, 개인은 투자보다 저축이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기업은 자금이 부족하고 개인은 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 두 부문 사이에서 자금순환이 이루어진다.

(2) 금융시장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활동은 이자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며 이런 자금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금융시장이라고 한다. 상품시장에서 상품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변화되듯이, 금융시장에서는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는데, 이자율이 오르면 저축, 즉 자금공급이 늘고 수요가 줄며, 반대로 이자율이 내리면 자금의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어난다.

은행이나 금융기관 그리고 개인이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한다. 만일 개인이 중개역할을 한다면 사금융이라고 하며 사람들은 흔히 '사채를 쓴다' 라고 한다. 금융기관의 금리는 저렴한 반면, 사채의 이자는 아주 비싼 편이다.

(3) 통화량과 정책

경제사회에서 유통되는 화폐(통화)의 양은 물가, 생산, 고용 등 국민경제의 여러 가지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수요에 비해 통화량의 공급이 너무 많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너무 적으면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한국은행)는 통화량을 적당히 조절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2.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1) 금융기관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이 존재하는데, 크게 통화를 창출하는 통화 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통화금융기관으로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이 있으며, 비통화금융기관으로는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이 있다.

가. 통화금융기관

- 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독점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며, 화폐의 양을 조절한다. 한국은행은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은행이 아니라, 은행을 상대로 하는 ‘은행의 은행’ 구실을 한다.
- ② 일반은행은 길거리에서 보는 많은 은행들이 여기에 속하며 개인이나 기업과 예금, 대출 업무를 한다.
 - 서울에 본점을 둔 일반은행으로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제일은행, 시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과 같은 은행이 있다.
 - 지방에 본점을 둔 일반은행으로서는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과 같은 은행이 있다.
- ③ 특수은행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일반은행이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국민경제의 특수부문에 자금을 공급한다. 그러면서도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예금이나 대출과 같은 금융활동도 한다.
 - 한국산업은행은 큰 규모 시설의 산업자금을 장기적으로 빌려준다.
 -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사업자금을 빌려준다.
 - 국민은행은 적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매달 예금을 하게 하여 적은 액수를 대부해 준다.
 - 한국외환은행은 외국과의 돈 거래를 하며 외국돈의 교환, 송금 등을 할 수 있다.
 - 한국주택은행은 주택자금을 대부해주며 주택채권 발행을 한다.

-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중장기 자금을 공급한다.
-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과 같은 조합도 있다. 이러한 조합들은 저축과 농·축·수산업 자금 대부분무를 한다.

나. 비은행권 금융기관

- ①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 종합금융회사는 외화자금 및 중장기자금의 공급과 아울러 단기금융업 등 종합적인 금융업을 하는 금융기관이다.
 - 상호신용금고는 서민과의 금융거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 상호간의 자금유통을 위한 금융기관이다.
- ② 보험회사는 미래에 일어날 위험에 대한 보장을 미리 준비하는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이다.
- ③ 증권회사는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하는 금융기관이다.
- ④ 투자신탁회사, 리스회사, 벤처캐피털회사 등이 있다.

(2) 금융상품

금융상품에는 예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의 종류가 있다.

가. 은행권 금융상품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면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소득이다. 따라서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자소득세)

- ① 보통예금 : 아무 때나 맡기고 찾을 수가 있어 편리하나 이자율이 낮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예금이다. 요구불 예금이라고도 한다.
- ② 당좌예금 : 상인, 회사, 관청 등 예금과 인출이 잦은 경우에 많이 이용한다. 수표 출납을 할 수 있어 편리하나, 이자가 없다.
- ③ 정기예금 :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에는 찾지 않겠다는 계약 하에 맡기는 예금으로 이자율이 높은 편이다. 예금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며 확정금리가 보장된다.
- ④ 정기적금 : 일정한 기한에 일정금액을 계속 적립하게 되는 목돈으로 찾게 되는 은행 예금이며 이자도 붙는다. 중도해지 시에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 다음의 금융상품은 비과세 금융상품이다.

- ⑤ 근로자 우대저축 :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이 매월 50만원까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목돈마련에 적합한 상품이다.
- ⑥ 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에만 해당되는 주택마련 적금이며, 1개월에 2~10만원 정도만을 넣을 수 있는 비과세 저축이다.
- ⑦ 장기주택마련저축 :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85㎡이하의 주택소유자) 가입할 수 있는 주택마련 적금이며 금융기관을 통틀어 1계좌만이 허용된다.

- ⑧ 비과세 생계형 저축 : 1인 최고 2,000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가입대상은 65세 이상의 개인, 장애인,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해서이다.

나. 비은행권 금융상품

- ① 적립식 목적 신탁, 적립식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이 있다.
투자를 목적으로 적립 방법으로 신탁하여 이익금을 배당받는 금융상품이다. 시중의 은행보다 금리가 높기에 유혹이 크지만 손해도 역시 감수해야 하므로 은행권 상품보다 위험이 크다.

- ② 보험 상품에는 자율성보험과 책임성보험이 있다.

보험은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리 약간의 금전을 각출하여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이것으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보험회사의 직원들은 집이나 회사를 방문해서 보험을 권유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보험회사의 직원들은 자신의 실적에 따라서 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유하는 영업활동에 적극적이다. 친척이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험회사의 직원이 찾아올 경우 안면이나 체면 때문에 보험에 들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보험이 주는 혜택을 우선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은 보통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경제활동이다.

그러나 자동차를 사는 경우 교통사고는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즉 사고를 냈을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상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에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그 외 4인 이상의 회사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주식과 채권

주식이란, 기업이 설비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증권으로, 보통 5,000원 짜리로 발행한다.

기업을 확장하고 기술혁신을 하려면 큰 자본이 들어가는데, 자신의 상품을 판매해서 얻은 이윤으로만 조달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업들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사업규모를 늘려간다. 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하면 기업 가치를 나눠주는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돈을 마련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 기업이 앞으로 수익성이 높고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측되면 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사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 주식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망이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게 되면 주식가격은 올라간다. 내가 15,000원에 샀는데 2개월 만에 이 주식이 20,000원에 거래될 수 있다. 그러면 5,000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 주식투자는 대박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실패할 가능성도 많다. 따라서 정보력이나 전문성 없이는 돈을 벌기 어렵다.

기업들은 많은 수익을 올리면 연말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배당금을 준다. 만약 그 회사가 돈을 못 벌게 되면 투자자는 이익이 아니라 자기가 투자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손해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주식제도는 투자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도 좋고, 단기간 내에 돈을 벌려는 사람에게도 좋은 제도이지만,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불확실성이 커서 투기성이 높음을 알아야 한다.

채권(債券)이란,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 돈을 필요로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에 돈을 건네주고 그 증거로 받는 유가증권, 즉 차용증서이다. 채권은 대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하므로 안전성이 높으며, 약속된 기한이 되면 원금과 확정된 이자를 받게 된다. 채권은 사람들 사이에서 교환과 매매가 가능하다.

주식과 채권은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성격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주식은 상환기간이 없는 자본금이고, 채권은 상환기간이 있는 부채이다.
- 주주는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 주식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채권은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지급한다.
- 주식은 투자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지만, 채권은 투자한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주가의 변동 폭은 대체로 크지만, 채권가격의 변동 폭은 좁다.

금융상품의 비교(○양호, △보통, ×불량)

금융상품	안정성	위험성	수익성	성장성	유동성
은행예금	○	×	×	×	○
주식	×	○	○	○	△
채권	○	△	△	△	△
투자신탁	△	△	△	△	△

제4장

한국사

1.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
2. 한반도의 역사전개
(고조선~조선)
3.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4. 현대 한국의 발전

한국사

1.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

(1) 역사는 왜 배우는가?

선조들이 걸어온 발자취인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무엇일까?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이다. 우선 역사는 우리에게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준다.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들을 통해 교훈을 배우기도 한다. 또한 역사는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민족인가를 가르쳐주는가 하면 민족이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만약 현재와 미래만을 중요시하여 역사를 등한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 교훈을 얻고,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역사적 인물을 표본으로 삼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한 국가, 민족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 민족의 나아가 할 방향이나,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듯 역사는 과거이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한 것처럼 역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세종대왕의 한글창제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세종대왕을 표본으로 삼아 인생의 행로를 결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우리민족이 우리의 말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자를 창제한 슬기로운 민족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도 한다.

(2) 남북한에서의 역사인식

역사는 과거 중에서 역사가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여 구성하여 놓은 것이다. 하지만 역사가의 견해에는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하는 사료가 필요하며, 사료가 없을 때는 하나의 추측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사료(자료, 증거)는 존재하지만, 역사가의 견해나 평가가 외부의 힘에 의해 좌우될 때, 혹은 사료가 조작되거나, 사료와는 맞지 않는 역사가의 견해가 개입되었을 때, 역사가 '왜곡'되었다는 말을 쓴다. 즉 일반적으로 역사인식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료) + 역사 속에서 상황 + 역사가의 해석 및 평가>라는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형성되는 것이다. 여기서 사료는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하며, 해석·평가에 외압을 받지 않는 역사가의 양심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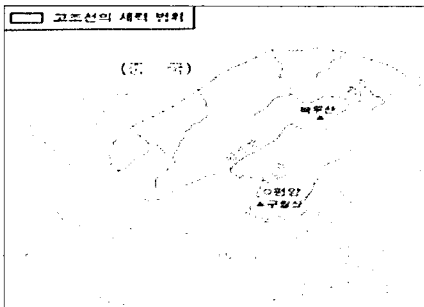
역사에서 역사가의 주관적인 해석은 반드시 들어간다.” 이런 이유로 역사 자체를 연구하기 보다는 역사를 수단화하여 도구로서 활용한다면 역사가 왜곡이 일어나기 쉽다.

남북은 해방 후 60여 년 동안 거의 단절된 상태를 지속하였다. 남북은 체제와 사상이 현저히 다르며,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역사를 바라보는 눈(역사인식, 역사관)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하였다. 남한에서 역사학자들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객관적 사료(자료) + 역사 속 상황 + 역사가의 해석·견해를 바탕으로 한 역사서술이 비교적 잘 지켜지는 편이다. 남한에서는 역사가 정치 혹은 체제유지를 위해 수단화 되는 일은

1)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을 옮기는 순간 역사가의 견해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과거의 사실 있는 그대로 되살리는 것”을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 더 생각해봐야 한다.

거의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유일한 사상 체계는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역사관에도 영향을 주어 주체사관이 성립되었으며, 주체사관은 주체사상을 뒷받침하고, 김일성 유일사상을 확고히 하는 데 이용되었다. 때문에 북한의 역사학은 역사 연구 자체보다 주체사상 및 김일성의 혁명사업을 정당화하고 당 및 인민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데 비중을 둔다. 이렇듯 남북이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는 내용이 다르게 서술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북한에서는 역사를 사상의 도구로 사용하며 많은 역사 왜곡이 나타나는데, 특히 김일성 항일 무장 투쟁사 및 현대사 부분에서 두드러진다.

2. 한반도의 역사전개(고조선~조선)



(1) 고조선

고려시대 일연이 쓴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고조선은 단군왕검이 기원전 2333년, 지금으로부터 약 4300여 년 전에 만들었다고 한다. 고조선은 우리민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라는 데 의미가 크며, 대략적인 영역은 요동 지방과 대동강 유역으로 추측된다.

단군신화나 고조선의 8개의 법률²⁾은 고조선 사회의 특성을 보여

2) (고조선에서는)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를 만들었다. 그것은 대개 사람을 죽인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주는데, 고조선은 농경사회, 계급분화, 사유재산이 성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조선은 중국의 한나라의 공격으로 왕검성이 함락되어 멸망(기원전 108년)하였으며, 이후 한나라에서 통치하는 4개의 군현이 설치되었다. 이 4개의 군현은 차츰 그 힘이 약해서 313년 낙랑군이 마지막으로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소멸하게 된다.

(2) 삼국시대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경쟁하고 협력하며 공존하던 시기를 일컫는다. 고구려는 압록강의 지류인 동가강 유역에 토착민들과 부여 계통의 이주민이 연합하여 건국하였다. 국가의 모습을 삼국 중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고구려이다. 척박한 환경은 고구려인들을 평야지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무예를 숭상하는 관습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고구려의 전성기를 가져온 왕은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다. 광개토대왕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영토를 크게 넓혔으며, 신라와는 밀접한 관련을 맺어 신라와 백제·왜와의 분쟁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은 고구려 발전의 전환기를 가져왔다.³⁾ 강해진 국력을 가다듬어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50만전을 내야 한다. 비록 용서를 받아 보통 백성이 되어도 풍속에 역시 그들은 부끄러움을 씻지 못하여 결혼을 하고자 해도 짝을 구할 수 없다. 이러해서 백성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아 대문을 닫고 사는 일이 없었다. 여자들은 모두 정조를 지키고 신용이 있어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농민들은 대나무 그릇에 음식을 먹고, 도시에서는 관리나 장사꾼들을 본받아서 술잔 같은 그릇에 음식을 먹는다. <한서>

- 3) (영락)9년 기해에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왜와 화통하므로, 왕은 평양으로 내려갔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왜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은 백성된 자로서 왕에게 귀의하여 분부를 청한다.'고 하였다. ……10년 경자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광개토대왕릉 비문>

옮기고, 남쪽으로 전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백제는 고구려 계통의 북쪽 유이민과 한강 유역의 토착민에 의해 건국되었다. 외교적으로 유리한 위치와 비옥한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던 백제는 먼저 건국한 고구려보다 나라의 기틀과 전성기를 빨리 누리게 되었다. 전성기를 누렸던 근초고왕 시기에는 중국 및 일본과 외교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즉위하면서 백제는 차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장수왕의 남진정책으로 한강유역을 빼앗겨, 지금의 공주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고, 왕권과 국력도 현저히 약화되었다. 백제는 공주지역에서 국력을 회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게 되었고, 다시 부여로 수도를 옮기면서 국력을 회복하게 된다.

삼국 중 신라는 가장 늦게 나라의 형태를 갖추었다. 지리적으로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뿐 아니라 토착세력의 힘이 강력하여 왕권을 강하게 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신라가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어 왕의 권력이 강해지기 시작한 것은 내물왕 때에 이르러서였다.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으로 백제·왜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며,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도록 하는데도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내물왕 이후 여러 왕을 거치면서 신라는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진흥왕 때에는 함경도 지방까지 영토를 확장하기도 하였으며, 백제의 성왕과 연합하여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유역을 점령하기도 하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성립과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는 달랐지만, 같은 시기에 공존하면서 협력과 경쟁하면서 성장하였다. 백제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에는 고구려와 신라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고구려가 남하 정책을 계속 진행하던 시기에는 백제와

신라가 연합하였다. 신라가 진흥왕 이후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고, 국력이 강해지게 되자 고구려와 백제도 힘을 합하게 되었다.

이 무렵 신라는 고구려와의 연합을 모색하였으나,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당나라와 손을 잡게 되었다.⁴⁾ 당과 신라의 연합에는 통일 후 대동강 이북 지역을 당에 넘겨주겠다는 약속이 바탕에 있었다.

신라와 당의 연합으로 우선 백제를 멸망시킨 후, 약 8년 뒤 고구려도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이후 신라와 당의 분쟁을 가져왔다. 신라는 애초 약속을 어기고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당나라에 맞서 기벌포와 매소성 전투를 하였으며, 당의 야망을 억누를 수 있었다.

신라를 통해 676년에 삼국은 통일되었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을 갖기도 한다. 첫째 통일된 영토가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잇는 선 이남에 국한되었다는 점, 둘째 통일의 과정에서 당의 힘을 빌렸다는 점이다. 한계점도 있지만 신라의 삼국통일은 그 의미 또한 크다. 첫째 우리 민족의 최초의 통일이었다는 점, 둘째 당의 한반도 전체 지배야욕을 물리쳤다는 점, 셋째 삼국통일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점 등이다.

(3) 통일신라와 발해

신라의 통일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대동강 이남지역은 신라로 통일되었고, 이북지역은 당나라의 영역에 포함되었으며, 이

4)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하기 전에 고구려와의 연합을 모색하였다. 당시 고구려의 실권을 잡은 연개소문은 트집을 잡아 김춘추를 가두었으며, 김춘추는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를 데리고 바다 속으로 간 자라와 죽음을 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토끼의 얘기에서 보여주는 외교술을 이용하여 고구려에서 빠져나왔다. 고구려와의 연합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김춘추는 당과 연합하여 삼국을 통일하는 기반을 다진다.

후 고구려 유민들의 발해가 건국된다. 신라는 통일 이후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백제와 고구려 유민을 같은 신라의 백성으로 여기고 수도 경비나 국방 경비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신라의 통일은 영토의 확장은 물론 국방력의 강화, 경제력의 성장, 문화의 발전을 가져왔다. 영토는 백제 전역과 고구려 일부지역을 아우르게 되었으며, 통일전쟁 과정에서 강화된 국방력에, 통일 후 백제군과 고구려군의 신라군에 흡수는 국방력의 강화의 결과를 가져왔다. 통일 이후에도 끊임없는 왕권 강화는 사회를 안정시켰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800년대 말엽, 진골귀족들 사이의 왕권경쟁이 치열해지게 된다. 중앙의 권력쟁탈전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어려움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농민들의 반란⁵⁾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회의 혼란한 상황을 반영하듯 이 시기 신라에는 불교 이외의 새로운 사상이 유행하며, 새로운 세력도 등장한다. 새롭게 등장한 세력들은 이후 통일신라에서 후삼국시대로 다시 고려통일 시기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발해는 고구려 멸망 이후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세운 나라이다. 대조영은 길림성의 동모산 근처에 도읍을 정하였고, 일본왕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해왕을 “고구려왕”이라고 한 데서도 알 수 있

5) 진성왕(887~897)3년 나라 안의 여러 주·군에서 공부(貢賦)를 나르지 않으니 부(府)의 창고가 비어 버리고 나라의 쓰임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신을 보내어 독촉하였지만, 이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도적이 별때같이 일어났다. 이에 원종·애노 등이 상주에서 의거하여 반란을 일으키니 왕이나마 벼슬의 영기에게 명하여 잡게 하였다.

『삼국사기』

듯이 고구려를 계승하였다. 발해는 건국 초기 신라와 당나라를 모두 적대적으로 대하였다. 북쪽의 돌궐과 바다 건너 일본과 친선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발해와 당의 관계는 이후 친선관계로 변화하였으며, 발해의 많은 학생들이 당에 유학을 갈 정도로 긴밀해졌다. 신라와도 건국초기에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교류하면서 경쟁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발해가 가장 융성했던 시기에는 고구려의 영토를 대부분 차지하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발전하여 당나라에서 “동쪽 바다에 융성한 나라(해동성국)”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4) 고려의 민족 재통일

신라 말기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지방의 세력들로 하여금 독자적인 정권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전라도 지방에서는 견훤이 지방의 군사력과 호족들을 기반으로 후백제를 세웠다.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는 신라 왕족의 후예로 세력을 키운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웠다가 나라의 이름을 태봉으로 바꾸었다.

후백제와 후고구려(태봉)의 성립은 신라와 더불어 3국의 형성을 의미하며, 이를 후삼국시대라고 부른다. 후삼국시대는 오래가지 않아서, 궁예를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한 왕건이 세운 고려에 의해 다시 통일하게 되며, 이로써 고려가 450여년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

고려의 통일은 큰 의미를 가진다. 통치제도는 과거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화하였고, 사상적으로도 불교와 민간신앙을 벗어나 유교정치이념을 받아들여 고려시대 이전보다 발전된 면모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통일신라와 고려의 차이점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우리민족의 역량에 의해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혼란스러운 초기 고려의 정치상황을 안정화시키며, 지방세력의 통합·억제를 통해 권력을 왕에 집중시킨 왕은 광종이었다. 광종의 뒤를 이어 성종 때에는 유교정치이념에 입각하여 지방관을 파견, 유학교육 진흥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중앙의 통치기구도 유교이념으로 개편하였다.

성종 대부터 성립된 중앙의 관료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새로운 지배층은 문벌귀족이라 불리며, 무신집권시기 이전까지 실질적인 지배층으로 등장하였다. 문벌귀족사회의 모순과 독점은 무신의 난이 일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려는 시기별로 이민족과 대립하기도 하였다. 10세기 말부터 11세기 초에는 거란의 침입이 잦았으며, 서희·양규·강감찬 등의 활약으로 막을 수 있었다. 거란족과의 대립 이후 안정되어 갈 즈음 여진족과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하여 여진족을 토벌하였으나, 여진족이 부족을 통합하여 금을 건국하고 강성해지자 고려는 금과의 무력충돌을 피하기 위해 군신관계를 받아들였다. 13세기 대륙에서 부족을 통합한 몽고족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고려를 공격하였다. 몽고족은 중국의 화북지방에 원왕조를 세우고, 고려를 사위의 나라로 삼아 내정간섭을 끊임없이 하였다.

원의 고려에 대한 끊임없는 내정간섭을 벗어나려 개혁을 실시한 사람은 공민왕이었다. 공민왕은 원나라의 쇠퇴를 기회로 2차례에 걸친 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내·외부적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다. 내부적으로는 권력을 독점한 권문세족들의 경제력 독점으로 인해 일반 백성들의 생활이 궁핍해졌으

며, 외부적으로는 흥건적과 왜구의 침략이 계속되었다. 고려의 어려운 상황은 고려의 새로운 지도층으로 등장한 지배층으로 하여금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고려 말 새로운 지도층은 개혁의 방향을 놓고 양분되어, 고려왕조를 유지한 채 개혁을 실행하자는 온건개혁파와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급진개혁파로 나뉘었다. 고려 말 흥건적 토벌 과정에서 전과를 올려 신망을 얻은 이성계가 결국 군사적 실권 장악과 함께 개혁을 실시하고 조선을 건국하였다.

(5) 조선의 건국과 발전

이성계를 비롯해 새로운 왕조 건설을 주장했던 혁명파는 실권을 장악한 이후,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고려 말 대토지와 막대한 부를 소유한 권문세족의 경제기반이 무너지고, 건국세력의 지지기반도 마련되었다. 이어 급진개혁파들은 고려왕조의 유지를 원하던 온건개혁파⁶⁾를 제거하고 이성계가 왕위에 올라 조선을 건국하였다.

조선의 건국은 고려에 비해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여 준다. 조

6) 온건개혁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정몽주이다. 정몽주는 조선건국에 동참하지 않고, 고려의 유지 속에서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정몽주의 쓴 시조(단심가)에 그의 의지가 담겨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낫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라

정공주를 설득하려 갔던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하여가〉라는 시조로 의지를 보여줬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칫이 얽어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어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선은 과거제에 의해 관직에 등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으며,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천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었다. 통치제도에 있어서도 행정의 효율성과 관리의 능력을 중시하였고, 독점적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런 점들은 조선의 발전된 면모를 짐작케 하는 것이다.

조선은 대외정책에서 명과 사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여진족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교린정책을 실시하였다. 16세기 경이 되어 일본은 여러 세력이 난립하던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조선을 침략하여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일본의 침략에 조선의 관군과 의병의 결사항전과 명의 지원으로 일본군을 격파할 수 있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진족은 후금을 건국하고, 조선에 친선을 요구하였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진족은 정묘년과 병자년에 난을 일으켰다.

왜란과 호란의 큰 전쟁을 겪은 조선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겪었으며, 왜란과 호란 이후로 조선후기로 접어들게 된다.

혼란스럽던 조선시대 후기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여 국가를 발전시키려 했던 왕은 정조였다. 그러나 정조의 뜻하지 않은 죽음은 일부 가문의 권력 독점의 결과를 가져왔다.

고종이 즉위하고,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일부 가문의 권력 독점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대외적으로 대원군의 집권 시기는 서구열강들이 중국·일본 등 아시아 각국에 통상을 요구하던 때였다. 조선을 향한 서구열강의 통상수교 제의에 흥선대원군은 수교를 거절하고, 천주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하였다.

이를 빌미로 프랑스의 공격을 받은 병인양요와 미국의 공격을 받

은 신미양요⁷⁾가 일어났다.

쇄국정책은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개화론이 대두되면서 개화정책으로 변화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이었다.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은 미국, 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등의 서구 열강들과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열강과의 불평등한 조약 체결과 열강의 이권침탈에 대응해 조선 내부에서도 근대국가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갑신정변은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자 급진개화파가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었다. 동학농민운동⁸⁾은 봉건적 제도와 외세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 농민들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사건이었다.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 등의 사건을 겪은 조선은 개혁이 피할 수 없는 대세라 인식하고 정부 주도의 개혁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갑오·을미 개혁이라고 한다. 갑오·을미 개혁은 3차례에 걸쳐 3년 가까이 실시되었는데, 그 내용은 서구 근대 국가의 정치와 경제 제도의 일부를 본받았으며, 조혼 금지, 과부의 재가 허용, 서구식 교육제도의 실시 등의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근대적 국가 건설을 위해 지식인들이 주도가 되어 만든 단체인 독립협회가 설치되어 활동을 하였다. 독립협회가 활발히 활동할 즈

7) 신미양요(1871)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계기로 일어나게 됐다.

8)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 중 대표적인 인물로 전봉준을 들 수 있다. 동학 농민 운동 당시 전봉준을 빗대어 부른 <파랑새 노래>는 지금까지도 유명하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너어이 나왔느냐 솔잎땀잎 푸룻푸룻키로 봄철인가 나왔드니 백설이 펼 펼 휘날리다 저 건너 청송녹죽이 날 속였네

음 고종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자주국가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나라의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경제 개혁 실시와 함께 황제의 자리에 올라간다.

우리 스스로의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을 때에도 열강들의 간섭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권 침탈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려 하였다. 철도 부설권, 삼림 채벌권, 광산 채굴권 등을 확보하려 경쟁하였다. 제국주의 국가들 중 특히 조선에서 이권을 획득한 국가는 일본이었다. 일본은 조선과 무역, 이권 침탈, 재정·금융 장악 등을 통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다.

열강들 중 일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권을 침탈하고 있었다. 이에 동학농민군과 지방의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에 대항하는 항일 의병전쟁이 시작되었다. 을사조약과 군대해산 등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의병들이 주도가 되어 항일운동을 벌였다. 항일 의병운동에 참여하였던 의병들은 국권을 빼앗긴 이후 국내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지자, 만주와 연해주 등으로 이동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의병운동과는 다르게 국가의 독립과 근대적 국가의 성립을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었다. 일본의 경제침탈에 대항하기 위해 국채 보상운동, 상권수호 운동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열강들의 침략에 대응하고 국가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교육·언론·학문연구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는 계몽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3.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1) 일제의 식민통치와 독립운동의 본격적 시작

우리 민족 스스로의 근대 국가 건설 노력과 열강의 침탈을 막기 위한 의병운동, 계몽운동, 경제구국운동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10년 일본은 우리의 국권을 강제로 침탈하였다. 일본은 국권 침탈 후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헌병이 경찰역할을 대신하는 식민통치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3·1운동을 계기로 무력으로 통치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 일본은 1930년 즈음까지 우리 민족을 분열시켜 통치하려는 정책을 실시한다. 이 시기 일본은 표면적으로 조선을 문화적으로 통치하는 듯하였으나, 탄압과 감시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일제의 대륙침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1931년부터 해방까지는 조선을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병참기지로 활용하였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하고 노동력을 강제 징발하였다. 이 시기 일본은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도 실시하였는데,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학교와 관공서에서 조선어의 사용과 학습을 금지하고, 성명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였다.

애국독립운동가들은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에도 국내 및 국외에서 끊임없는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일제의 무단통치로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이 어려워지자 만주와 연해주로 망명하여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이끌 수 있는 조직이 아직은 미약하였다.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의 윌슨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민족의 일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의)를

제창하여, 우리 독립운동에 활기를 주었다. 민족지도자들은 국내외에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독립선언식을 가지게 되었고,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3.1운동으로 독립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추진할 정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유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기본으로 하며,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3.1운동은 만주 및 연해주 일대의 독립운동이 활기를 되찾게 하였다. 1920년 6월에는 봉오동에서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 부대가 1920년 10월에는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군이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맞서 대승을 거두었다.⁹⁾ 잇단 일본군의 패배는 일본군으로 하여금 간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군 및 우리 동포들에게 보복하는 계기가 되어, 훈춘사건(1920.10)과 간도참변(1921) 및 자유시 참변으로 독립군이 시련을 겪게 되었다.

9)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대승은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 독립군들을 대대적으로 공격하는 계기를 가져왔다. 이런 상황을 노래로 표현한 독립군가인 <고난의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이 내뿜이 압록강을 건너올 때에
가슴에 뭉친 뜻 굳고 또 굳어
만주들에 북풍한설 몰아부쳐도
타오르는 분한 마음 꺼질 바 없고
오로라의 얼음산의 등에 묻혀도
우리 반항 우리 싸움 막지를 못하리라

피에 주린 왜놈들은 뒤를 따르고
괘씸한 사막 적 때는 앞길 막누나
황야에는 해가지고 날이 저문데
아픈 다리 주린 창자 실 곳을 찾고
저녁이슬 흠어져 앞길 적시니
쫓기는 우리의 신세가 처량하구나

1920년대 만주 및 연해주 지역에서의 활발한 독립전쟁은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독립군에 시련을 가져와 1930년대에는 만주지역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중국 관내로 이동하여 중국과 연합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여전히 만주지역의 무장독립전쟁도 맥을 지키고 있었으며, 지청천의 한국독립군과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조국광복회가 중심이 되었다.

중국관내로 이동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단체들은 독립운동에 있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을 조직하고, 산하에 조선 의용대라는 군대를 조직하였다. 조선 의용대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고,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활동의 한계를 느껴, 중국공산당의 해방구가 있는 화북지역으로 옮기게 되었고, 이전부터 활동하고 있던 조직과 연합하여 화북 조선 독립 동맹을 조직하고, 산하에 조선 의용군을 두었다. 조선 의용군은 화북지역에서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과 함께 항일전에 참여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에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 충칭으로 옮겼으며, 한국 독립당을 결성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¹⁰⁾을 창설하고, 1941년 12월,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또한 영국군의 요청으로 일본군을 상대로 한 첩보활동을 전

10) 독립운동가들은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독립군가를 많이 만들어 부르곤 하였다. 한국광복군의 대표적인 군가인 <광복군 행진곡>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삼천만 대중 부르는 소리에 젊은 가슴 붉은 피는 필필뛰고
 반만년 역사 씩씩한 정기에 광복군의 깃발 높이 휘날린다
 칼집고 일어서니 원수 치떨고 피뿌려 물든 골영생탑 세워지네
 광복군의 정신 쇠같이 굳세고 광복군의 사명 무겁고 크도다
 굳게 뭉쳐 원수 때려라 부셔라 한맘 한뜻 용감히 앞서서 가세
 독립독립 조국광복 민주국가 세워보세

개하였으며, 미군의 지원으로 국내 침투작전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2) 분단과정과 체제가 다른 두 개의 정부 구성

1945년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 통치로부터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가 맞은 광복은 직접적으로는 연합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데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국내외에서의 끊임없는 독립운동과 투철한 독립의지가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일본에 승리한 것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 연합국들이었다. 이는 8.15 광복 당시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함께 편의상 위도 38도 이북엔 소련, 이남엔 미군이 점령하게 하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38도선 이남에 들어온 미군은 우리 민족의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미군이 인정하지 않은 단체나 단체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포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나 조선인민공화국 모두 하나의 정파로 간주할 따름이었으며, 미군의 어떤 조치가 있기 전까지 식민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광복은 우리 민족에게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였지만, 세계 초강대국의 영향력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초강대국의 영향력에 대한 대응은 정치세력들의 강력한 연합이 필요하였으나, 이뤄지기 힘든 것이었다. 정치세력들의 분열 조짐은 해방 이전부터 예견된 일이기도 하였다.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크게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계열로 나뉘어 있었으며, 민족주의 계열은 좌우로 나뉘어 있었다. 독립운동 세력의 양상은 고스란히 해방 후 정치 세력의 분화, 즉 이승만, 김구 등의 우익세력, 김규식, 여운형 등의 중도세력, 조선공산당과 남조선노동당 등의 좌익세력으로 이어졌다.

국내에서는 정치세력이 분열하고 있을 때, 국외에서 승전국들(미국, 영국, 소련)은 한반도에서 임시정부의 수립과 강대국에 의한 신탁 통치를 할 것 등을 협의하였다.¹¹⁾ 이 내용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또 다른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걱정을 갖게 하였고, 신탁 통치 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우익과 찬성하는 좌익 간의 극심한 대립을 가져왔다. 대립은 심화되어 한반도 문제에 관한 회의의 결정 사항을 실행에 옮길 회의는 개최¹²⁾되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미국은 이와 함께 중도세력인 김규식과 여운형을 이용하여 정국을 타개하고자 좌·우합작운동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나, 여운형의 암살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의 통일정부 구성을 위한 의사를 더 이상 보이지 않았으며,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넘기게 되었다. 유엔은 남북한 양쪽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가 북한의 반대로 어렵다고 여겨지자, 가능한 지역이라도 선거를 할 것을 결정하였다.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이뤄지면 남북에 다른 정부가 수립되는 것은 강연한 일이었다. 이를 반대하던 김구¹³⁾, 김규식 등의 민족주의자들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남북분단을 막아보려 하였다. 이에

11) 모스크바에서 영국, 미국, 소련의 3국 외상이 모여 실시한 회의를 말한다.

12)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은 2차례에 걸친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그러나 신탁통치안 관련 미국과 소련의 견해차이가 심해지자,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게 된다.

13) 김구의 통일국가 건설 노력은 다음의 <3천만 동포에게 읊고함>에서 잘 드러난다.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주 독립적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 하는 이 때에 있어서 어찌 개인이나 자기 집단의 사리 사욕에 탐하여 국가 민족의 백년 대계를 그르칠 자 있으랴? (중략) 만약에 우리 동포들이 양 극단의 길로 돌진한다면 앞으로 남북의 동포는 국제적 압력과 도발로 인하여 분의 아니게 동족 상잔의 비참한 내전이 발생할 위험이 없지 않으며, 재무장한 일본군이 또다시 바다를 건너서 세력을 펴게 될지도 모른다.(중략)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1948년 4월 평양에서 남북 협상을 열었으나, 통일정부에 대한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통일정부 수립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여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1948년 5월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회를 구성하였다. 국회는 3권 분립과 대통령 중심제, 간접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출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을 만들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북한은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1948년 초에는 헌법 초안을 만들고, 군대를 창설하였다. 표면적으로는 남북 연석회의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 실시와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반대, 미군과 소련군의 동시 철수 등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남쪽에 정부가 들어서자 1948년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하였다. 이로써 우리 민족의 땅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었고, 분단이 고정되는 기초가 되었다.

건국 초기 북한은 소련의 사상체계를 따랐다. 1953년 스탈린의 사망으로 소련에서 스탈린 개인숭배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중국과의 대립이 표면화되자 북한은 소련체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다. 6.25전쟁을 겪으면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권력 강화 작업으로 반대 세력의 숙청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1958년 일반주민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김일성 중심의 통치 체제를 확립하였으며, 1960년대에 이르러 김일성과 그를 지지하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정권장악과 더불어 김일성 중심의 체제를 위해 유일사상 체제 확립을 주장하였고, 같은 맥락에서 정치의 자주화, 국방의 자주를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

(3) 6.25전쟁의 원인과 영향

남북한은 해방 직후 3년간의 미·소 군정 기간과 남·북한 정권이 성립한 이후에도 대립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국군과 북한군, 국군과 북한을 지지하는 무장유격대 사이의 충돌도 계속되고 있었다. 또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자본주의, 소련은 사회주의 체제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전쟁상황과 다름없었다. 즉, 냉전체제가 격화되고 있었으며, 더불어 중국에 1949년 10월을 기해 공산정권이 수립되었다. 중국은 내전 승리 후 조선의용군을 북한에 편입시켰고,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권이 안정된 북한은 군비증강에 매진하여 남한을 앞설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 1월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의 발언¹⁴⁾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상황이라 인식하게 하였다.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였지만,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대규모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 사전 예고 없이 시작된 전쟁에서 남한 측은 계속해서 밀리게 되어, 3일 만에 서울을 잃고 7월 말에는 낙동강까지 밀리게 되었다. 전쟁의 시작 후 유엔은 유엔군을 창설하여 국군을 지원하였고,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10월 말에는 압록강까지 진출할

14) 애치슨 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극동방위선은 알류산 열도, 일본 본토를 거쳐 류큐(오키나와섬)으로 이어진다. ……방위선은 류큐에서 필리핀으로 연결된다. ……이 방위선 밖에 위치한 나라의 안보에 대해서는 군사적 공격에 대하여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만약 공격이 있을 때에는…제 1차 조치는 공격을 받은 국민이 이에 저항하는 것이다.

애치슨, 아시아의 위기, 1950

애치슨이 언급한 극동방위선에서 한반도는 제외되어 있다.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군의 개입은 1951년 1월 초 다시 서울을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3월에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서울을 찾게 되었다.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전쟁은 국제전쟁의 양상을 띠자, 1951년 6월 소련이 유엔에서 휴전¹⁵⁾을 제의하면서 휴전회담을 시작하였고, 협상이 시작된 지 2년이나 지난 1953년 7월에 휴전이 성립되었다.

3년여의 전쟁은 많은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다. 인명피해¹⁶⁾는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 남과 북 사이에 이념대립과 적대적인 감정이 극대화된 것이다.

4. 현대 한국의 발전

광복 이전까지 한국은 일본인 기술과 자본력 위주의 경제였고, 만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남북 분단은 남과 북이 공업발

15) 휴전회담 시작은 1951년 6월 즈음이었으나, 여러 가지 의견 차이로 인해 휴전이 지연되었다. 결국 1953년 7월이 되어서야 휴전이 조인되었다. 휴전협상의 걸림돌 중 하나는 포로 송환 문제였다. 소설가 최인훈은 해방 이후 전쟁을 겪는 지식인의 고뇌를 다룬 <광장>이라는 작품을 통해 해방 후 상황을 표현하였다. 대강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주인공인 이명준은 해방 후 월북한 아버지로 인해 빨갱이로 몰리고, 남한 상황에 환멸을 느껴 월북하지만, 북한도 명령과 복종만 보일뿐이다. 1950년에 전쟁이 발발하자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 포로가 된다. 포로가 되어 남이나 북이냐를 선택에서 명훈은 중립국을 선택하고 중립국을 선택한 포로 송환선을 타고 가다가 바다에 뛰어들어 투신자살한다.

16) 6.25전쟁의 남북한 인명피해도 남한과 북한이 상당한 차이를 두고 발표하였다.

우선 군인 사상자의 경우 한국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남한은 약 987,000명, 북한은 약 926,000명이나, 북한 통일조선신문의 발표에 의하면 남한은 약 988,000명, 북한은 약 611,000명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간인의 경우도 한국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남한의 민간인 사상자는 약 804,000명, 북한은 약 200,000명이나, 북한 통일조선신문의 발표에 의하면 남한은 약 990,000명, 북한은 약 2,680,000명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인걸 외 편『한국현대사 강의』, 돌베개, 1998,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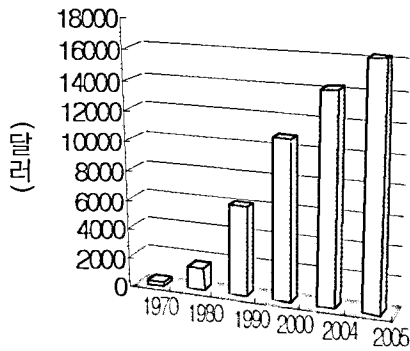
전의 정도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더욱 많았다. 특히 남한은 농업과 경공업 위주였기 때문에 그 사정은 더 힘들었지만, 미군정은 남한의 경제기반을 다지기보다는 경제원조 형태에만 주력하였다.

6.25전쟁의 발발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생산시설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군사비의 증가 등으로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였으나, 1958년경부터 미국의 원조가 줄어들면서 그 영향이 경기 불황으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생산재 공업에 투자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4.19혁명, 5.16 군사정변의 혼란스러운 국내 사정으로 경제개발은 박정희 정부가 세워진 이후가 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자본을 바탕으로 값싼 노동력이라는 우리의 장점을 살려 정부주도의 소비재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더불어 경제의 집중성장을 위해 1962년부터 1981년까지 4차에 걸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였다. 1, 2차 경제개발 계획에서는 소비재의 경공업에 치중하였으나, 3차부터 중화학공업 육성에 힘을 쏟기 시작하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된 1980년대 말부터 중화학 분야에서 첨단 공업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IT¹⁷⁾ 산업에 집중하였으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였다.

경제성장은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와 1950년대 약 60달러 남짓 되던 것이 2005년에 약 16,000달러로 200배 이상 증가

17)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말하며, 정보화시스템구축에 필요한 유·무형의 모든 기술을 일컫는 정보통신 용어이다.



1인당 국민소득의 변화
(출처: 통계청)

하였다.

그러나 고도의 성장을 하던 우리 경제는 1997년 말에 위기에 부딪혀,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단기간의 경제발전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쳐, 인구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을 가져와 2006년 현재 평균수명은 76.56세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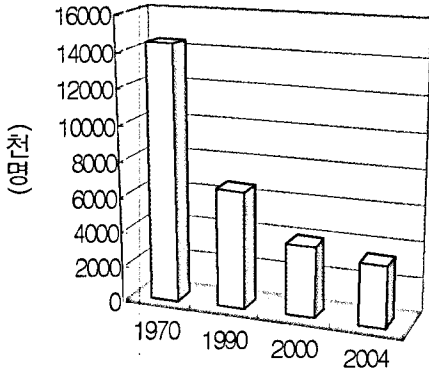
평균수명의 변화 (출처: 통계청)

연도	남자	여자
1960	51.1	53.7
1970	59.8	66.7
1980	62.7	69.1
1990	67.7	75.7
1995	69.6	77.4
2000	71.0	78.6

인구분포에 있어서도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선진국형 인구분포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정수준의 경제발전은 사회보장에 대한 의식을 높이게 되었고 일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여 노동운동의 양상도 변화¹⁸⁾하고 있다. 더불어 경제발전은 해결해

야 할 문제도 동반하였다.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 도시인구의 증가 및 도시문제 발생, 환경문제의 발생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

18) '노동'의 개념은 사회발전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노동운동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공업화 초기 정부 주도의 소비재 중심의 수출 중심 공업형태는 여성 노동자들의 비중이 커 노동운동도 여성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1970년대 이후 중화학 공업의 비중 증가로 남성 노동자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때문에 이후 노동운동은 남성중심으로 이뤄졌고,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로 노동 운동은 산업 노동자들 뿐 아니라 금융기관, 병원 등 사무직 노동자와 정부 투자 기관까지 확대되었다.



농가인구의 변화
(출처: 통계청)

라, 시민들의 노력이 경제문제, 환경문제, 양성평등문제, 정치발전문제, 종교문제, 언론감시활동 등의 아주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발전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여주는 예로 1988년 서울 올림픽¹⁹⁾의 성공적인 개최를 들 수 있다. 올림픽 개최는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국교수립 등 외교관계의 진전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또한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을 2002년에 일본과 공동개최하여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대외적인 인정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통일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대중 정부(1998년)에 들어서서는 특히 한반도 평화 정착에 노력하여 2000년 6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

19) 제24회 서울 올림픽은 1988년 9월 17일~10월 2일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159개국이 참가하였다. 제22회 모스크바 대회 때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하여 자유진영 국가들이 불참하였고, 제23회 로스앤젤레스 대회 때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불참사태가 있었다. 그러나 서울 올림픽에는 북한과 쿠바 등 몇 나라를 제외한 공산권 국가가 다수 참여하였다.

20) 남북 공동 선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하고 6.15공동선언²⁰⁾을 발표하였다.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난 발전은 국민들의 민주역량의 성숙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되어 민주국가 발전에 밑바탕이 될 것이다.

진국이후 역대 대통령(정부)

대통령	역대	재임기간
이승만	1, 2, 3	1948. 7~1960. 4
윤보선	4	1960. 8~1962. 3
박정희	5, 6, 7, 8, 9	1963. 10~1979. 10
최규하	10	1979. 12~1980. 8
전두환	11, 12	1980. 8~1988. 2
노태우	13	1988. 2~1993. 2
김영삼	14	1993. 2~1998. 2
김대중	15	1998. 2~2003. 2
노무현	16	2003. 2~

제5장

통일정책과 통일한국의 미래

1. 통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2. 분단 반세기 통일 노력은 어떤 것들인가?
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4. 달라진 오늘의 통일환경 여건은 어떠한가?
5. 통일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6. 통일을 위한 준비와 과제

통일노력과 통일한국의 미래

1. 통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의 통일은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통합하여 반만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온전한 민족국가를 재건하는 것이다. 분단된 조국 강토를 다시 하나로 통일하여 우리 민족이 자유롭게 살아갈 나라로 온전히 만들어서 자랑스러운 문화와 역사를 훌륭히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통일은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평화롭게 잘사는 나라를 이룩하기 위한 터전을 다지는 것이다. 분단 반세기의 역사는 한 마디로 우리 민족의 고난의 시기였다. 동족간의 이념적 갈등과 군사적 대립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 온 것이다. 일천만 이산가족들이 생이별을 하고 소식조차 알 수 없는 지경이며 심지어 전쟁의 불안과 공포를 생존의 위협을 막기 위해 언제나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낭비하면서 살고 있다. 해마다 남과 북이 허비하는 군사비용은 무려 260억 달러 상당(남의 200억 달러 상당과 북의 60억 달러 상당)이다. 이를 통일 건설비용으로 충당한다면 많은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통일은 민족의 우수한 재능을 발휘하여 무궁한 발전을 이룩하는 기반이 된다. 남과 북이 서로 길을 막고 있는 조건에서 민족의 힘이 분산되고 또 세계로 뻗어나갈 통로를 서로 막고 있다. 이 막힌 길을 열어야 민족이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은 우수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여 행복하게 잘사는 나라를 건설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인간사회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은 분단 반세기 동안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이념과 제도로 살아온 경험에서 충분히 증명된 것이며, 국제적으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였던 많은 국가들이 이제는 거의 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받아들인 역사적 사실에서도 증명된다.

그러나 우리의 분단 현실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상태이며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의 통일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잘 이해하고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이며 순리적인 접근 방도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을 함께 이루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도로서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실현하려 한다. 현실적으로 남과 북은 정반대의 정치이념과 심각한 경제적 차이가 벌어진 상태이며, 또 미·일·중·러 등 주변 관계국들의 이해가 서로 맞물려있는 특수한 조건과 환경이 통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민족 번영을 함께 이루면서 점진적으로 통일국가를 창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같은 입장에서 『민족 공동체 통일』을 강조한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당면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화번영정책』으로 내세운 것이다.

생각해 볼 문제

-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해방, 계급투쟁>방식의 통일 의미는 무엇인가?
- 남북 분단의 비용은 어떤 것들이며 얼마인가?

2. 분단 반세기 통일 노력은 어떤 것들인가?

지난 반세기 우리 대한민국은 조국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인내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비록 6.25와 같은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뼈아픈 고통과 분노를 참으면서 평화를 지켜 왔으며 70년대 이후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민족의 공동 번영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것이다.

(1) 남북 대화로 평화와 평화통일의 여건 조성 노력

1970년대 초, 동서간의 냉전 질서가 대화의 분위기(데탕트)로 바뀌면서 한반도에서도 대화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힘입어 우리는 1971년 8월 15일 광복절 대통령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 의지를 밝히면서 남북간의 대화를 제의하였다. 이어 1972년부터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조절위원회회담 등 대화가 시작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통일의 기본원칙으로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담은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기도 했다. 특히 1973년 6월 23일 우리는 남과 북이 서로 내정불간섭, 불가침, 문호개방,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할 것 등 평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고 이어 북측도 같은 날 오후, 남북간의 다방면 교류를 주장하면서 <고려연방제>라는 단일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하자는 등 비록 입장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평화와 교류 문제에 관한 입장을 제시하여 한때나마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당시 베트남의 공산화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여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자 돌연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으로 대미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하면

서 남북간의 대화를 모두 끊고 긴장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생각해 볼 문제

- 70년대 초, 국제정세의 변화는?
- 7.4 남북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우리는 1982년 통일방안을 구체화시킨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20개 시범사업>을 제시하였고, 통일국가의 미래 정책 방향으로서 민족, 민주, 자유, 복지를 추구할 것임을 아울러 밝혔다.

그 후 1987년도 개정 헌법에 평화통일을 명시하고 통일국가의 이념을 자유민주주의로 확정하여 통일의 방향을 구체화했다. 1989년에 통일방안의 개념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고치면서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주>를 표방하였으며, 1994년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다시 그 명칭을 고쳤다.

여기서 통일의 철학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공동체 건설이라는 2가지의 원리를 명시하였고 통일의 접근 과정을 3단계, 즉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그리고 <통일국가 완성 단계>로 구분하여 점진적이고 순리적으로 풀어 나가려는 우리의 대북 통일노력의 합리성을 돋보이게 하려 했다.

이후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른바 6.15 공동선



2000년 6월, 남북의 두 정상이 분단 반세기 만에 처음 만났다.(평양 순안공항)

언을 이끌어 냈고, 이 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느슨한 연방제>간의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남과 북이 통일문제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서 말한 <공통점>이란 무엇인가? 이 의미를 두고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기도 한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점은 양측이 공히 당장의 통일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완전한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이전에 과도기의 기간이 필요함을 서로 인정한 것 등은 한 단계 발전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해 볼 문제

-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의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 북한 핵문제는 우리의 평화와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정책과 민족의 번영 발전을 이루려는 통일방안이다. 이 방안에 의하면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하면서 남과 북이 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해 하나의 삶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된 삶의 터전 위에서 정치적 제도적으로 통일된 나라를 창건하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남북통일의 장애요인을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에 그 접근과정을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려 한 것이다.

(1) 화해협력 단계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 사이에 교류와 협력하는 관계를 발전시키고 이 관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넓히고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 남북연합 단계는 공동체를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남북연합은 하나의 온전한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이전에 통일을 준비하는 과도기의 기구이다. 다시 말해서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의 공동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공동체를 구체화해 나가는 가운데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 체제통합을 준비한다.

남북연합은 각기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자주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정상간의 회의, 남북의회대표간의 협의회 그리고 공동사무처 등 협의기구들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민족의 번영 발전을 위한 각

분야의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고 나아가 남북의회 대표들이 협의하여 통일헌법을 제정하게 된다.

(3) 통일국가 완성 단계는 하나의 통일국가를 창건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남북연합 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남북한 두 체제를 제도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정치 공동체를 실현하는바, 1민족 1국가 1정부를 완성하는 단계이다.

남북한 의회대표들에 의해 마련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와 선거를 통하여 통일된 하나의 국회,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여 명실상부한 통일국가를 창건하게 된다. 통일 선거는 통일선거법과 선거위원회를 마련하고 이에 의거하여 남과 북에 살고 있는 모든 동포들이 자유로이 선거에 참가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자유 총선거가 될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국가는 민족 구성원 모두가 주인으로 되며,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한 협력관계를 두터이 해 나가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볼 문제

-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의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 연방제 국가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4. 달라진 오늘의 통일환경 여건은 어떠한가?

(1) 새로운 국제질서

오늘의 국제사회는 하나의 지구촌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문호를 개방하면서 경제 경쟁을 치열하게 벌려 나가는 무한경쟁의 사회이다. 국경을 초월하여 자본과 기술의 투자 협력을 하며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의 장벽을 허물어버리는 국제적 협정(WTO, FTA 등)을 체결하며 나아가 정보 과학 기술 경쟁을 벌이는 등 생존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같은 민족끼리는 서로 단합과 협력을 모색하지만 종교가 다른 집단 사이에는 도처에서 대립과 분쟁을 일삼는 등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갈등과 긴장 현상이 가시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간의 대화와 교류를 바라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는 한반도의 남북한 관계가 평화적이고 안정되는 것이 자기 나라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는 우리의 남북한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향후 우리 민족의 통일 염원을 실현하는 데에도 좋은 징조로 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려운 문제는 너무 많다. 우리 주변 국가들의 대한반도 정책은 상당부분 자기나라의 이해관계에 예민하게 결부시키려 하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바, 동북아 지역의 정세는 적어도 한반도의 냉전구조 개선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이 체제불안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서 이른바 군사력 강화의 강경노선을 표방하고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

여 군사긴장을 고조시키려 하며 또 미·중 간의 군사적 견제 전략에 편승하는 등 한반도의 냉전 구조는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2) 남북 교류협력

가. 남북 철로 도로 연결

분단 반세기 동안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가 동부해안지역과 중서부지역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다시 연결되었다. 2000년 7월에 시작된 공사는 현재 일부 구간(동해선 철도는 통전터널-저진 사이 3.2Km 노반 공사)을 제외하고 모두 거의 마무리한 상태이다.

현재 철로는 개통되지 못한 상태이나,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남북간의 인적 물적 교류 협력 등을 위해 차량들이 거의 매일 300여 회 운행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는 통행이 불가능한 것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장차 남북간에 연결된 철도는 우리 민족의 힘이 세계만방으로 뻗어나갈 희망찬 미래가 될 것이다.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교통수단이 되며 또 중국과 중동, 서남 아시아로 뻗어 나가는 교통수단으로 될 것이다.

나. 인도적 지원 및 교류협력

남북한간에는 대북 구호물자 제공, 경제 교류협력사업 등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규모 역시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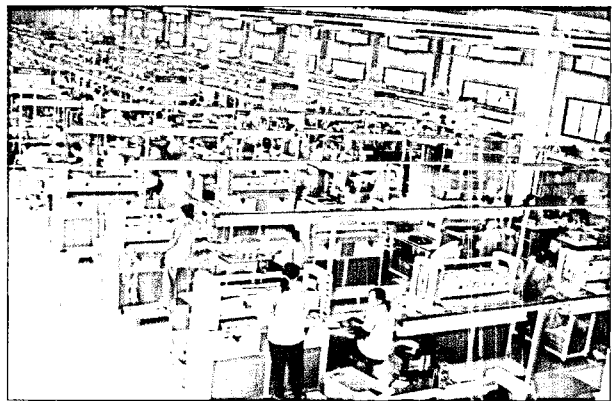
- 인도적 지원 사업

'95년도에 쌀 15만 톤을 대북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식량, 비료, 의류, 의약품 등 2005년 말까지 북측에 지원한 구호물자는 무려 13억 7천만 달러 상당에 이른다. 최근 몇 년간은 거의 해마다 식량 50만 톤, 비료 40만 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된 것이다.

-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개발사업

북한은 경제적 실리를 목적으로 '98년 11월부터 금강산 일부지역을 개방했고 2000년도에 개성공단 조성을 위해 개성 아래 일부 지역을 남한에 개방하였다. 금강산 관광 사업의 효과를 인식한 북측은 최근 금강산 관광지역을 내금강으로 점차 넓히고 또 고성 일대를 포함하는 경제개발 의욕도 보이고 있다. 특히 금강산관광을 육로로 일일코스로 할 수 있게 되자, 관광객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를 기회로 북한을 다녀온 인원은 2005년 말까지 무려 100만 명을 넘어섰다.

개성공단은 개성과 판문군의 일정 지역을 개발하여 남측의 기업이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고 북측이 부지와 노동 인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업체를 가동하는 공업지구이다.



개성공단에서 북측 노동자들이 남측의 기계 설비로 작업하고 있다.

연면적 2,000만 평에 공장부지 800만 평과 부대 생활 시설 부지 1,200만 평으로 설계된 것이다.

2005년 말 현재 시범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11개 회사이며 이 회사들은 벌써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는 남측 인원 500여 명과 북측 노동자 5,000여 명 등 5,500여 명이 함께 일을 하고 있다.

다. 남북간 교역

남북간의 교역은 이미 1989년도부터 이루어졌는데, 이 당시 교역 규모는 1,872만 달러 상당 정도에 불과한 것이나, 그 후 16년의 세월이 지난 2005년도에는 한 해에 무려 10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수준으로 발전했다.

라.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는 2000년도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활발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 1999년도까지는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가 불과 18건이었던 것인데 그 이후 2005년 말까지 남북간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는 78건으로 대폭 넓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이 분야의 주요 교류 내용으로는 대체로 문화 예술 방송 체육 학술 종교 등 다양하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여성, 청년, 노동계 등의 접촉 교류도 나타난다.

최근 남북 당국간에도 6.15 공동선언 및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고 또 북한 평양 축전에는 남측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몇 회에 걸쳐 전세기를 운행하면서 대거 평양

축전에 적극 동참하는 등 격의 없는 축제 분위기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것이다.

생각해 볼 문제

- 북한 경제정책과 주민의 식량난 등 생활 실상은 어떤가?
- 남북 교류 및 대북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5. 통일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1) 통일국가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질서, 경제적으로 경영의 민주화, 사회적으로 생활의 민주화 등 개인의 자유와 복지, 평등 평화가 실현되는 선진 민주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통일국가는 민족구성원 모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가 신장되는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제력을 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누구나 개인의 창의와 능력을 발휘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명랑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2) 통일 국가는 평화를 지향한다.

통일국가는 대외적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선도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주역으로 발전하려 할 것이다.

특히 동북아 지역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해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평화 중심 국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3) 남북 지역간 균형 발전과 사회적 갈등 문제 해소

통일된 국가는 남북의 지역간 경제적 격차와 이질감의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통합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통일 직후에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벌어진 남북지역의 차이가 많을 것이며 이러한 경제적 격차, 정치적 가치관의 차이, 사회·문화적 관습의 차이는 우리의 통일 후유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는 최대한 빨리 해소되어야 한다. 통일국가는 적극적인 통합정책을 추진하여 통일의 결실이 모든 국민들에게 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각해 볼 문제

- 북한의 통일 미래상은 무엇인가?

6. 통일을 위한 준비와 과제

(1) 분단 상황의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변화 실태와 북한 정세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

하며 주변 정세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특히 북한의 정치 정세와 사회 실상 등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평가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상적이거나 감정적인 판단은 자칫 통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파멸의 위험으로 빠지게 할 수도 없지 않다.

가. 북한 실상에 대한 이해

북한의 실체와 주민들의 생활 실상을 우리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북한 체제의 특성이 수령 중심의 지도사상과 제도이며 외부 세계의 모든 정보가 차단, 봉쇄된 가운데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활 실상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씩이나마 변화되는 사회 현상과 전혀 변화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려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새터민들은 북한에서 살아본 입장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북한사회의 실상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나. 주변 국제 환경에 대한 이해

주변 국가들은 한반도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다. 저마다 자기나라의 이익을 지키려고 한반도의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 한다. 우리는 주변 국가들의 이러한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잘 조절하여 통일국가를 이루는 데 협조하도록 설득해 나가야 한다.

(2) 통일에 대한 주인의식과 열린 자세 함양

가. 통일의 주인의식

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주역인 국민 각자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 앞당길 수 있다. 통일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며 책임이자 권리이다.

나. 통일의 안목을 열린 자세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북한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문화에 대해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같음>을 찾아내고 <같음>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처럼 열린 마음으로 대할 때 비로소 서로의 차이점을 줄일 수 있고 나아가 통일 차원에서 <같음>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있다. 위에서 지적한 바 <다름>을 인정하는 의미의 <열린 자세>가 무조건 찬성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그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되 차이를 줄여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3) 사회의 동질성 회복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지기 위해서는 우선 동질적인 전통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마음을 모아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며 이를 기초로 여러 가지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동질적 요소로 바꾸어

나갈 수 있겠다. 다행히도 언어는 다소 이질화된 부분이 있어도 의사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바, 이를 발전시켜 사회 각 분야의 생활에서 동질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남북한의 이질적인 부분만 강조하기보다는 동질적인 면을 찾아서 상호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생각해 볼 문제

- 통일로 인하여 개인에게 좋아질 일과 나빠질 문제는 무엇일까?

제 6 장

동북아시아의 역사 이해

1. 동북아시아 주변국가의 이해
2. 사회주의의 전환 과정
3. 현대의 국제관계



1. 동북아시아 주변국가의 이해

(1) 미국의 역사와 우리

17세기 초반 영국에서 신교도를 박해하자, 신교도의 일부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하여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 형태로 운영되다가 독립전쟁¹⁾(1775년 4월 시작)을 일으켜 식민지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던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무제한잠수함작전”을 계기로 연합국측에 참전하였다. 미국의 참전은 연합국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 계기를 가져왔으며, 이후 미국의 국제사회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기회 또한 가져왔다. 그러나 세계평화를 위해 조직된 국제연맹에 미국은 불참하였으며, 이로써 국제연맹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경제공황을 계기로 미국은 비교적 고립적인 자세를 버리고 국제협조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 전개과정과 전후 세계에서 미국은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이에 우리민족과의 관계가 한층 깊어지게 된다.

1866년 7월 셔먼호 사건은 처음으로 미국과 우리가 연관을 갖게 되는 계기였다. 이 시기 미국은 우리에게 우방국으로서가 아니

1) 미국의 독립전쟁을 다룬 영화는 많이 있다. 영화를 통하면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며, 이런 면에서 미국의 독립전쟁과 이전의 아메리카 식민지 쟁탈전인 영·프 전쟁을 보여주는 영화에는 《패트리어트-뉴 속의 여우》 등의 작품이 있다.

라 미국의 필요에 의해 통상을 하고자 하는 나라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서면호 사건은 1871년 신미양요(무력충돌)가 일어나는 계기였으며, 이런 이유로 북한에서는 서면호 사건을 ‘미제국주의’가 우리 민족을 침략한 최초의 사건이라 규정하고 있다.

1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일본이 연합국으로 전쟁에 참여하였으므로, 미국이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지 못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1943년 카이로 회담, 1945년 2월의 알타 회담, 1945년 7월의 포츠담 회담을 통해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를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시킬 것을 거듭 확인하였으며, 이로써 우리와 관계가 깊어졌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높아졌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과 소련은 1945년 한국의 38도선 분단점령을 발표했고 이어 9월 8일 미군이 인천에 상륙함으로써 3년에 걸친 미군정이 시작되었다. 한반도 문제의 UN이관으로 1948년 8월 15일 0시를 기하여 미군정이 폐지되었지만 6·25 전쟁의 발발로 다시 미군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이 시기 세계의 정세는 소련과 미국을 축으로 하는 냉전체제가 형성되고 있었고, 냉전체제를 잘 보여주는 곳이 한반도였다. 6·25전쟁 이후 미국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깊이 인식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정치적·군사적 관계는 매우 긴밀해졌다. 또한 전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여 안보를 다지고 경제원조를 강화했으며 전후복구사업 및 경제부흥사업을 적극 도왔다.

2) 1951년 휴전협정을 시작하여 1953년에 휴전을 조인할 때, 한국정부는 휴전협정에 반대외사를 밝혔다. 그러나 제3차 세계대전을 우려한 미국 측은 휴전협정 이후 한국에서 미군이 주둔하면서 방위를 도와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2) 러시아의 역사와 우리

17세기 러시아가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의 서유럽화를 추구하여 산업을 발전시켜 유럽경제에 편입되었다. 러시아의 산업화는 계속되었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전제국가였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전제주의의 대립으로 혼란은 지속되었다. 설상가상 격으로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에 패하게 되자 러시아 국민의 불만은 높아져만 갔고 1905년 ‘피의 일요일’ 사건을 계기로 황제로부터 입헌개혁을 약속받았다.

러시아에서의 자유주의적 입헌개혁이 점진적으로 실현될 무렵,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 러시아의 참전과 전쟁의 장기화는 국민의 불만을 가져와 1917년 3월 노동자들이 소비에트(평의회)를 조직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러시아의 마지막 왕조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3월혁명으로 구성된 내각은 같은 해 11월에 일어난 레닌의 사회주의혁명으로 막을 내리고 세계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였다.

1860년 러시아 제국이 연해주 일대를 획득, 국경을 접하면서부터 조선과 러시아는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열강들의 조선에 대한 이권침탈이 진행되고 있을 때, 조선은 견제세력의 하나로서 러시아를 끌어들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05년 이후 광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는 사실상 형식적인 관계에 불과하였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후 사회주의 세력과 조선공산당이 소련과 연계를 지속하고 있을 뿐이었다.

1945년 해방이후, 북한을 세력권 내에 편입시키려는 소련의 야심은 결국 북한에 소비에트 정치체제를 이식시켰고, 소비에트 연방

은 위성국가의 수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미·소 간의 냉전구조는 남북의 분단을 기정사실화했다. 1948년 9월 9일 정권수립 이후 소련 정부가 제공한 막대한 군사·경제 원조들은 고스란히 남침준비를 위해 충당되었다.

북한과 소련과의 갈등은 스탈린이 사망하고 1956년 2월 후루쇼프가 스탈린의 개인숭배와 1인 독재체제를 비난하고 나섬으로써 시작되었다. 1960~61년 중·소분쟁의 격화시기에 북한은 중국을 선택하여 이전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지도부는 한국과의 경제교류와 정치관계의 정상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양국간의 계속된 협의를 통해 1990년 9월 한·소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북한은 소련을 비난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소련의 법적 지위를 계승한 러시아는 2000년대 들어 대북관계 개선에 나서게 되면서 한반도 안보와 통일문제에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3) 중국의 역사와 우리

중국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의 하나인 황하강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중국 고대 한(漢)나라의 문화는 이웃한 지역에 영향을 주어 한자문화, 유교문화 등을 형성하여 동아시아문화권을 형성하였다. 송나라의 주자가 완성한 성리학은 이후 동아시아의 지배층의 통치 이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의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통상요구가 활발해 질 즈음, 중국 내에서도 여러 차례의 근대화운동이 일어났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왕조에 회의를 느끼고 있던 해외유학생들과 신식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중심이 되고 쑨 원이 앞장서 청조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데, 이것이 신해혁명이다.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을 선포하여 개혁을 시도하였다. 이후 중화민국이 순조롭게 운영되지 못하자,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결성³⁾되어 정치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결성 이후 서로 다른 노선을 걷다가 군벌(군사력을 바탕으로 강압적인 권력을 행사)과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하여 연합하였다. 하지만 쑨 원이 죽은 뒤, 뒤를 이은 장제스가 군벌타도를 완성하고 뒤이어 공산당을 추방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은 대장정을 통해 연안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 전면전이 일어나게 되고, 공산당의 신민주주의와 토지개혁 등이 농민의 지지를 얻으면서 국민당에 대해 승리를 거두고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성립(1949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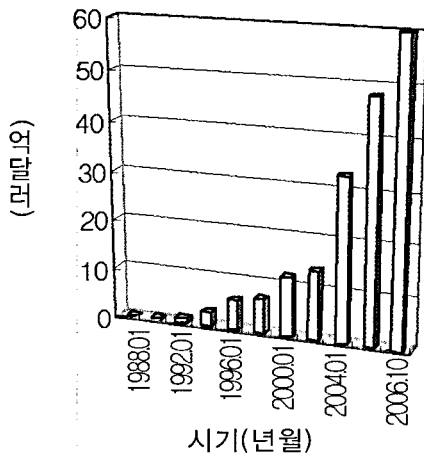
전근대사회에 우리는 교류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우리의 전통문화로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일본에 우리의 국권이 강제 박탈당한 후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본토 및 만주 등지에서 무장독립군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벌였다. 3·1운동 이후 상하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중국 혁명지도자들과 조선의 독립운동은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만주사변(1931)·중일전쟁(1937~45) 등에서 중국의 반일감정이 조선의 독립운동

3) 중국 공산당 결성에는 소련의 11월 혁명 이후 카라한 선언도 큰 영향을 주었다. 카라한 선언은 다음과 같다.
 “소비에트 정부는 제정 러시아가 중국에 대해 행한 일체의 침략 행위를 부인하고, 지금까지의 철도·광산·산림 등의 모든 이권을 무상으로 포기·반환하며, 또한 의화단 운동의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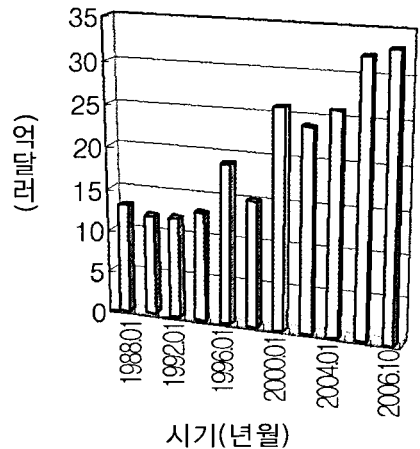
과 맞물려 중국은 조선의 독립지원을 공개적으로 벌일 수 있게 되었다.

1949년 중국인민공화국의 건국은 북한과의 연계는 지속되었지만, 남한과는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6.25전쟁에 중국이 북한 편에 참전한 후, 1992년 국교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교류가 사실상 단절되어 있었다.

한·중 양국은 중국의 경제개발 정책 및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공동번영에 공동의 이해관계로 1992년 8월 국교정상화 이후 교류·협력관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번영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제 기능을 할 것이다. 한·중 두 나라는 이미 중요한 교역상대국⁴⁾이며, 중국의 계속되는 개방 및 발전 가능성은 우리 경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대중국 수출액 (출처: 통계청)



대미 수출액 (출처: 통계청)

4)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이 미국보다 중국이 높아지고 있다.

(4) 일본의 역사와 우리

4세기경 일본은 점차 통일 국가를 형성하고, 7세기 중반 즈음 중국과 한반도의 영향을 받아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였다. 8세기 말에 이르러 왕권이 약화되자, 무사가 독자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12세기 즈음 무사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는 것을 “막부”라고 하며, 막부는 이후 일본이 개항하고, 메이지 유신(1868)을 단행할 때까지 천년 이상을 지속한 정치 형태이다.

일본은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상을 요구하던 1800년대 중반 개항을 하였다(1854년). 이후 일본은 메이지유신으로 봉건제 폐지, 중앙 집권적 입헌 군주제 실시, 신분제 폐지, 토지 제도 개혁, 교육 개혁 등 서구의 제도를 받아들여 개혁을 실시하였다. 메이지 정부의 개혁은 일본의 산업혁명이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19세기 말에 이르러 일본은 서구 열강과 어깨를 견줄 만하게 되었다.

일본의 정치·경제적 성장은 일본이 제국주의의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 첫 시도는 타이완을 침략하고 류큐를 합병하는 것이었다. 또한 조선과 강화도 조약을 통해 조선에서 서구 열강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어 조선에 대한 이권을 놓고 일어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조선을 식민지화하는데 박차를 가하였다.

조선의 주권을 강제로 점유한 이후 일본은 대륙 침략을 계속하였다. 1920년대 말 군부가 주도가 되어 정치를 진행하였으며, 만주에 허수아비 정부인 만주국을 설치(1931)하고 대륙침략의 기

회를 노렸다. 이후 화북으로 진출하여 중국 침략 전쟁을 개시(1937)하게 된다. 중·일 전쟁의 영향을 경계한 미국이 영국과 함께 일본의 경제를 봉쇄하자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은 미국 및 연합군에 대항하여 싸우기 역부족이었으나, 미국의 항복 권유도 무시하였다. 1945년 여름 미국은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하여 항복을 받아냈다.

한국은 일본에 대해 문화전수자적 위치에 있었다. 백제와 고구려는 한자·불교문화 및 여러 제조기술을 일본에 전수하여 일본의 고대문화 형성에 주요역할을 했다. 1854년 미일화친조약의 체결과 함께 오랜 쇠국을 마치고 한국에 앞서 문호를 개방한 일본은 급속하게 근대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1868년 메이지 유신의 단행과 함께 일본은 조선에 개국을 강요했으며, 강압으로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맺고 치외법권·관세면제 등의 특혜와 이권을 일방적으로 따냄으로써 한국 침략의 발판을 다지기 시작했다.

일본은 청일전쟁·러일전쟁의 승리의 여세를 몰아 한국으로 하여금 한일의정서·한일협약을 맺게 하고 1905년에는 을사조약을 맺어 통감부를 설치했으며 1910년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합병 후 설치된 총독부를 위시하여 식민지 통치를 실시한 일본은 무단정치를 통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했으며 한국을 일본상품의 시장 및 식량·원료 공급지로 개편하기 위해 경제적 침탈을 했다.

해방이후 한·일 외교관계의 정상화는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이뤄졌다. 정부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으로부터 제

공방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4년 한일 회담을 실시하였고, 한·일 협정을 비준하였다. 한·일 국교 정상화의 결과 동북아시아에서는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한·미·일 공동 안보 체제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은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공동대응보다 경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체제가 만들어지는 계기를 가져왔다. 세계적으로 지역경제가 대두되고, 블록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간의 경제협력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일관계는 좁게는 자국의 실리추구와 넓게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목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국간의 불행했던 과거사를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이다.

2. 사회주의의 전환 과정

(1) 사회주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1700년대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생산방식의 변화는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가내 수공업 형태에서 공장제 기계공업 형태로 변화된 이후,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산업상의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를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산업혁명으로 근대자본주의가 확립되어, 농촌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고 산업자본가들의 힘이 커졌다. 더불어 사회적 문제점들도 생겨났다. 일거리를 찾아 도시로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주택, 위생 문제 등이 발생하였으며, 저임금과 부녀자 및 미성년자의 취

업 등 노동 문제⁵⁾가 발생하게 되었다.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회적 문제들은 산업자본가와 임금 노동자 사이의 대립을 가져왔으며,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이념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회주의이다.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계몽과 설득을 통하여 생산과 소비를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이상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초기 사회주의의 계몽과 설득으로는 이상사회 건설이 어렵기 때문에 혁명으로 자본주의를 전복시키고,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하리라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주장하게 된다. 과학적 사회주의를 마련한 이가 마르크스와 엥겔스⁶⁾이다. 사회주의 운동은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국제적인 혁명운동으로 발전하였고, 이를 위해 제1, 제2 인터내셔널(국제 노동자 협회)가 조직되기도 하였다.

(2)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

러시아는 1904년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 등으로 1905년 1월

5) 다음은 1830년 영국 의회에서 실시한 아동 노동의 실태 조사의 일부이다.

〈사무엘 쿨슨의 증언〉

문) 지금 몇 살입니까?

답) 23살입니다.

문) 몇 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했나요?

답) 6살 때부터입니다.

문)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합니까?

답) 아침 5시부터 저녁 7시인데, 바쁘면 9시까지 일합니다.

문) 일을 게을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 채찍질을 당합니다.

문) 다리의 장애는 어찌다 생겼습니까?

답) 방적기의 방추 멈추는 일을 하면서 13살 때부터 무릎이 휘고 발목이 약해졌습니다.

지금도 너무 아픉니다.

《고등학교 세계사》, 금성출판사

9일 피의 '일요일'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입헌 군주제 헌법을 제정하고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절대 권력을 누렸으며, 지주와 부농의 이익을 보호하는 개혁만을 추구하였고, 혁명 세력은 철저한 탄압을 받게 되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중 러시아 민중은 정부와 싸우면서 노동자, 농민, 병사들은 자신들의 대표 기관인 소비에트를 결성하였고, 1917년 3월 혁명을 통해 전제왕권을 무너뜨리고 러시아 공화국 임시정부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민중들의 염원과 반대로 전쟁을 계속하였다. 이에 레닌의 지도 아래 11월 혁명이 일어났다. 레닌의 혁명정부는 '평화에 대한 포고'와 '토지에 대한 포고'를 발표하여 전쟁 중지와 토지 사유의 폐지를 선언하였다. '노동자, 농민의 정부'를 내세운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1922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른바 '소련'을 수립하는 한편 레닌은 각 나라의 사회주의자들을 연결할 수 있는 '코민테른(공산주의자 인터내셔널)'을 건설하여 혁명의 세계화에 나섰다. 코민테른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노동 운동과 식민지 민족해방 운동을 지원하여 사회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3) 소련 사회주의의 변화와 붕괴

레닌 사후 스탈린은 '1국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1928년 소련의 유일한 실권자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후 독재국가기구의 건설

6) 마르크스는 유대인 법률가의 아들로, 베를린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후 신문편집인이 되었다. 그는 1843년에 파리로 망명하였으며, 영국 맨체스터의 섬유공장 운영을 맡았던 엥겔스와 함께 이론을 성립하게 되었다.

을 통하여 독재체제를 강화하면서 정치적 반대파의 숙청을 단행하였다. 소련의 공산독재는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였으며, 타국의 공산화를 꾀하기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계속되는 독재 정치는 전쟁 후 냉전체제가 성립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즉 스탈린은 공산당을 지배하고, 공산당은 정부를 장악하고 통제하였다.

소련은 동유럽에도 스탈린 체제를 수출하였고, 동유럽 국가들은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와 소련식 계획경제를 강행하였다. 더불어 엄격한 이데올로기 교화가 진행되고 시민적 자유 및 종교의 자유가 탄압되었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고 후르쇼프가 정권을 장악하여 스탈린의 개인 숭배의 병폐를 극복하고자 하는 탈(脫)스탈린화(化)를 시작하였다. 후르쇼프의 정책은 공산당의 권력독점을 배재할 수는 없었으나, 국내적으로 경제의 변화와 국민 생활의 개선, 문화·예술의 일정한 자유 허용 등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국제적으로는 냉전 완화의 기미를 보여주었으며, 동유럽 위성국가들의 변화를 자극하였다. 그러나 스탈린 시대에 만들어진 체제 자체를 개혁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한편 보수 성향의 브레즈네프의 등장으로 탈스탈린화는 제한되기 시작하였다. 1인 독재 대신 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가 도입되었으며, 동유럽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었다.

1982년 브레즈네프 사망 이후 소련은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는데, 안드로포프와 그 뒤를 이은 체르네펬코는 1982~85년에 걸쳐 집권했지만 위기 극복에는 실패했다. 고르바초프가 1985년 3월 서기장을 맡아 정치·경제재건 계획인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정책을 실시하고, 글라스노스트(개방)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글라스노스트 정책은 언론에게 더 폭넓게 표현의 자유를 주었고, 신문의 사설은

위축된 경기에 대한 불만과 이런 상황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함을 꼬집었다.

고르바초프는 공산당 일당 독재를 완화하고 시장 경제를 도입하려 하였다. 외교적으로는 아프카니스탄에서 철수하고, 핵무기 감축 조약을 통하여 미·소 간 긴장 완화를 꾀하였다. 그러나 '개방'은 당과 국가에 대한 불신을 더 깊게 만들었고, '개혁'도 찬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내부 갈등이 불거졌다.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이 본격화되면서부터 소련을 구성하고 있던 여러 공화국에서는 분리 독립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고르바초프는 연방 해체를 막기 위하여 개별 공화국의 권한 강화, 공산당의 권력 독점 폐지와 다당제 도입, 시장경제 확대 같은 제2의 개혁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불만이 컸던 공산당은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조치에 대해 1991년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나 쿠데타는 국내외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민중들의 저지로 실패하게 되었다. 이후 1991년 옐친 대통령의 러시아 공화국을 비롯한 여러 공화국이 소비에트 연방을 탈퇴하고 따로 '독립국가 연합(CIS)'을 결성하였고, 마침내 소련은 해체되었다. 1922년 탄생한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 7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

(4)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소련의 통제⁷⁾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와

7) 1968년 소련은 브레즈네프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자유화바람을 잠재우며 "사회주의 공동체 이익은 각국의 개별적 이익 보다 우선한다"라는 말로 위성국가를 통제하였다.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소련의 위성국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지고, 실질적으로 위성국의 자결권을 인정한 후, 위성국에서의 자주·민주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로 1989년부터 1990년에 걸쳐 동유럽 공산주의체제는 일제히 무너지게 된다.

폴란드에서는 1988년부터 자유노조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1989년 반(反)공산당세력의 권력을 인정받았다. 1989년 6월 실시된 국회 선거에서 자유노조가 승리하여 공산주의 체제는 무너지기 시작하여, 1990년 1월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포기하였다.

헝가리의 실질적인 개혁은 공산당 내부의 개혁파에 의해 시작되었다. 1966년 경제개혁과 민주주의 확대 움직임이 있었으나, 소련의 브레즈네프 독트린⁸⁾으로 실패하였다. 1987년 9월 민주화를 위한 ‘민주포럼’이 결성되고 개혁이 본격화되어, 1989년 1월 공산당 이외의 정당과 집회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또한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국경사이의 철조망을 제거함으로써 동독시민의 서독으로의 탈출길을 열어주어 동독 붕괴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1989년 복수정당제 국가가 되고,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결정하였다.

동독시민의 탈출로를 헝가리가 보장한 이후 동독의 동요는 더해만 갔다. 100만명 규모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1989년 11월 9일 동독 공산정권은 베를린 장벽을 개방하고, 모든 국경지대에서 서독으로의 이주를 가능하게 하였다. 마침내 1990년 10월 3일 동독은 서독에 흡수 편입되어 독일이 통일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프라하의 봄’ 이후 침체되어 있다가 1989년 인

8) 사회주의 공동체 이익은 각국의 개별적 이익보다 우선한다

접한 폴란드와 헝가리의 영향으로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공산당은 헌법을 개정하여 민주화세력과의 연립내각을 형성하여 복수정당제를 준비하면서 공산독재를 종식시켰다.

동유럽권의 공산체제 붕괴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스스로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 중이던 소련이 통제를 포기하고, 이웃으로부터 개혁과 민주화의 영향이 적지 않았으며, 서유럽과의 격차도 작용하였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요인은 공산체제의 비효율적인 중앙통제의 계획경제와 산업전반에 대한 관료주의적 통제와 행정적 경영이 초래한 경제적 침체와 기술의 낙후였다. 국민 대다수의 생활수준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자유와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었다.

(4) 중국의 변화

1949년 중국인민공화국이 중국대륙을 장악한 이후, 마오쩌둥의 일인독재하에서 중국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전문지식의 경시, 비과학적 정책의 남발 등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마오쩌둥의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 홍위병을 앞세운 ‘문화대혁명’을 강행하였다. 그 결과 경제는 물론 수많은 인명의 피해가 초래되었고 교육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마오쩌둥 사후 집권한 덩샤오핑 정권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것이 좋은 고양이다”라고 하였듯이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의 결합을 지향하여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위해 동남부해안 지역에 경제특구와 경제 개방구를 설치하였다. 또한 1997년 홍콩을

회수하고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다.

3. 현대의 국제관계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 간의 공공연한 제한적 대결상태로 '냉전체제'가 형성되었다. 1953년 스탈린의 사망은 냉전이 다소 완화되는 계기를 가져왔지만, 두 진영의 관계는 여전히 소원했다.

이후 미국과 소련이 첨예한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를 탈냉전 시대라 부른다.

국제관계는 이데올로기 중심의 관계에서 실익 추구의 관계로 변화하여 1967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닉슨 독트린'⁹⁾을 발표, 탈냉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었고, 1972년에는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방문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유럽에서는 1970년 소련-서독 불가침 협정, 1971년 4대국 베를린 협정이 체결되었고, 1975년 <유럽 안보협력회의 35개국 정상회담>에서는 현상인정과 내정불간섭이 선언됨으로써 안정된 국제관계에 이르렀다.

9) 닉슨독트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2. 미국은 아시아 제국(諸國)과의 조약상 약속을 지키지만, 강대국의 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3.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군사적인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으며 자조(自助)의 의사를 가진 아시아 제국의 자주적 행동을 측면 지원한다.
4. 아시아 제국에 대한 원조는 경제중심으로 바꾸며 다수국간 방식을 강화하여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피한다.
5. 아시아 제국이 5~10년의 장래에는 상호안전보장을 위한 군사기구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 모든 화해의 움직임은 도전받기 시작한 미·소의 이익을 현상대로 유지하려는 강대국 간의 질서였을 뿐이었고, 미·소 강대국이 직접적으로 충돌하지는 않았지만 대리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라는 일련의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동유럽 공산정권의 잇단 붕괴에 이어 동·서 냉전의 상징이었던 동·서독이 하나의 독일을 형성하게 되면서 냉전이 해소되었다. 냉전의 해소는 세계평화가 유지될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그러나 이념 대립의 약화는 평화로 지속되는 듯하였으나 지역, 민족, 종족, 종교간의 대립으로 분쟁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국지적인 분쟁의 해결과 세계의 평화유지를 위해 국제사회는 국제기구를 만들었으며, 냉전체제 종식 후 국제기구의 영향력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제기구는 두 개 이상의 국가들이 조약을 통해 구성되어 국제법상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 조직체이다. 대표적 국제기구인 UN은 6개의 주요기구가 있고, 주요기구 산하에는 여러 개의 보조기구와 전문기구가 구성되어 있다.

또 다른 현상은 경제의 세계화와 블록화이다. 오늘날 경제의 세계화는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된다. WTO의 설립은 각국의 무역에 있어 관세 및 그밖의 무역 장벽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국제 무역 관계에서 차별대우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 블록들이 형성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라틴아메리카 통합 연합(ALADI) 등을 만들어 경제상 지역적 통합을 꾀하고 있다.

현대 국제관계는 경쟁과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념·국경을 초월하여 경제의 무한 경쟁 체제로 접어들었으며, 냉전체제 종식 후 자본주의의 발달은 민족이나 국가의 이익을 우선한 경제적 민족주의를 발전시켰다. 경쟁과 더불어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협력도 필수적이다. 대표적으로 인류의 평화를 위해 전쟁을 방지하고, 지구 온난화·산성비의 증가·오존층의 파괴 등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협력이 필요하다.

현대사 연표

연도	세계 역사	연도	한국 역사
1941	태평양 전쟁		
1943	카이로 회담		
1945	국제연합 탄생	1945	8.15광복
1947	코민포름 결성	1947	유엔 한국위원단 구성
1948	세계 인권 선언	1948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9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950	6.25전쟁
1956	헝가리와 폴란드 반소 폭동	1953	휴전협정 조인
1959	유럽경제공동체 성립	1960	4.19혁명
1962	쿠바 봉쇄	1961	5.16 군사 쿠데타
1968	체코슬로바키아 민주화선언	1962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
1969	아폴로 11호 달 착륙	1963	박정희 정부 수립
		1965	한, 일 조약 비준
1971	중국의 유엔가입	1970	새마을운동 시작
1972	닉슨 중국 방문	1972	7.4남북공동성명
1976	미국 카터 대통령 당선	1973	6.23평화통일선언
1979	소련, 아프간 침공		
	중국과 미국의 국교 회복	1981	전두환 정부 출범
1985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 취임	1987	6월 민주항쟁
1988	소련 고르바초프의 개혁	1988	노태우대통령 취임 서울 올림픽 개최
1989	베를린 장벽 붕괴 중국 천안문 사태	1989	한국, 헝가리 수교
1990	독일의 통일		
1991	소련 보수파 쿠데타	1991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1992	소연방 해체	1992	한, 중 수교
	동유럽 공산권 붕괴	1993	김영삼 대통령 취임
1993	유럽연합 출범	1994	김일성 사망
1995	세계무역기구 출범(WTO)	1998	김대중 대통령 취임
		2000	남북정상회담 개최
2001	9.11 세계무역센터 테러	2002	한·일 월드컵 개최
2003	미국, 이라크 침공	2003	노무현 대통령 취임

제7장

문화분화의 이해

남한문화의 이해

1. 가치관과 정서에 대한 이해

집단별로 공유하는 문화가 다른 것은 당연하다. 동일한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문화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 하물며 60여 년 동안 분단되어 있었던 남과 북의 문화가 같기를 바라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한 집단이 둘로 나뉘어져서 서로 다른 환경에 놓였을 때, 그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문화적 행태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들 집단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특징까지 쉽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대인들이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으나 그들의 기질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중국인들이 어느 나라에서 자리를 잡았든 그들의 상술은 세계가 인정하게 되는 것 등은 모두 특정 민족이 지닌 보편적인 특징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되기 이전부터 지니고 있던 우리만의 보편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1) 한민족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

가. 정(情)을 중시함

예로부터 우리의 조상들은 정을 중요하게 여겼다. 희로애락이 담긴

주변의 사건에 쉽게 마음을 열어 감정을 드러내고, 주위의 어려움에 발 벗고 나서는 것 등은 모두 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서 때문이다.

나. ‘나’ 보다는 ‘우리’ 의식이 강함

‘나’ 하나만의 이해관계에 얽매이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나’ 하나가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공동의 이익 혹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내 것을 버리는 것이 익숙한 민족이었다.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천의식을 진행하거나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서낭제를 지내던 것, 지신밟기를 하더라도 마을 공동신을 먼저 모신 다음 가가호호 집의 신을 모시던 전통의식 등은 모두 ‘나’ 보다는 ‘우리’ 를 중요하게 여기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언어에서도 드러난다. 영어로 ‘my house(나의 집), my family(나의 가족)’ 를 한국어로 ‘우리 집, 우리 가족’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두 ‘우리’ 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상부상조정신을 중시함

힘든 일을 혼자 처리하기보다 여럿이 힘을 합쳐 함께 처리하는 정서이다. 농사철에 품앗이를 하는 것, 집안의 경조사에 하객이나 조문객이 십시일반 가지고 온 부조금으로 경제적 부담을 더는 것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이웃이 어려울 때 돕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음으로써 생활의 원활한 진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 예의를 중시함

외국 사람들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극찬을 받을 정도로, 어른을 공경하고, 아래 사람에게는 모범이 되는 언행을 보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내 부모, 내 형제뿐만 아니라 이웃의 어른들에게도 공경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 또한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지금도 외국 관광객들로부터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 집에 온 손님들에게 대접을 잘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남북으로 분단되기 이전 전통시대부터의 우리 조상들은 제시한 것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관과 정서를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보편적인 특징은 지금 현재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특징에 바탕을 둔 생활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편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남과 북에서 각각 태어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생활할 때, 같은 상황을 놓고도 서로 다른 사고를 하고, 서로 다른 언행을 하고,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 물론, 어느 쪽의 사고, 언행, 반응이 맞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고·언행·반응을 보이게 된 연유가 무엇인지부터 아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고·언행·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안다는 것은 곧, 상대의 사고·언행·반응의 태도에 대해 거부반응보다는 이해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2) 시대의 변화에 따른 남한의 사회환경과 정서 변화

남과 북이 공동의 보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대의 흐름이라는 큰 물줄기는 막을 수가 없었다.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남한의 경우, 사회환경에 있어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남한 사람들이 지니게 된 정서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가. 사회환경의 변화¹⁾

▶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의 변화

핵가족이 늘고 독신자도 많아져 가구당 평균 가구원이 2005년 11월 현재, 2.9명으로 조사되었다. 조부모와 부모, 자식이 한 지붕아래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진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아이 많이 출산에서 아이 적게 출산으로의 변화

2005년 12월 현재, 가임여성 1인당 1.08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2004년 1.16명에서 0.08명이라는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²⁾. 더구나 미혼여성 가운데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 13%,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23.4%를 각각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 출산율의 저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 여기에서 사용하는 통계는 2005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와 2005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2) 2004년 기준, 일본 1.29명, 미국 2.04명, 영국 1.74명, 프랑스 1.90명, 독일 1.37명, 체코 1.23명이었다. 참고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출산율은 1.6명이었다.

▶ 안방중심 생활에서 자기방중심 생활로의 변화

1가구당 평균 2.9명의 가구원으로 구성이 되는 까닭에 자연스럽게 1인 1방 갖기가 이루어졌다. 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공간적인 면에서 독립적인 구조를 지니게 된 것이다.

▶ 공동 놀이문화 향유에서 개인 놀이문화 향유로의 변화

개인방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 윗놀이, 널뛰기, 장기, 바둑 등 여러 명이 함께 어울려서 놀던 공동 놀이문화의 자리에 컴퓨터, 게임기, 텔레비전, 휴대전화 등 개인 놀이문화가 대신하게 되었다.

나. 정서의 특징

▶ 개인중심의 정서 형성

독립적 공간이 늘어나는 주택구조에, 형제애를 통한 사회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 또한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개인 중심의 정서를 가져왔다. 다시 말해서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다³⁾.

▶ 개성중시 정서 형성

개인 중심 생활은 획일화⁴⁾ 문화를 어색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3)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개인주의는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기주의는 내 것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개인주의는 내 것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것도 중요하다는 의식을 동반하게 되고, 후자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누르거나 빼앗아도 상관이 없다는 의식을 동반하게 되었다.

4) 획일화: 모두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차별이 되지 않는다는 뜻

개개인의 특성이 드러난 문화를 향유하는 정서의 구축을 가져왔다.

▶ 대중 속의 고독 증상 출현

대가족 제도에서 살 때와 비교했을 때,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관여를 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도 되었다. 따라서 같은 공간에 함께 있으나 섬에 남겨진 것과 같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3) 체제와 이념의 변화에 따른 남북의 사회적·정치적 차이

북 한	남 한
당이념 중심	법질서 중심
집체(집단)활동 중시	개인활동(개성) 중시
국가이익 우선	개인 인격 존중 우선
가부장적 체제	가족 구성원 의견수렴 분위기 형성

(4)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국가 관계 양상 비교

관 계	북 한	남 한
개인 ↔ 개인	배려문화, 감시문화 혼재	배려문화, 무관심문화 혼재
개인 ↔ 국가	국가 의존성 높음	국가 의존성 낮음

2. 남한사람들의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

(1) 연령별 문화 실천과 특징

가. 청소년문화

청소년 집단은 성인집단과 대비, 차별적인 양태⁵⁾에 대해 관심이 높다. 성인집단과는 구별되는 자신들 특유의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하며, 그들의 옷차림이나 머리모양, 말투, 문화적 취향 등을 통해 표현된다. 외양뿐만 아니라 가치관에 있어서도 기성세대와는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와 같은 양상은 기성세대의 문화를 촌스러운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로 인해 청소년 집단이 보여주는 문화는 다양하고 감각적인 것으로 존재한다.

하루 24시간 중,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이다. 학교에서의 생활은 당연히 수업과 학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여타 시간도 입시와 관련하여 진행이 된다. 그러나 몸은 학교에 있으나 마음은 학교밖에 놓여 있는 경우와 학교생활에 적응하기를 포기하고 학교 밖의 세상에 관심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만 20세가 되면 공식적으로 성인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경제적·사회적·법적으로 부모의 관리 하에 놓여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만 19세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정서가 구축되어, 부모의 관심을 간섭으로 생각하게

5) 양태(樣態) : 상태, 양상의 의미

되는 정도가 커진다.

한편, 청소년은 대중문화에 대해 열광적인 수용층이다. 미니홈피, 인터넷소셜 등을 통한 대중문화 생산자로서의 역할도 차츰 커지고 있다. 특히 대중가요시장에서 청소년층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음반을 구입하고, 콘서트 관람을 하는 등 청소년의 반응에 따라 대중가요 판도가 바뀌고 인기의 흐름이 좌우된다⁶⁾.

나. 성인문화

성인층은 가족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 생활의 중심에 놓여 있다. 아이의 교육을 위하여, 질적·양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위하여, 노년을 위한 준비 등을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경제활동은 50대까지 계속되며, 40대 중반기부터 50대 초반 즈음에는 경제적으로 다소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서 경제적인 책임감에서 해방되기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자녀가 성인기에 접어드는 때로, 자녀 양육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자아⁷⁾를 찾기 위한 활동에 관심이 많아지게 된다.

성인층은 청소년층과 노인층을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하므로 양 집단과의 호흡을 중시, 눈높이 맞추기 의식이 강한 시기이기도

6) 고급문화는 생산자의 의식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고급문화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수용자가 생산자의 의식 가까이에 가서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 그에 반해 대중문화는 생산자가 수용자의 취향에 맞추어 작품을 생산하는 것이기에 생산자가 수용자의 의식 가까이에 가서 수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작품을 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층이 대중문화 감상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되면서 대중문화의 큰 흐름은 청소년층의 기호에 맞추어서 생산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7) 자아(自我) : 나, 자기. 자기 자신에 관한 각 개인의 의식이나 관념을 의미한다.

하다. 이는 한 사회의 중심에 성인층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층이 전체를 배려함으로써 무게 중심을 잘 잡아야만 사회가 지탱된다는 무게 중심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층들은 생각이 깊을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행동의 진중함, 자기표현 소극적, 돌려서 말하기 등 신중한 모습을 지니게 된다. 청소년기의 사고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말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인층은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실권자이기는 하지만, 경제 계획을 직접 세우고 운영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까닭에 문화비에 대한 소비 폭을 넓히기가 쉽지 않다. 문화비 소비에 앞서 의식주를 위한 기초 생활비의 소비에 중심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대중문화를 직접 경험하기보다는 멀리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잦다. 다만, 경제적인 부담이 적은 것은 직접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 음반 구입보다는 라디오를 통해서, 영화관 영화관람보다는 비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다. 노인문화

남한에서는 65세 이상인 노인들에게 경로우대증이 발급된다. 지역에 따라 교통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지급액은 현실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나라에서 지급하는 경비에 의존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남한의 노인들은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높지 않다. 국가에 대한 의존성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의식도 높지 않은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자녀에게 의존하여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독립 재산을 구축하여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생활하는 부모도 적지 않다. 이는 젊었을 때 노인시기를 대비하여 보험·연금·신탁 등의 금융상품을 활용, 저축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시기의 노인들은 경제활동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다. 따라서 경로당, 노인대학, 복지회관 등 노인들을 위해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간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실버약단, 실버교통순찰대 등을 통한 봉사활동 영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도 많다고 한다.

(2) 직종별 문화 실천과 특징

가. 사무직 노동자(화이트칼라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는 승진기회나 고용의 안정성, 노동조건, 임금 등에서 생산직 노동자에 비해 우월한 조건에 놓여 있다는 인식이 높다. 그러나 대학 졸업자들이 급증하고, IMF(국제통화기금) 관리 시기 이후 고용의 불안정이 가속화되면서 사무직 노동자의 지위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처럼 고용 불안이 높아지게 되자 사무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심이 높아졌다.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곧,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무시간 외 여가시간은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 학습 등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나. 생산직 노동자(블루칼라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보다 노동시간이 다소 많다. 규정 시간은 사무직 노동자와 다르지 않으나 잔업이나 특근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여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사무직 노동자에 비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인데, 이는 단순 노동의 반복으로 인해 일의 지루함을 느끼기가 쉽기 때문이다.

잔업이나 특근 등으로 사무직 노동자에 비해 여가시간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까닭에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사무직 노동자들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잠자기, 텔레비전 시청하기 등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피로를 풀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다. 중산층 주부

전문직 여성의 증가로 결혼 후에도 직업여성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전업 가정주부로서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교육비가 증대되면 부업활동을 하는 여성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집에서 멀지 않은 할인매장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를 한다든가, 아기 돌보기·파출부 등 주부가 쉽게 할 수 있는 부업을 통해 자녀의 교육비를 충당하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여성의 권리 찾기 의식으로 인해 남녀평등 의식이 강화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가부장적 질서에서 부부중심의 질서로 바뀌었으며, 양육의 책임도 주부 전담에서 부부 분담으로 변했다.

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의 중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전업 주

부들도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고립 등의 의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한 흡쇼핑 회사에서 주부의 연봉을 분석(2006년)하였는데, 30대의 연봉은 3,350만원, 40대의 연봉은 3,407만원으로 각각 산출되었다.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을 전문 인력으로 대체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이는 가정주부의 일 자체가 전문적인 노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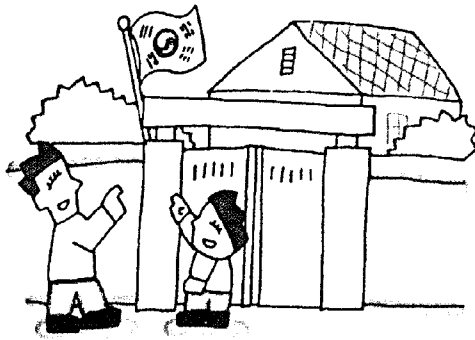
3. 연중행사와 관련한 문화의 이해

- 남북한 명절·기념일 비교를 통하여 -

(2006년 11월 현재)

남 한		북 한		휴일일수(남/북)
1월 1일	설날/신정	1월 1일	설 날	1일 휴일/ 2일 연휴
1월 1일(음)	설날/구정	1월 1일(음)	음력설날	3일 연휴/ 1일 휴일
1월 15일(음)	정월대보름	1월 15일(음)	정월대보름	/ 1일 휴일
		2월 16일	김정일 탄생일	/ 2일 연휴
3월 1일	삼일절			1일 휴일/
		3월 2일	식수절	/
		3월 8일	국제부녀절	/ 1일 휴일
4월 5일	식목일/한식			/
4월 8일(음)	부처님오신날			1일 휴일/
		4월 15일	김일성 탄생일 (태양절)	/ 2일 휴일
		4월 25일	조선인민군창건일	/ 1일 휴일
5월 1일	근로자의날	5월 1일	국제노동자절	근로자만 1일 휴일 / 1일 휴일
5월 5일	어린이날			1일 휴일/
5월 5일(음)	단 오	5월 5일(음)	단 오	/ 1일 휴일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날			

남 한		북 한		휴일일수(남/북)
		6월 1일	국제아동절	
6월 6일	현충일	6월 6일 (육육절)	조선소년단 창건기념일	1일 휴일/
		7월 8일	김일성사망일	
7월 17일	제헌절			1일 휴일/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	/ 1일 휴일
8월 15일	광복절	8월 15일	해방기념일	1일 휴일/ 1일 휴일
8월 15일(음)	추 석	8월 15일(음)	추 석	3일 연휴/ 2일 연휴
		9월 9일	공화국창건기념일	/ 1일 휴일
10월 3일	개천절			1일 휴일/
10월 9일	한글날			
		10월 10일	노동당창건일	/ 1일 휴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1일 휴일/
		12월 27일	헌법절	/ 1일 휴일



대문 왼쪽에 게양(단독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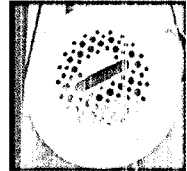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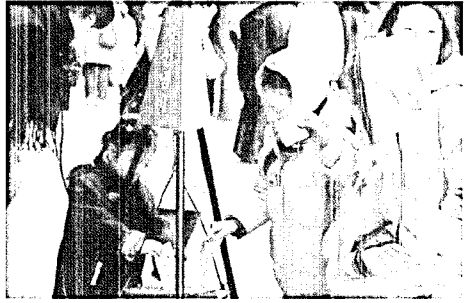


앞 베란다 왼쪽에 게양(공동주택)

국기 게양 방법



감사의 의미를 지닌 “카네이션”



불우이웃돕기의 실천, “자선냄비”

제8장

성, 결혼, 가족

1. 성, 사랑, 그리고 결혼
2. 가부장 가족제도와 변화하는 사회
3. 평등한 남녀관계와 민주적 가족을 위하여

이성, 결혼, 가족

1. 성, 사랑, 그리고 결혼

(1) 중매결혼에서 연애결혼으로

성, 사랑, 결혼은 시대마다 그 이해가 다르다. 결혼 당사자들이 서로 얼굴도 모르는 채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한 시절이 있었다. 결혼할 배우자를 고르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영향을 미쳤던 시절에는 결혼당사자들의 사랑이 결혼의 주요한 조건이 되지 않았다. 집안의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이 중요하였다. 결혼은 집안간의 계약이고, 자식을 낳아 가계를 잇는 제도였다.

결혼을 하는 데 사랑이 대중적으로 보편화된 것은 산업화가 되면서이다. 토지를 기반으로 살았던 사회와 다르게, 고향땅을 떠나 도시로 온 개인은 친족집단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기 시작했다.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증가하여 개인은 많은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전화, 우편 등 통신수단의 발달은 개인의 친밀성을 확대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집안에서 정해준 배우자가 아닌, 내가 직접 만나 배우자를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특히 개인화된 도시생활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이성간의 사랑을 절대화시켰다.

경제개발이 시작된 60~70년대는 핵가족의 형태가 늘기 시작했다. 결혼을 위해서 연애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낭만적 사랑은

결혼을 하는데 주요한 요소로 여겨졌다. 영원한 사랑은 결혼으로 완성된다고 믿었다. 가정은 이 사랑을 유지하고 완성하는 안식처가 되었다. 그리고 여성은 이러한 안식처를 만드는 전업주부로 자리하기 시작했다. 현명한 어머니, 좋은 아내(현모양처)의 자질이 여성에게 주요한 덕목이 되었다. 반면 남성은 자신의 노동을 팔아서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의 위치를 갖게 된다.

(2) 사랑과 조건 사이에서

1980년대에 들어오면,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시기가 청소년기로 낮아진다. 최근에는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져서 유치원에서조차 이성친구가 없으면 마치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2000년대에 와서는 ‘사랑해요’라는 말이 인사처럼 흔한 말이 되었다. 남녀의 키스장면은 텔레비전 안방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자연스러운 사랑 표현이 되었다. 남한사회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이처럼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남녀의 애정표현을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사실 얼마되지 않은 일이다.

한국사회는 결혼정보회사나 개인 중매를 통한 중매혼이 여전히 성행하지만, 연애결혼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배경이나 배우자 부모의 경제사회적 조건이 간과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기에 집단적 가족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결혼에 드는 비용에서부터 살 집을 장만하고, 아이를 돌보는 등, 결혼을 한 이후에도 부모들의 지원을 받는다.

결혼은 집안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 가치와 결혼당사자들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개인주의 가치가 공존한다.

(3) 변화하는 결혼관

결혼은 인생에서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왔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규범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첫째, '결혼은 인생에서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결혼하는 것이 결혼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낫다'는 생각에 20대 여성 중 46%가 동의하지 않는다(한국여성개발원, 2003). 결혼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2005년 현재, 31~34세 중 비혼 인구는 30.2%를 차지한다. 25~30세 인구 중 비혼은 70.6%이다. 2000년도와 비교하면, 비혼 인구가 14.9%가 증가했다.

비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적 원인도 있겠지만, 결혼의 전통적인 의미와 가치가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4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23.4%가, 여성은 34.2%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으로 인한 책임 부담 때문에' 결혼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여성 중에는 결혼이 여성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4.4%)는 이유도 있었다. 여성들은 결혼이 부계를 기반으로 한 남성중심적인 제도라는 점을 간파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결혼연령도 늦어지는 추세이다. 2005년도 통계청의 '혼인·이혼 통계 결과'에(2006.3) 따르면, 초혼 평균연령이 남성은 30.9세, 여성은 27.7세이다(표 1).

표 1. 초혼연령의 변화

성 별	1960	1990	2000	2005
여 성	21.6세	25.5세	26.5세	27.7세
남 성	25.4세	28.6세	29.3세	30.9세

*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각 년도

둘째,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그림 2). 결혼식에서 ‘검은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평생 함께 살 것을 맹세한 서약이 무색해지고 있다. 이제 평생 한 사람과 살아야 한다는 결혼관은 종교나 관습 등 외부의 힘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결혼당사자의 관계성이다. 결혼한 두 사람의 사랑이 식으면 이제 더 이상 관계를 지속시킬 필요가 없다. 성격이 맞지 않아 더 신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한 사람과 평생 산다’는 낭만적 사랑과 결혼관은 흔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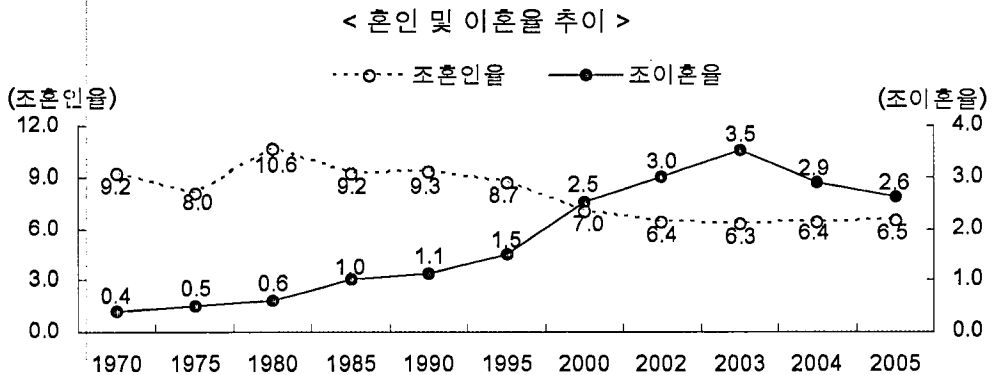


그림 2. 출처 : 통계청, 200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2006. 7)¹⁾

셋째, 혼전성관계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정도가 높다. 사실, 혼전성관계라는 말은 ‘성관계는 결혼한 후에 해야 한다’는 규범을 담고 있다. 결혼하기 전에 갖는 성관계는 바람직하지 않거나, 숨겨야 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2006년 10월, 한국대학신문이 2001명의 대학생들에게

1) 조이혼율은 인구 천명 당 이혼건수이며 조혼인율은 인구 천명 당 혼인건수를 말한다.

물은 결과, 대학생의 59%가 사랑하면 혼전관계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2001년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6.2%가 혼전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²⁾ 이제 젊은 세대는 결혼을 통하지 않고서도 성을 경험한다. 20대의 26.3%가 결혼이 아닌 동거도 괜찮다고 말한다.³⁾ 또한 사랑한다고 해서 꼭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연애는 꼭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한 부분이고, 삶에서 계속되는 사건이다.

2. 가부장 가족제도와 변화하는 사회

(1) 가정과 성역할

한국사회에서 가족제도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아버지의 가계를 계승한다(부계혈통). 가정은 성역할에 따라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로 구분된다. 남성은 주로 가장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부양할 책임을 갖는다. 그래서 남성은 밖에서 일하는 사람 말하자면, 공적인 영역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자로 간주된다. 반면 여성은 집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 일을 전담하는 역할을 주로 맡는다. 그런데 여성이 집 안에서 하는 일은 생산적인 활동으로 평가되지 않아 왔다. 가사노동은 아내 또는 어머니로서 사랑과 헌신으로 하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성별분업을 바탕으로 하여 남성 가장에게 권위를 부여하

2) 함인희, “배우자 선택 양식의 변화,” 《가족과문화》 13집 2호, 2001년, 21쪽.

3) 여성가족부, 전국가족실태조사, 2005. 12. 426쪽.

는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와 관련된다. 취직을 할 때, 남성이 '가장'이라는 이유로 여성보다 우선적으로 고용되는 반면, 회사가 구조조정을 할 때, 여성은 남성보다 우선적으로 해고된다. 그리고 여성이 노동시장에 나가 일을 한다 해도, 여성은 주로 집안에서 하는 일과 유사한 업종에서 일한다. 교육, 복지, 판매, 단순 사무 등 돌봄이나 정서적인 서비스 또는 외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에(실질적으로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주로 종사한다. 그리고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 임금의 62.6%만 받는다.⁴⁾

뿐만 아니라 남성은 여성보다 성적 활동이 자유롭다. 남성은 바람을 피우거나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실제로 하지만, 남자이기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반면 여성은 혼전성관계(또는 동거)를 갖거나 바람을 피웠을 때, 남성보다 더 가혹한 비난을 받거나 낙인이 찍힌다. 여성은 정숙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규범이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규정하기 때문이다.

(2) 가부장적인 남성과 변화하는 여성의 의식

최근 눈에 띄는 한국사회의 변화 중 하나는 여성들의 의식이다. 한국여성들은 남녀가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며, 취업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세~29세 여성들의 약 95%가 평생직장을 희망한다. 충분하지는 않

4) 여성은 1980년에 남성 평균임금의 44.4%, 1990년에 53.5%, 2000년에 63.2%의 임금을 받았다. 비록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의 폭은 매년 줄고 있으나, 남녀 임금의 차이는 여전히 크다 (출처: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임금은 월급여 기준,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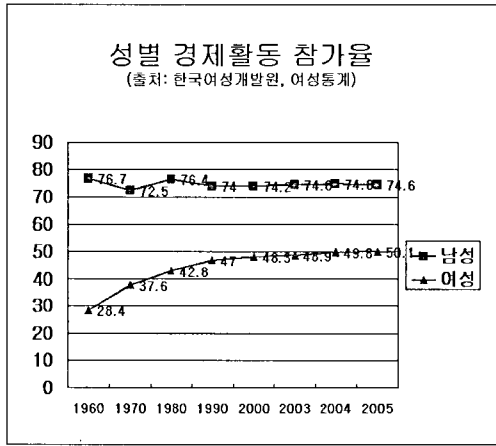


그림 2.

지만, 실제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그림 2). 1960년 28.4%, 1980년 42.8%, 1990년 47.0%에서 2005년 현재, 50.1%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한다. 남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하면 여성들의 참여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결혼을 하면 노동시장을 떠났던 기혼여성들이 가능하면 가족과 일을 양립하려고 한다. 결혼에 상관없이 취업하겠다는 여성은 매년 늘어간다(표 2).

표 2.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1991	1995	1998	2002
가정에 전념하겠다	16.7	16.7	8.5	4.4
결혼에 상관없이 일하겠다	17.5	17.0	30.4	40.2

* 출처 : 한국여성개발원<여성통계>

그러나 가정 내의 성역할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가사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은 여전히 여성이다. 2003년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취업주부의 92%, 전업주부의 98%가 가사노동의 책임자는 자신이라고 답했다. 2004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를 보면, 평일에 남성은 가사노동을 31분, 여성은 3시간 39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5년 여성가족부의 <전국가족실태조사>는 남성의 34.5%가 전통적인 성역할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남성들은 가사

일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성들은 설거지, 식사 준비, 집안청소와 쓰레기 버리기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한다.

말하자면, 여성들은 이중노동을 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집안 일, 자녀양육 등 가사노동을 해야 한다. 이런 경우 남성과 갈등을 가질 가능성은 높다. 실제적으로 36.9%가 가사분담이나 육아문제로 다툰다.⁵⁾ 여성은 자녀양육이나 가사노동을 남편과 함께 하는 것이 곧 부부의 평등이고, 가정의 책임이며,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3. 평등한 남녀관계와 민주적 가족을 위하여

(1) 성에 대한 고정관념 깨기

몇 년 전, 남녘사회에 정착한 한 새터민은 말했다. “남녘사람들은 애정표현이 대담해요. 여성들의 옷차림도 그렇고, 남성들에게도 적극적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새터민은 이렇게 말했다. “남녘 남성들이 북녘 남성들보다 부드럽고 나긋해서 남성답지 못해요.” “귀걸이, 목걸이를 하고, 머리를 염색한 남성들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돼요.”

북한관련 연구조사들은 북녘사람들이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반면, 개인의 행동과 태도에 있어서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은 강하다고 분석한다.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라는 전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북녘사람들은 ‘남성은

5) 여성가족부, 전국가족실태조사, 2005. 12. 227쪽.

강하고 씩씩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반면, '여성은 순종적이고 얌전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향은 성역할에 대한 태도와도 연결된다. 북녘사람들은 남성의 일, 여성의 일을 구분하는 편이다.

남녘사회도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다. 그러나 최근 그 내용이 변화하고 있다. 새터민들이 말한 것처럼, 남성들은 씩씩함을 강조하기보다는 개성있게 외모를 가꾸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자신을 표현한다. 여성들은 순종적이기보다는 당당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그래서 북녘사람들이 생각하는 남성상과 여성상과는 다르다.

남녘사회는 소비문화가 만드는 성적 이미지 속에서 외모를 가꾸고 자신의 스타일을 중시한다. 그래서 이제 남성상과 여성상은 보다 복잡하다. 현모양처에 필요한 자질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능력도 있고, 섹시한 여성이 좋다. 남성도 마찬가지로이다. 보호자로서 든든한 남성 못지않게 이왕이면 적당히 몸매도 있고, 말도 통하며, 자신을 꾸밀 줄 아는 멋진 남자가 선호된다. 연애가 결혼과 상관없는 하나의 삶이 되면서 스타일은 더 중시하게 된다.

그러나 변화하는 여성상과 남성상에도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전하다. 연애가 시작되면 여성과 남성이 하는 태도와 역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결혼생활에 접어들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각본처럼 어느 정도 짜여져 있다.

그러나 사람은 다양하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역할의 고정된 틀에 가두면 그 사람의 다양한 모습을 놓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잠재력이 발휘되지 않는다. 행복한 남녀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깨져야 한다.

‘북녘’ 여성상과 남성상, ‘남녘’ 여성상과 남성상에 대한 선입견도 마찬가지로이다. 예를 들어 ‘북녘여성들은 순종적이다’, ‘남녘남성들은 다정다감하다’ 라는 생각은 남녀가 서로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 사람은 사회적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고 변화한다. 따라서 고정된 선입견은 서로를 진정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그리고 사람을 차별할 수 있다.

(2) 가부장적 권위에서 수평적인 평등으로

그동안 남녘의 여성들은 어머니, 아내, 주부라는 정체성이 우선 되어왔다. 어머니, 아내라는 정체성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다. 따라서 어머니, 아내로서의 여성은 여성 그 존재 자체로서 사회적 의미를 가지기 보다는 남성을 통하여 사회와 관계를 맺는다.

북녘의 여성들은 ‘자주통일의 길에서 서도록 떠밀어주는 아내, 어머니’, ‘통일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조국통일의 주역’ 으로 호명된다. 여성의 자아실현이 개인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와 당을 위한 역할 안에서 이루어진다. 북녘여성들 또한 ‘여성’으로 인식되기보다는 ‘가족과 국가 내에서 존재하는 여성’이다.

최근 북한에서는 경제개혁 이후 가정에서 여성의 책임이 강화되거나 여성의 노동이 증가하는 변화를 보인다. 사회경제적 맥락은 다르지만, 북녘과 남녘의 여성들은 가부장적 남성과의 관계에서 이중노동에 처해 있다.

최근 한국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2001년 여성부(현재 여성가족부)가 신설되면서, 여성의 권리 향상과 남녀평등을 위한 법, 제도가 신속히 마련되고 있다. 또한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법적으로 지지해

은 호주제가 2008년 사라지게 되었다. 2005년 3월,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민법이 개정됨으로써, 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제도는 앞으로 약화될 조짐이다.

여성들의 의식도 변화하고 있다. 여성들은 가족을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여성상에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키면서 어머니, 아내, 주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려고 한다.

이제 가부장은 점점 이념적이고 상징적인 권위가 되고 있다. 가부장의 실질적인 힘은 약해지고 있다. 따라서 남성들이 가장으로서의 권위나 남성으로서 특별한 대우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사회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태도가 된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거나 '여성은 남성의 의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사람들로 부터 외면당하기 쉽다. 이제 남성들은 여성, 자녀, 친구, 회사동료 등 주변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3)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최근 남녘사회는 자녀를 1~2명 정도 낳는다. 그러다보니 자녀들이 알아서 크던 시절과 다르게, 요즘은 부모들이 자녀들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쓴다. 자녀 키우기가 쉽지 않은 사회에서, 남녘사회의 아버지들은 요즘 외롭다. 그동안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다보니, 자녀들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아버지보다 잘 통하는 어머니나 친구들을 찾는다.

새터민들에게 소통은 더 쉽지 않을 것이다. 북녘사회와 다른 남녘사회에서 한국사회의 교육을 받는 자녀들은 부모와 문화적 차이를 많이

느낄 것이다. 젊은 세대들은 더 빠르게 남녘사회에 적응할 것이다.

남성과 여성, 부모와 자녀, 가족들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서로가 통해야 대화가 되고 관계가 만들어진다. 대화란 대화하는 사람들이 서로 평등할 때 이루어진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위계적인 관계를 만들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남성들은 바깥 일과 집안 일을 구분하지 않고, 가사 일과 자녀 키우기를 여성과 함께 하는 민주적인 남성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친구같은 남편, 대화가 되는 아버지를 필요로 한다. 가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감정을 서로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들은 남성이나 가족을 자신과 동일시해서는 곤란하다.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은 오히려 가족들과 진실한 대화를 방해한다. 여성자신도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스스로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남녘사람들과 만나서 사랑을 하고 섹스를 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 때 서로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다르기 때문에' 더 흥미롭고, 역동적이고, 운택한 삶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새롭게 나의 삶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다. 유연하게 생각하고 변화하는 것, 이것이 사랑을 만드는 길이다.

제9장

생활법률

I. 남북한 법제 비교

II. 국가와 법

III. 개인생활과 법

IV. 새터민과 법

II. 남북한 법의 비교

1. 남북한 법의 특성

(1) 북한 법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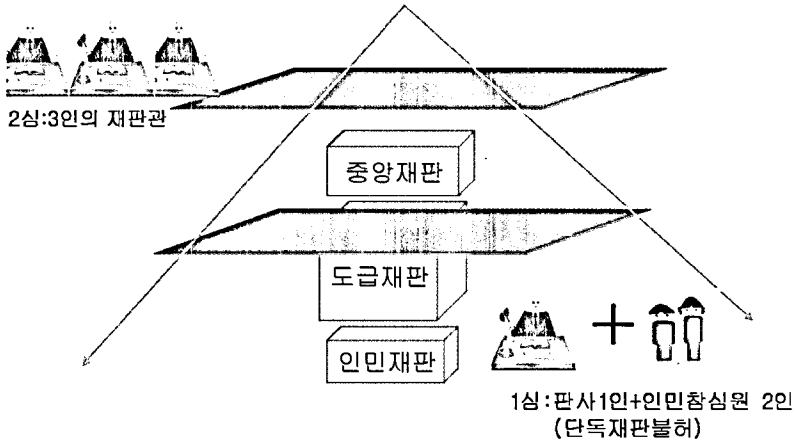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이므로 법 원리도 사회주의법의 특성을 가진다. 모든 제도와 법은 계급성의 관점에서 정치에 종속되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가 법보다 우선된다. 혁명적 법률관은 인민들에게 권리보다 의무를 강제하고, 개인의 권리를 전체주의적 질서 속에서 파악한다. 북한에서 헌법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만든 옷처럼, 장식적 기능에 머물고 있다.

(2) 남한 법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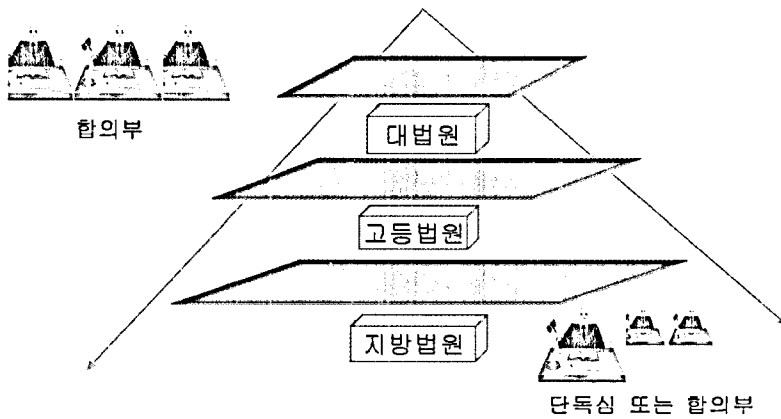
남한의 법은 헌법이라는 최상위의 규범을 국민의 합의로 구성하고 그 하부에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 그리고 명령, 규칙 등이 체계를 이루고 있다. 법치국가라는 전체의 틀 속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여러 권리를 보장한다.

2. 남북한 사법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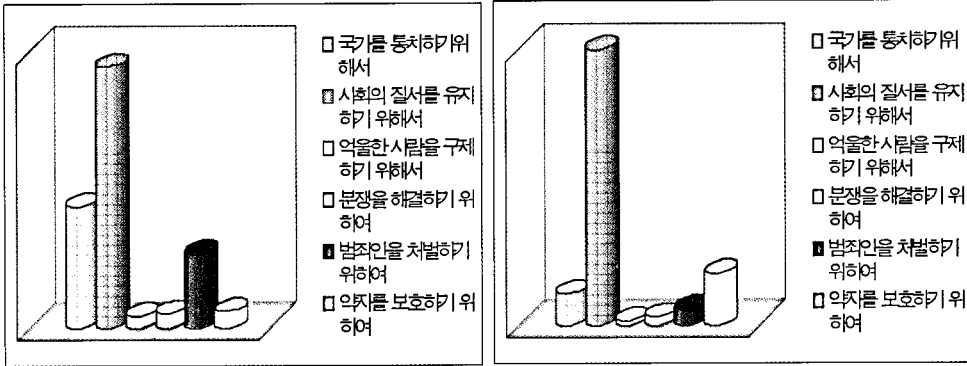
(1) 북한의 사법제도



(2) 남한의 사법제도



3. 법의 필요성



새터민

남한주민

법의식은 그 사회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감정이나 판단을 말한다. 새터민은 남한의 사회공동체에 적응해야 하므로 남한주민의 법의식을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법의 필요성에 대해 남한 주민과 새터민의 의식은 모두 사회의 질서유지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꼽았다.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의 유지이다. 공동체 생활에서 질서가 깨어진다면 사회는 혼란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새터민의 경우 국가의 통치나 범죄인의 처벌과 관련하여 법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남한주민은 약자의 보호에 더 많이 답하였다. 국가의 형벌권에 중점을 둔 새터민의 답과 상대적·배분적 정의에 중점을 둔 남한주민의 답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4. 남북한의 국회

북한의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다. 선거는 인민주권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강조되며, 단일후보에 대한 찬성 투표로 진행된다. 선거는 반대를 허용하지 않는 절대다수결의 원칙을 강조한다. 북한의 입법기구는 노동당의 정책을 형식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인민대중의 권익을 위한 입법 활동은 기대하기 힘들다.

남한의 입법기관인 국회는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2개 이상의 정당이 경쟁하는 복수정당제가 보장되어,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그 중 하나의 정당에 소속되며,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는 무소속도 가능하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는 특정한 법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표출하기도 한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의 표결 모습(북한)



호주제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단체(남한)

5. 인권과 법

(1) 인권의 보호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인다. 국제사회에서도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UN은 반인권적 사항에 대해 해당 국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 법치주의의 실현과 인권

법치주의(法治主義)는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한다. 국가는 강제력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므로 부득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 강제력을 행사하더라도 반드시 법으로 한계를 분명히 해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적인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만일 법이 지배하지 않고 사람이 지배한다면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치주의는 인권보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II. 국가와 법

1. 국가와 법

(1) 기본권과 국민

가. 기본권이란?

기본권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본적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기본권은 신분제가 유지되던 중세사회까지는 생각할 수도 없는 개념이었으며 근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시민계층의 요구로 발달되었다.

남한은 급격한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미진하였고, 민주화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승만 정권을 퇴진시킨 4·19, 광주민주화 운동,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게 된 계기가 되었던 6월 항쟁 등은 기본권의 발달에 큰 기여를 하였다.

나. 기본권의 종류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것을 평등권이라고 하며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또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도 기본권의 핵심내용이다. 정신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양심과 종

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언론과 집회도 허용한다. 또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영장제도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 그 가족에게까지 처벌을 하는 연좌제도 금지한다.

평등권과 자유권이 고전적인 권리라면 현대에 이르러 더욱 강조된 기본권은 참정권과 사회권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참여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제한받아서 안 된다. 사회권은 현대 복지국가에서 특히 강조된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자유권의 악용을 보완한 것이다.

그밖에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받았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보완적 기본권이라 한다.

다. 기본권의 제한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기본권은 침해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국민의 의무

국민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등이 있다. 이 중 나라살림을 위해 세금을 내고 병역을 이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과 의무교육을 받는 것도 쾌적한

환경에서 우수한 국민이 되기 위해 필요하다. 국민은 일을 해서 사회에 기여할 의무도 있다.

2. 법의 종류

(1) 국내법

가. 공법

공법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규정한 법이다. 국가의 통치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이 해당된다.

① 헌법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법이며 모든 법은 헌법정신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만일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거쳐 무효가 된다.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② 행정법

국가의 행정을 규율하는 행정법은 권력이 분립되면서 나타났다. 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외한 국가권력이 행정부이며 행정법은 이 행정부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행정을 맡아하는 기관이 행정기관이며 경찰청, 정부중앙청사 등 주위에서 보는 관청의 대부분은 해당된다.

③ 형법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이다.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를 법에 규정하고 만약 법을 어기면 어떤 형벌을 가할 것인가를 정해 놓은 법이다. 따라서 아무리 비난을 받는 행위라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④ 소송법

소송법은 권리와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를 말한다. 이를 절차법이라고도 하며 대부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실현된다. 개인간의 분쟁은 민사소송에서 다루고 범죄는 형사소송에서 다룬다.

나. 사법

사법은 개인과 개인의 법률행위를 다룬다. 민법과 상법이 이에 해당된다.

다. 사회법

사회법은 복지국가의 성립으로 발달되었다. 개인주의적인 법이 빈부차이를 발생하고 약자의 지위가 침해당하므로 국가가 사적인 영역에 개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법의 성격을 지니며 노동 관계법, 경제 통제법, 사회 보장에 관한 법을 통틀어 말한다.

(2) 국제법

가. 국제법이란?

국가와 국가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를 명시한 것이 국제법이다. 국제법은 명문으로 규정한 것도 있지만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을 기초로 형성되기도 한다. 이것을 조약과 국제관습법이라고 한다. 조약은 합의한 나라만 구속하기 때문에 동참하지 않은 다른 나라를 규제하는 것은 힘들다. 국제관습법은 국제관례를 중시하는 것으로 국가의 위상이 있으므로 쉽게 어기기 힘든 장점이 있다.

나. 국제기구

2차대전을 끝낸 국가들의 고민은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국제연합(UN)이 설립되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입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가 되었다.

국제연합 이외에도 각 국가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잘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기구들을 만들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아시아 개발은행, 아프리카기구 등이 그 예이다.

다. 국제사법기구

국제기구 중 특히 국제사법기구로는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 재판소, 국제 형사재판소 등이 있다.

3. 범죄와 형벌

(1) 범죄의 종류

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거나 범인을 숨겨주고 법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나.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할 수 없다. 불을 내거나 교통수단을 파손하는 것도 범죄가 된다. 이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더욱 높은 형량을 받게 된다. 화폐나 상품권, 우표나 도장을 위조하거나 주인 몰래 사용하는 것도 범죄가 된다. 마약은 운반하는 것도 처벌된다.

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살인과 상해뿐 아니라 폭행도 형량이 높을 수 있다. 야간에 폭행이 있거나 여러 명이 폭행을 한 경우는 가중 처벌된다.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않거나 기력이 없는 부모를 방치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가두거나 협박하고 약취하는 것도 범죄가 된다. 강간이나 추행은 물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처벌된다. 사업장에 가서 업무를 방해하는 것,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도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된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범죄행위다. 폭행이나 강압적인 수단으로 물건을 빼앗으면 가중 처벌된다. 맡고 있는 돈을 가로채는 것도 안 되며 남의 물건을 부수는 것도 처벌대상이다.

(2) 형벌의 종류

가. 형벌이란?

형벌은 범죄가 법원에서 확정되면 절차에 맞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형벌은 범죄자를 벌주는 의미와 사회에서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교화하는 목적도 있다. 형벌을 집행하는 곳을 교도소라 부른다.

나. 형벌의 종류

형벌은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과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과 금고가 있다. 일정한 자격을 정지시키는 명예형과 재산에 대해 가해지는 벌금 및 과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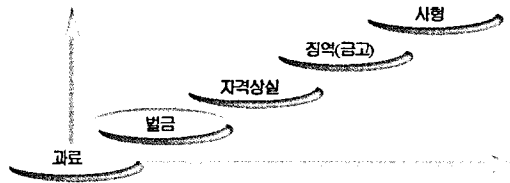
4. 사법부

(1) 사법부란?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곳이다. 사법권을 행사하는 곳

이 법원이다. 대체로 법원은 법질서를 침해하거나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2) 재판의 종류와 절차



형벌의 종류	내용
사형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형
징역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징역(감제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
금고	징역에 복무하지 않고 자유를 박탈하는 형
자격상실(자격정지)	사형,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경우 공무원이 되는 자격 등 제한
벌금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
과료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에 한해 자유박탈

가. 재판의 종류

재판의 종류는 개인간의 분쟁을 다루는 민사재판과 범죄행위를 다루는 형사재판이 있다. 행정재판과 선거재판, 군사재판 등이 있으나 이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다.

① 형사재판

형사사건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 또는 자유를 박탈하는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개재판을 하고,

지방법원을 결정에 불복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다.

② 민사재판

민사사건은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을 법원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으로 주로 가사사건이나 채무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 많다.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개인이 소송을 제기해야 재판이 개시된다.

5. 법과 관계되는 국가기관

(1) 국회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헌법기구이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이 있다. 입법권과 함께 예산안을 확정하는 재정에 관한 권한과 국정감사권 등의 권한이 있다.

(2) 법원

법원은 법관으로 구성되는 헌법기구이다. 소송이 있으면 정당한 재판을 하며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소년, 선거, 특허 등 광범위한 재판을 다룬다.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아래에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있다.

(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한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사항은 입법부, 행정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를 판단하고,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도 판단한다. 또 고위 공무원의 탄핵을 결정하고, 민주질서에 어긋나게 설립된 정당을 해산하며, 국가기관끼리 권한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도 관여한다.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이 각자 3명씩 지명할 수 있다.

(4) 경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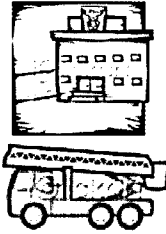
경찰서는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단위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업무도 맡아서 한다.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를 한다.

(5) 검찰청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받은 사건이나 직접 수사한 사건을 법원에 보낸다. 범죄가 발생하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접 경찰을 지휘하여 수사를 주재한다. 대검찰청 아래에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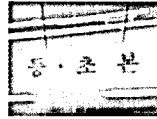
6. 새터민과 국가기관

동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 사망, 혼인신고 • 전입, 전출(주민등록지 변경) • 전적(본적지 변경) •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 인감신고, 인감증명 교부 • 확정일자 발급(임대차계약서)



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 • 인지(자식으로 인정) •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사건 • 각종 형사사건

시(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발급 • 교통관련 업무 • 쓰레기 수거 등 환경관련 업무 • 기초생활보장 •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 화재, 응급사향 • 1366- 가정폭력 • 112- 범죄신고



7. 서류 작성해 보기

Ⅴ. 개인생활관과 법

1. 사법(私法)의 발달

(1) 근대법의 특징

근대사회의 지배세력이었던 시민들이 가장 중요시한 것은 개인의 재산이다. 국가조차 개인의 재산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사유재산의 존중사상이다. 또 집을 사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개인의 권리는 자유롭게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계약의 자유의 사상이 있다. 나아가 근대민법은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2) 현대법의 특징

근대 민법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다 보니 부작용도 많았다. 힘이 센 개인은 더욱 많은 자유를 가질 수 있었고 자연히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힘이 약한 개인은 부자와 맺은 계약에서 번번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결국 사회적 약자들의 불만이 많아졌고 이 점이 사회문제로 나타났다. 현대사회는 자유의 존중과 함께 평등한 분배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하고, 약자와 강자의 계약이 불합리하게 체결되었다면 약자의 권익을 우선 보호하도록 했다. 현대 민법은 사회적인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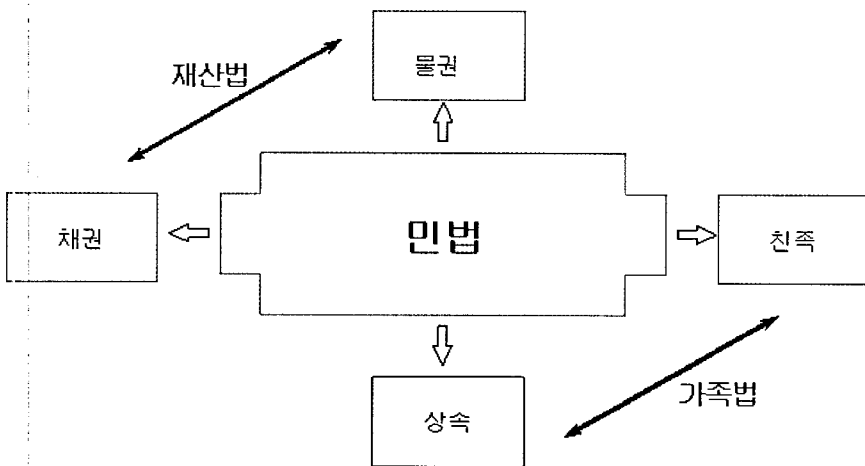
향으로 수정에 수정을 해 나갔다.

2. 법이 규율하는 개인생활

개인생활을 규율하는 법에는 물건을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물권이 있고,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

특히 물권(物權)은 물건을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아파트나 책상을 파는 것처럼 마음대로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범죄자라도 적법하게 취득한 소유권은 보호된다. 채권(債權)은 돈을 갚으라고 하거나 결혼식에 쓸 떡을 제 날짜에 만들어 줄 것 등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과 채권을 합하여 재산권이라고 한다.

그밖에 개인생활을 규율하는 법에는 혼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족관계와 그 사이에서 발생한 상속도 포함된다.



3. 분쟁의 해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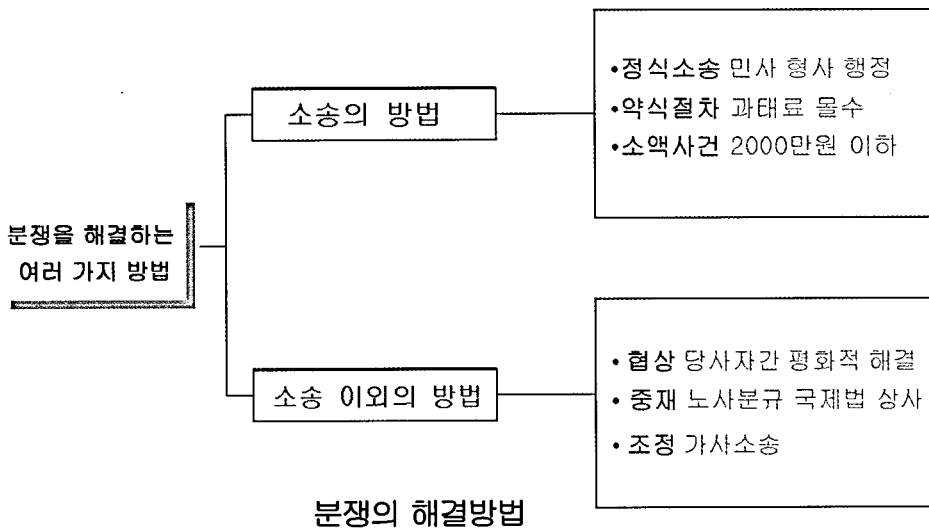
(1) 당사자와 해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분쟁이 일어났다면 당사자와 좋게 해결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다. 조금씩 양보하여 순조롭게 해결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보다 이익이다.

(2) 소송으로 해결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소송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서 등은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노동분쟁이나 가사사건은 조정이나 중재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4.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

(1) 행위무능력자 제도

법률상 ‘사람’은 태어나면서 사망까지의 자연인을 말한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동의를 해야 계약을 할 수 있다. 심신이 정상이 아닌 사람도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만일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 있다.

(2) 새터민의 사법상 지위

새터민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새터민은 대한민국의 국민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행위무능력자가 아닌 새터민은 법률행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책임도 지게 된다.

(3) 법인

거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삼성이나 정당처럼 법으로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단체도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5. 소유권의 취득시기

(1) 동산

동산은 움직이는 물건을 말한다. 거래되는 대부분은 동산이며,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물건을 넘겨받으면 그때부터 소유자가 된다. 이 때 영수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된다.

(2) 부동산

가. 집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물건을 말하는데 주로 땅이나 집처럼 재산가치가 큰 경우가 많다. 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시장에 팔수는 없기 때문에 집을 살 때는 진짜 주인을 잘 확인해야 한다. 진짜 집주인은 다른 곳에 살고 집을 세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반드시 등기부 등본에 집주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해야 한다. 잔금과 등기서류를 모두 주고받고 등기를 마치면 완전한 소유자가 된다.

나. 토지

토지는 집과 함께 거래되는 관행이 많은 나라에서 있지만, 우리나라는 토지와 집은 별개로 거래할 수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소유

자의 확인도 중요하다. 아파트보다 일반주택을 거래할 때 특히 주의할 사항이다. 집을 거래하는 경우와 같이 잔금과 등기서류를 모두 주고받고 등기를 마치면 완전한 소유자가 된다.

6.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1)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돈이나 물건을 거래하고 제대로 갚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받아 낼 수 있다. 법원에서 승소해도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다면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거래를 할 때 사람을 잘 보고 해야 한다.

(2) 한번에 끝나는 계약의 경우

땅을 산다거나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돌릴 수 있다. 땅을 사면서 돈을 주었다면 다시 땅은 돌려주고 돈은 받아오면 된다.

(3) 여러 번 반복되는 계약의 경우

집을 빌리는 임대차계약이나 우유, 신문을 배달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여러 번 일어나는 계약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했을 경우, 이미 먹은 우유를 다시 돌려줄 수

는 없으므로 앞으로 먹을 부분만 없애는 계약을 해야 할 것이다.

(4) 계약의 취소

취소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다. 취소는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사기나 협박으로 계약을 한 경우 등이다.

7.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1) 손해배상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이사날짜에 집을 비워주지 않았다면 이사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이 때 잘못을 한 사람이 이사비용을 물어내야 하는 것이 손해배상 제도이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처음부터 손해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방법은 돈(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불법행위

일부러 다른 사람이 세워둔 자동차 바퀴에 바람을 내어버렸을 경우처럼 자신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이다.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피해를 가한 사람(가해자)이 피해를 당한 사람(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특수한 불법행위

길을 가는데 멀쩡하게 걸려있던 간판이 내려앉으면서 머리를 다친 경우처럼 아무도 잘못을 한 사람은 없지만 분명히 피해를 당한 경우가 있다. 이때 간판주인은 잘못은 없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 아이의 잘못을 부모가 대신 책임지거나, 종업원의 잘못을 주인이 책임지는 사례가 해당된다.

8. 상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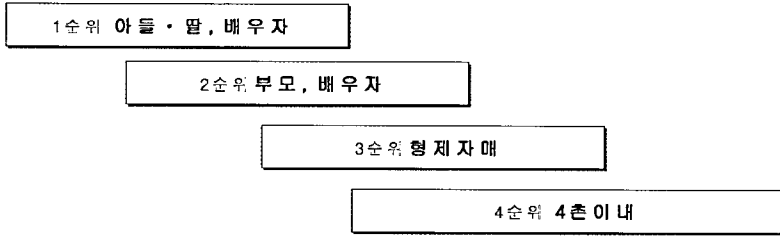
(1) 상속이란?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상속은 재산은 물론이고 빚도 물려받게 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재산한도에서 빚을 갚겠다는 한정상속의 의사나 상속을 포기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다.

(2) 상속순위

① 아들 딸, 배우자 ② 부모, 배우자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친족의 순서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9. 가족과 친족

(1) 새터민과 호적

호적은 개인의 신분상태를 국가가 관리하고 증명하기 위한 문서이다. 남한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호적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고 북한은 호적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새터민의 경우 새로운 호적부를 만들어 일가를 창립하거나 다른 가족의 호적에 입적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새터민은 취적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호적이 없는 무적자이다. 무적자라도 배우자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기 때문에 혼인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호적도 공적 문서이므로 자신의 호적을 만들어야 하며 이것을 취적이라고 한다.

(2) 가족이란?

가족은 부부와 부모, 자식을 말한다. 부부는 혼인으로 맺어졌고 부모와 자식은 혈연으로 맺어졌다. 법률적으로 가족은 같은 호적을 사용하게 된다.

(3) 친족이란?

친족은 혈연과 혼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법률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로 정한다. 혈족이란 부모나 형제처럼 혈연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인척은 시부모, 장인·장모, 처제처럼 혼인을 통해서 형성된 관계를 말한다.

10. 혼인과 이혼

(1) 혼인

혼인이 합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가 되어야 하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는 혼인의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하다. 혼인신고는 구청, 동·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2) 이혼

이혼을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혼이 이루어지면 인척관계도 사라진다.

가. 이혼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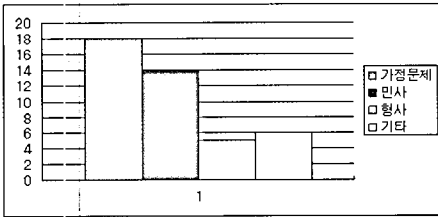
① 협의이혼

부부가 협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이혼은 이혼사유가 없어도 서로가 이혼하고자 하면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판이혼

남편이 부인을 폭행했거나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한 경우처럼 이혼사유가 발생하면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판사가 이혼을 허락하는 제도이다. 이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물론, 자녀의 양육에 관해서도 신청을 하게 된다.

1. 새터민이 겪는 법률문제의 유형



(1) 이혼문제

① 북한에서부터 함께 온 배우자와 이혼

부부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면 협의이혼의 절차를 밟고, 합의가 되지 않았으면 재판이혼의 절차를 밟는다. 재판이혼은 이혼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②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

혼인은 이중으로 할 수 없다. 북한에서 혼인을 한 사람이 남한에서 다시 혼인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배우자와 먼저 이혼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에 있는 배우자가 남한의 법정에 와서 이혼을 하고 갈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새터민지원법안이 개정 중이다.

③ 외국인과의 이혼

국제이혼도 일반 이혼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제이혼은 서울

가정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새터민의 경우 제3국에서 사실혼(동거)이나 신분을 위조해 혼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그 혼인신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혀야 될 수도 있다.

(2) 브로커 비용

새터민이 정착초기에 겪는 문제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다. 원만히 비용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브로커가 통장을 가져가거나 직장에게까지 찾아오는 등의 행위는 불법이다. 브로커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일단 협상에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위협이나 공갈, 폭력을 행사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신병안전을 요청할 수 있다.

(3) 호적정정

하나원을 수료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새터민은 호적을 가지게 된다. 일단 만들어진 호적은 공문서로 인정되므로 정정이 쉽지 않다. 호적을 만들고 나서 개명신청이나 이혼무효 판결이 받아들여졌으면 가정법원에 호적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전적신고

새터민은 안성이나 시흥이 본적지로 되는 경우가 많다. 전적은 이렇게 만들어진 본적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전적을 한다고 해서 호적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가정의 소재지만 변경하는 것이다. 전적신고는 호주 본인이 옮기고 싶은 동(읍)

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2. 해외여행 중 주의사항

(1) 중국여행할 때 주의할 점

새터민이 해외로 여행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여행 중 실종되거나 갈취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과 오랫동안 외교관계를 지속해 왔고 상당부분 북한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새터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라도 신변의 위험성은 여전히 높다. 부득이 중국을 방문할 경우에도 위험이 느껴지면 반드시 중국지역 한국 공관에 연락을 취해 지시를 따르는 것이 좋다.

(2) 북한에 있는 가족과 연락을 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남북교류협력법, 국가보안법 등에 저촉되므로 부득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3) 중국과 북한의 사법공조조약

2005년 8월, 중국과 북한은 민사·형사 사건 처리와 관련해 상호 협력하는 원칙을 담은 민·형사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했다. 탈북

자나 탈북 브로커의 강제 송환 문제도 형사 사범공조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3. 다단계

2002년 9월, 천신만고 끝에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넘어온 김 모(여·48)씨는 지난 2월 ‘솔깃한’ 제의를 받았다. 아이스크림 사업에 투자하면, 몇 달 안에 투자 원금과 아이스크림 기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올여름엔 해수욕장을 돌며 아이스크림 장사를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친구, 친척들에게 빌린 돈 2,500만 원을 모두 투자했다. 그러나 아이스크림회사는 유령회사였다.

(00일보 2005년 4월 26일자)

보도에 의하면 새터민의 60~70%가 다단계 판매에 빠진다고 한다.

(연합, 2006년 1월 26일자) 유독 새터민이 쉽게 다단계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새터민이라는 공감대가 깊게 형성되어 있다. 다단계는 사람을 많이 끌어들여야 이윤이 나기 때문에 새터민이라는 결속이 오히려 나쁜 점도 쉽게 공유하는 허점이 되기도 한다. 둘째,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남한에 와서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강한 반면 현실 감각은 부족한 상태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은 분별력을 흐리게 한다. 또 시장경제에 익숙하지 못하므로

이럴땐 불법다단계 의심

-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금품정수
- 지자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미등록
돈을 많이 준다고 선전
- 후원수당(하위판매원의 소개사업을 도와서 얻는 수익)비율을 미공개
- 반품·청약철회를 못하도록 구매시 포장용 뜯는 경우
- 물건을 허위·과장광고
- 감금·합숙을 통해 강압구매토록 하는 경우
- 판매공제조합에 가입했다고 다 합법은 아님

자료: 서울경제수사대·YVCA

물건의 가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에서 제시하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시장가격으로 오인하게 된다. 셋째, 초기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 남한 주민의 경우 이런 문제를 겪으면 주위의 현명한 사람들이 초기에 제압을 하지만 새터민의 경우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나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다.

4. 신용카드와 할부거래

(1) 신용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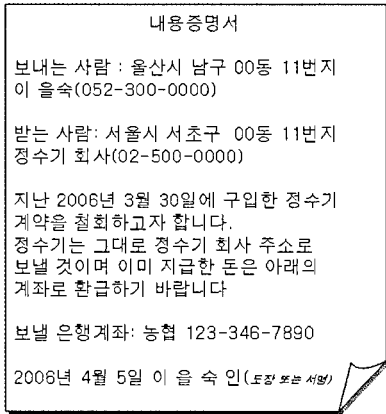
신용카드는 은행이나 카드회사가 개인이 쓴 돈을 먼저 갚고 나중에 이자와 함께 청구하는 것이다. 신용도에 따라 쓸 수 있는 금액이 다르며, 제 때에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높은 이자를 내는 등 불이익을 당한다.

신용카드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체크카드처럼 잔액한도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신청한 신용카드를 받으면 받는 즉시 뒷면에 서명을 하고, 내 이름을 도용해 만들어진 카드가 있다면 자필서명이 다름을 입증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2) 할부거래

할부거래는 물건을 한 번에 사기에는 금액이 클 때 나누어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단 물건을 먼저 받을 수 있으므로 총

동구매를 하기 쉽다. 이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을 활용할 수 있다. 보내고자 하는 내용을 적어 3부를 만들어서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상대방에 보내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것이다. 만 19세에 이르지 못

한 미성년자가 물건을 구입하면 부모나 대리인이 취소를 할 수 있다.

5. 보증제도

(1) 연대보증

연대보증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카드를 발급받을 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대신 돈을 갚을 사람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만일 연대보증을 섰다면 빌린 돈 전부를 갚아야 되며 상속도 된다. 연대보증을 설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2) 신원보증

신원보증은 주로 회사에 취직할 때 많이 이용된다. 일을 맡겼는데 회사에 손해를 많이 주면 그 손해를 대신 갚는 의미도 있다. 보통 2

년간 보증을 서며 연장도 가능하다. 신원보증 중 특별한 경우는 보증인의 재산상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재정보증이라고 한다. 새터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서 신원보증을 서 주기도 한다.

6.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차량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부담한다. 사고가 발생하고 당장 몸에 이상이 없더라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으며, 병원에 갈 처지가 못 된다면 상대방의 차번호와 신분증을 확인해 적어두어야 한다. 또 사고현장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사진을 찍어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될 수 있다. 목격자의 진술도 도움이 될 것이다.

7. 새터민과 범죄

(1) 언론에 보도된 새터민 범죄

필로폰을 밀수해 팔려던 혐의로 탈북자 4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마약·조직 범죄 수사부는 이 같은 혐의로 김모(42)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시가 2억89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44.7g과 엑스터시 666정을 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00일보 2006년 1월 1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7일 금은방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탈북자 이모(29·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5일 오전 7시30분께 임모(59)씨가 운영하는 대전 A상가 1층의 금은방에서 금반지 등 6,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122점을 훔친 혐의다.

(00일보 2005년 11월 17일)

이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탈북자 61살 박 모 씨와 함께 위장 결혼 사업에 뛰어들 건 지난해 10월.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에게 수백만원씩을 받고 위장 결혼을 시킨 뒤 입국을 도왔습니다. 같은 처지의 탈북자나 혼자 사는 이웃 주민들도 이들의 꼬임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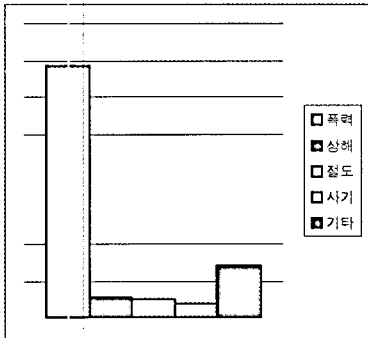
(00방송 2005년 5월 24일)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16일 탈북자 20명에게 국내 입국 경로 등을 알려주고 이들이 입국 후 정부로부터 받은 정착지원금 중 1억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폭행)로 김모(4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말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마치고 퇴소한 탈북자 이모(43·여)씨 집에 찾아가 “중국에 있을 때 약속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500만원을 뜯어내는 등 탈북자 20명으로부터 1인당 250만~1,000만원씩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00일보 2005년 3월 16일)

(2) 새터민 범죄의 특성

가. 새터민 범죄현황



새터민 범죄의 발생건수는 해마다 늘어나 2001년 55건에서 2004년의 경우 148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폭력이 343건(80.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상해(28건), 절도(24건), 사기(19건) 순이었다.(00일보 2005

년 10월 5일)

나. 새터민 범죄의 특성

① 폭력

새터민 범죄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이 폭력사건이다. 북한에서는 개인간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국가기관에 해결을 요청하기보다 자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가 공민 개개인의 분쟁에 일일이 관여하지도 않지만, 설사 국가기관에 요청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다 보니 제대군인이나 힘센 주변사람들을 동원하는 실정이며,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남한의 법은 폭력에 단호하다. 같은 폭력이라도 야간에 행사하거나 무리를 지어 위압을 과한다면 가중처벌된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원

만히 합의하더라도 합의금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분쟁을 사전에 방지한다면 더욱 좋겠지만, 만일 분쟁에 휩쓸리게 되더라도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법률적 구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② 상해

상해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기능에 장애를 주는 행위이다. 폭력은 피해자와 합의로 형벌을 피할 수 있지만, 상해는 합의를 하더라도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형벌이외에 치료비 같은 민사상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절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이득을 얻는 절도는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남한은 사유재산제를 취하고 있으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절도죄를 강경하게 처벌한다.

④ 사기

사기는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얻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아직 남한 실정에 어둡기도 하고, 거짓말을 분별하는 능력이 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에서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먼저 정착한 새터민이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새터민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많다. 사기죄는 상대방이 속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자를 높이 준다거나 하는 조건을 내걸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큰돈을 거래할 경우 여러 번 고민을 해보고, 이 사람이 과연 값을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⑤ 가정폭력

가족 사이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형법과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 아니라도 옆집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을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이혼한 배우자도 가정폭력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8. 알아두면 편리한 기관

☎가정폭력·아동학대신고 1366

☎범죄 112

☎화재·위급한 환자 119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소비자피해 : 녹색소비자연대 (02) 3273-7117

☎이혼, 기타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02)780-5688

☎새터민종합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02)591-3823

☎대한변호사회 (02)3475-4003 서울지방변호사회 (02)3476-6000 인천지방변호사회 (032)861-2170 수원지방변호사회 (031)216-0646 춘천지방변호사회 (033)243-8321 청주지방변호사회 (043)284-9683 대전지방변호사회 (042)472-3358 대구지방변호사회 (053)753-1900 부산지방변호사회 (051)506-8500 울산지방변호사회 (052)267-6633 창원지방변호사회 (055)266-0606 광주지방변호사회 (062)222-0430 전주지방변호사회 (063)252-7710 제주지방변호사회 (064)751-1402

제10장

가리 및 지역사회 이해

1. 대한민국 일반현황

2. 시도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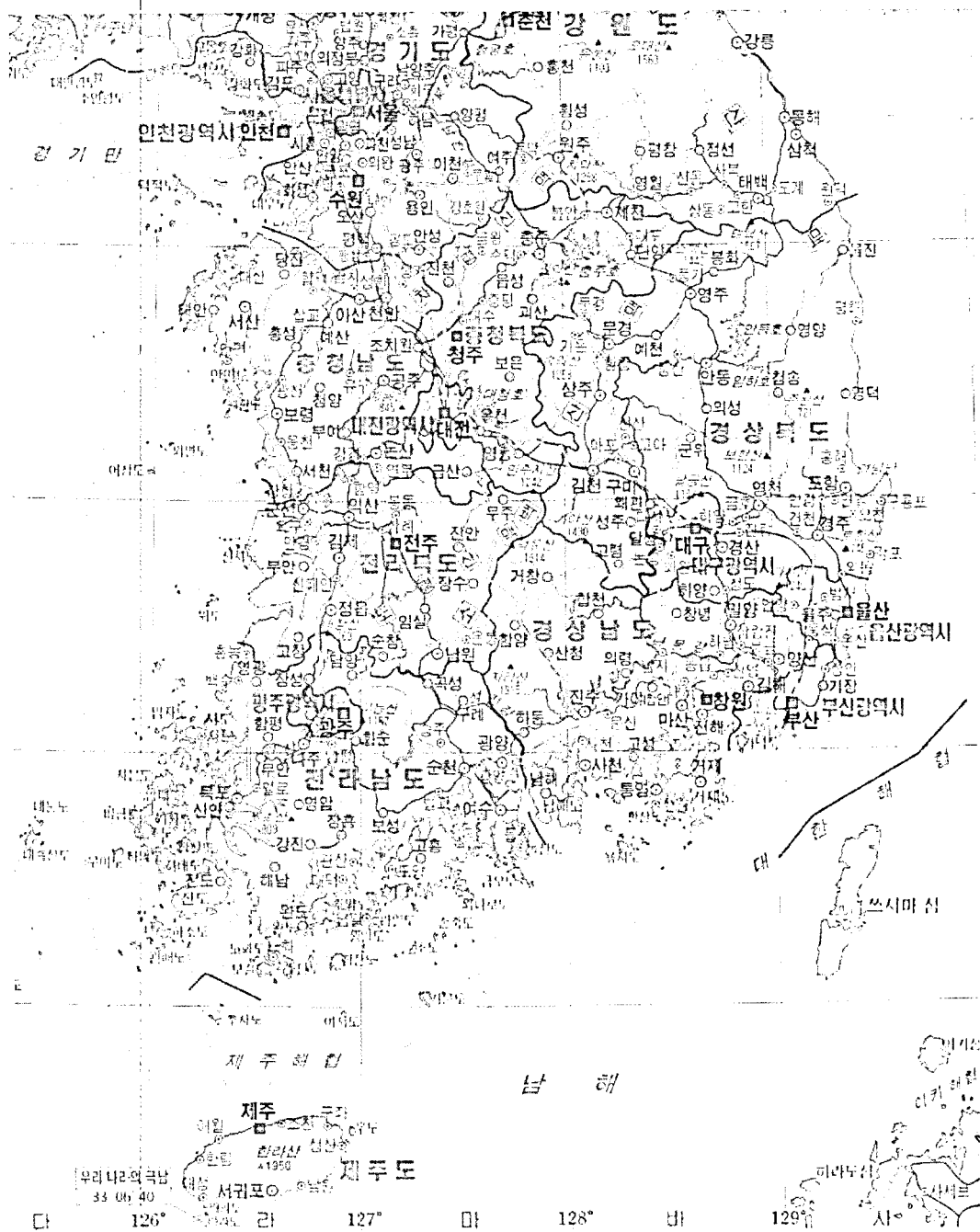
1. 대한민국(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 일반현황

- 위치 : 아시아 대륙 동쪽 끝
- 면적 : 9만 9,461km²
- 인구 : 4,728만명¹⁾
- 인구밀도 : 474명/km²²⁾
- 종교 :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 천도교 등³⁾
- 1인당 국민총생산 : 16,306달러(2005)

1) 통계청, 2006. 5. 제17차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임, 2005년 11.1일 현재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4,728만명(남자는 23,624천명, 여자는 23,655천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31천명 많음)으로 2000년(4,614만명)에 비해 114만명(2.5%) 증가, 연평균 0.5% 증가함. 이는 50년 전인 1955년(2,153만명)보다 2.2배 증가한 인원이 다. 2005년 기준 세계인구(64억6천5백만명) 중에서 아시아에 거주하는 인구는 39억5백만명으로 약 60.4%를 차지하며, 우리나라는 0.73%이다.

2) 우리나라는 인구규모로 보면 세계 26위이며, 인구밀도는 474명/km²로 방글라데시, 대만에 이어 세계 3번째의 인구조밀 국가이다. 서울시 인구는 982만명이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인구는 2,27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48.2%를 차지하며, 2000년보다 141만명(6.6%) 증가되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인구의 22.0%(1,042만명)로 가장 많으며, 서울(20.8%), 부산(7.5%), 경남(6.5%) 순이다. 234개 시·군·구 단위별로 보면 인구 10만명 이상인 곳은 56.8%(133개)이며, 수원시의 인구(104만명)가 가장 많은데, 지난 5년간 경기도 용인시의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30만4천명)하였으며, 서울시 송파구의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5만5천명)하였다. 시군구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양천구(27,256명/km²)이며,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 인제군(19명/km²)임. km²당 인구를 동일간격으로 배치할 경우의 개인간 거리를 나타내는 인구 접근도는 45.9m로 2000년(46.4m)보다 0.5m 가까워졌다. 16개 시·도 중 경기도의 인구(1,042만명)가 22.0%로 가장 많다.

3) 2005. 11. 1일 현재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구는 24,971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53.1%이며, 1995년에 비해 2.4%p 증가하였다. 종교유형별 분포를 보면 총인구 중 불교인구가 22.8%로 가장 많고 개신교(기독교) 18.3%, 천주교(기독교) 10.9%, 원불교 0.3%, 유교 0.2% 순으로 나타났다. 3대 종교 중 불교와 개신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하고, 천주교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지도⁴⁾

4) 초등학교 사회과부도(교육인적자원부, 2002) 참조

2. 시도별 개요⁵⁾

(1) 서울특별시(<http://www.seoul.go.kr>)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가장 규모가 큰 도시로, 25개의 구⁶⁾로 나누어져 있다. 한반도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한강 하류에 위치하며, 약 1,000만 명이 살고 있다. 문화·예술·언론·정치·교육·경제·교통 등의 중심 도시이며, 정도(定都) 600년이 넘은 유서 깊은 도시로, 경복궁, 창덕궁 등의 문화 유적과 올림픽 공원, 서울타워, 63빌딩 등 많은 관광 명소가 있다.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로 뻗어 나가는 국제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다.

(2) 경기도(京畿道-<http://portal.gg.go.kr>)

경기도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http://www.incheon.go.kr>)를 뺀, 21개의 시와 10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약 천만 명이 살고 있으며, 도청은 수원시⁷⁾에 있다. 북쪽은 북한과 맞닿아 있으며, 유기, 도자기, 화문석 등이 유명하다. 인천광역시는 국제적인

5) 북한의 행정구역은 1945년 해방 당시 6 개 도(道), 9 개 시(市), 89 개 군(郡), 810 개 읍(邑)·면(面)이 있었으나, 그 후 50여 회의 행정 구역 개편을 실시해서 지금은 평양 특별시와 남포·개성 직할시 9 개 도, 25 개 시, 39 개 구역(區域), 147 개 군, 147 읍과 리(里)·동(洞)·노동자구 등으로 편성됐다. 북한은 종전의 4 단계 행정 구역 체계(도, 시·군, 읍·면, 리·동)에서 1952년에 면 단위를 폐지, 행정 구역 체계를 3 단계(도, 시·군·구역, 읍·리·동·노동자구)로 변경했다. 북한의 행정 구역 체계 중 우리나라와 다른 것으로는 구역과 노동자구를 들 수 있는데, 구역은 도시 행정 구역 체계로서 우리나라의 구(區)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북한의 상황을 배제한 남한의 상황을 설명하기로 한다.

6)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중랑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7) 수원시는 100만명을 초과하여 전체 시(77개)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시가 되었다(1,044천명, 2005.11).

시설을 갖춘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 도시로, 석유, 기계, 화학 및 경공업이 발달하였다.

강원도와 이어진 동쪽은 산이 많지만 바다와 가까운 서쪽으로 갈수록 평탄하다. 북한강이나 남한강이 경기도 전체를 지나기 때문에 옛날부터 농사짓기에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흙이 좋아서 좋은 쌀과 도자기가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하다. 우유, 축산, 경공업, 제조업 등이 유명하다.

(3) 충청북도(忠淸北道-<http://www.cb21.net>)

충청북도는 3개의 시와 8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약 140만 명이 살고 있으며, 도청은 청주시(<http://www.cjcity.net>)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바다와 만나지 않는 유일한 내륙도로 속리산 국립공원과 단양팔경, 시멘트 공업으로 유명하다.

충청북도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차령산맥이 만나는 곳이라 산은 많지만 평야는 별로 없다. 겨울에 추운 것도 산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에 흐르는 맑은 물 덕분에 밭농사가 잘 되는 곳이기도 하다. 채소와 과일, 관광업 등이 유명하다.

(4) 충청남도(忠淸南道-<http://www.chungnam.net>)

충청남도는 대전광역시(<http://www.metro.daejeon.kr>)를 뺀, 6개의 시와 9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약 180만 명이 살고 있으며, 도청은 대전광역시에 있다. 백제의 옛 도읍지인 공주와 부여가 있으며, 담배, 인삼, 모시로 유명하다. 대전광역시에는 우리나라의

첨단 과학 분야를 이끌어 갈 대규모 연구 단지가 있으며, 약 140만 명이 살고 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온화한 날씨가 특징인 충청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형을 이루고 있어 1,000미터를 넘는 산이 하나도 없고 평균 높이가 100미터에 불과하다. 서해로 흐르는 금강이나 삼교천 주변에는 넓은 평야가 있어서 논농사를 많이 짓는다. 이러한 이유로 곡물생산 2위(2003), 중화학공업, 농업물 생산 3위(2003)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5) 강원도(江原道-<http://www.provin.gangwon.kr>)

한국 중부지방 동쪽에 있는 도로, 면적 1만 6873km²이고 인구는 약 150만 명이다. 동쪽은 동해, 서쪽은 경기도, 남쪽은 경상북도·충청북도, 북쪽은 북한의 강원도와 접해 있다. 도청은 춘천시(<http://www.chuncheon.go.kr>)에 소재해 있으며, 7개의 시와 11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고, 각종 광물과 탄광이 많이 있다.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많이 있으며, 동쪽 바다에는 오징어, 명태 등의 좋은 어장을 이루고 있다. 아름다운 설악산과 해수욕장, 감자, 옥수수로 유명하다.

강원도는 태백산맥이 동해를 따라 뻗어 있기 때문에 동쪽은 가파르나 서쪽은 완만하다. 태백산맥 서쪽은 높기는 하나 평평해서 넓은 풀밭에 소를 키우는 목장이 많다. 또 산이 많아 감자나 옥수수 같은 밭농사들을 짓고, 산이 높은 곳은 한여름에도 시원해서 서늘한 날씨에 잘 자라는 배추와 무를 많이 심는다. 농특용작물, 수산물, 관광업으로 유명하다.

(6) 전라북도(全羅北道-<http://www.jeonbuk.go.kr>)

전라북도는 6개의 시와 8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약 180만 명이 살고 있으며, 도청은 전주시(<http://www.jeonju.go.kr>)에 있다. 가장 넓은 평야인 호남평야가 있어, 논농사와 밭농사가 발달하였고, 한지, 부채, 고추장(순창)으로 유명하다.

전라북도는 서쪽과 동쪽이 서로 다른데, 서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호남평야가 있다. 사철 따뜻한 기후가 특징인데, 그래서 쌀과 같은 곡식이 잘 자란다. 동쪽은 소백산맥이 있어서 높고 험한데, 기후 변화가 심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이라 이 곳에서는 좋은 나무가 많이 자란다. 전통문화예술과 경공업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7) 전라남도(全羅南道-<http://www.jeonnam.go.kr>)⁷⁾

전라남도는 광주광역시(<http://www.gwangju.go.kr>)를 뺀, 6개의 시와 18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약 180만 명이 살고 있으며, 도청은 무안군에 있다. 산맥이 적고 평야가 많아 우리나라의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남쪽과 서쪽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많이 있다. 특히 남쪽 바다는 경치가 무척 아름다워,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광주광역시는 약 140만 명이 살고 있으며, 호남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로 자동차, 타이어, 전자공업이 발달하였다. 경공업과 식료품으로도 유명하다.

지리산, 무등산 같은 높은 산이 있고, 영산강 주변에는 나주평야처럼

7) 호남(湖南) :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럼 넓은 평야도 있다. 경상남도와 같은 남해안 지방이므로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온다. 넓은 평야와 날씨 덕분에 예로부터 쌀이 많이 나기로 유명하다. 이런 이유로 전라남도는 곡물생산 1위(2003)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 식료품, 중공업, 석유화학 등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8) 경상북도(慶尙北道-<http://www.gyeongbuk.go.kr>)

경상북도는 대구광역시(<http://www.daegu.go.kr>)를 뺀, 10개의 시와 13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약 260만 명이 살고 있으며, 도청은 대구광역시에 있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농경문화가 발달하였고, 동쪽 바다의 울릉도와 독도 가까이에 좋은 어장이 있으며, 국립공원인 경주에는 빛나는 문화 유적들이 많이 있다. 또한 포항과 구미를 중심으로 국내 최대 내륙 공업 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대구광역시에는 약 25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섬유공업 및 염색업이 발달하였고, 사과로도 유명하다.

낙동강이 북에서 남으로 길게 흐르고 높다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감싸고 있다. 특히 대구 주변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서 더운 공기가 밖으로 잘 빠져 나가지 못해 여름엔 특히 무덥고 비도 적게 내리므로 이런 환경에서 자란 과일은 달고 맛이 좋다. 과일생산 1위(2003)의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전자 및 철강공업이 발달해 있다.

(9) 경상남도(慶尙南道-<http://www.gyeongnam.go.kr>)⁸⁾

경상남도는 부산광역시(www.busan.go.kr)와 울산광역시(www.ulsan.go.kr)를 뺀, 10개의 시와 10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약 3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도청은 창원시(<http://www.changwon.go.kr>)에 있다. 남쪽 바다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많이 있으며, 경치가 아름다워, 한려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부산광역시는 약 350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로,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도시이다. 울산광역시는 석유화학·자동차·중공업·조선공업이 발달한 공업도시로 약 100만 명이 살고 있다.

밀양에서 울산까지 이어진 일곱 개의 산이 유럽의 알프스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영남 알프스라고도 불린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산들이 막아 주고 남쪽 해안으로는 따뜻한 난류가 흐르기에 날씨가 따뜻하고 비도 많이 내리는 편이다 경상남도를 가로질러 낙동강이 흐르고 강 주변의 기름진 땅에서는 논농사가 잘 된다.

(10) 제주도(濟州道-<http://www.jeju.go.kr>)

제주도는 2개의 시와 2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약 53만 명이 살고 있으며, 도청은 제주시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으로,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곳으로 비가 자주 오고 사철 따뜻해서 과일들이 잘 자란다. 감귤과 유자가 제주도의 대표

8) 영남(嶺南) : 조령(鳥嶺) 남쪽이라는 뜻에서, 경상남북도를 이르는 말

적인 과일이다. 과일생산 2위(2003)의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관광업으로도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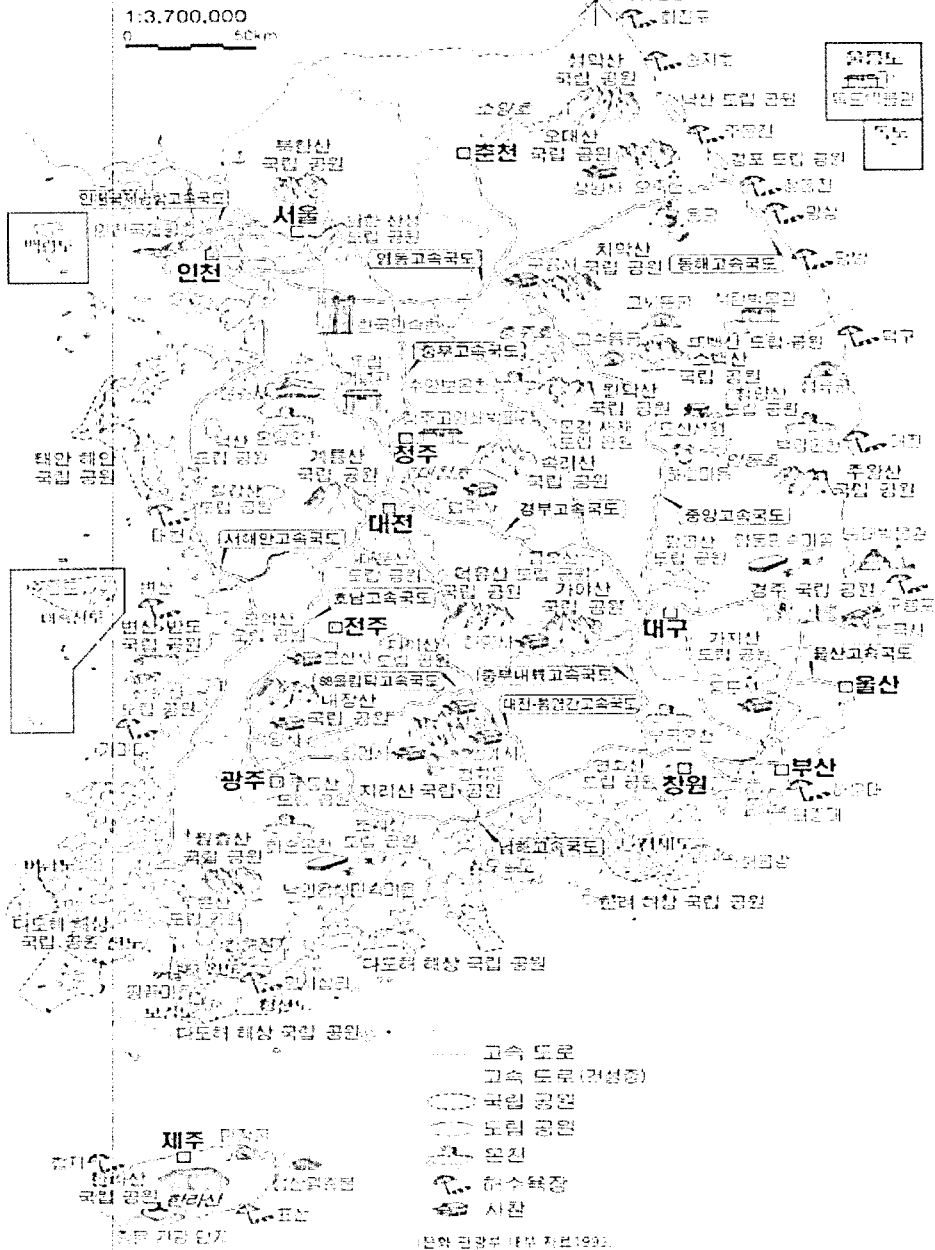
지역별 인구 규모

(단위:천명)

총인구	수도권	특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47,279	22,767	22,249	9,820	3,524	2,465	2,531	1,418	1,443	1,049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415	1,465	1,460	1,889	1,784	1,820	2,608	3,056	532	

*(통계청자료, 2005.11.)

9 고속 도로와 관광 자원



고속도로와 관광자원⁹⁾

9) 교육인적자원부, 앞의 책 참조.

집 필 자

제1장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	고성호 통일교육원 교수
제2장 선거제도의 이해	채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강사
제3장 시장경제의 이해(시장경제)	송경석 호서대학교 이(e)비즈니스학과 교수
시장경제의 이해(생활경제)	채경희 하나원 교육 담당
시장경제의 이해(생활금융)	채경희 "
제4장 한국사	이상선 하나원 교육 담당
제5장 통일노력과 통일한국의 미래	정부락 통일교육원 명예교수
제6장 관련국가의 역사 이해	김선옥 안의고등학교 교사
제7장 남한문화의 이해	한정미 하나원 교육 담당, 문학박사
제8장 이성, 결혼, 가족	김엘리 성균관대학교 여성학 강사
제9장 생활법률	손행선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연구원
제10장 지리 및 지역사회 이해	장병민 하나원 교육 담당

감 수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편 집 하나원교재편집위원회

이충원 하나원장
원기선 교육기획팀장
서상덕 교육훈련1팀장
김현아/김은경 심리상담사
이상선 교육 담당
한정미 교육 담당
김임태/전연숙 진로지도 담당
채경희 교육 담당
박용석 교육기획 담당

새로운 사회생활

발행처 통일부 하나원 교육기획팀
경기도 안성시 안성우체국 사서함 18호 / (031)670-9321

발행일 2007년 1월 일

인쇄 양동문화사
서울시 중구 인현동 1가 48-1 / (02)2266-0892

비매품

